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1 No.1

UNINOMIC REVIEW

Vol.1 No.1

목 차

아세안과 한국의 생존전략

아세안 경제의 변화와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미래 곽성일	7
캄보디아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과 우리의 기회 권경무	19
아세안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박번순	37
필리핀의 두테르테노믹스와 한국의 협력 방향 신민금	51
한-라오스 수력 자원 개발 협력 방안 신현준	67
신남방정책과 한국-말레이시아의 동반자적 관계, 회고와 전망 이경찬	81
아세안의 대내적, 대외적 생존 전략과 한국 이재현	93
미얀마와 한국의 상생과 협력 장준영	107
베트남 경제의 생존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 정재완	119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 정재완	131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ailand and South Korea Kiattipoom Kiatkawsin	143

세종연구원

UNINOMIC REVIEW

Vol.1 No.1

아세안과 한국의 생존전략

아세안 경제의 변화와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미래

곽성일*

1. 서론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이라 칭함)을 지칭하는 말로 동남아 지역 10개국의 모임이다. 종교와 인종이 다르고 소득수준과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의 모임으로 외부적 충격에 대한 반응정도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이 아세안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완전한 경제통합 달성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아세안 스스로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계수입 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중국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이 가치사슬을 가장 활발히 구축하고 있는 아세안(ASEAN)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권소사업사무국장 및 신남방경제실 실장
前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비 시장조치 강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중국, 미국 등 일부 시장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다. 수출시장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아세안 지역의 가치는 한국 경제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위기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09년 이후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지에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우리 대기업이 먼저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아세안 지역 투자는 동남아의 수출품목 다각화와 소득증가에 기여하였다. 소득증가는 아세안 각국 노동자가 인권을 인식하는 동기로도 작용했다. 또한 2015년 말 아세안지역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투자 매력도 한층 높아졌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 중심의 많은 투자활동을 통해 성과를 실현해 왔지만 사실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전세계 투자액의 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협력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의 경제 현황 및 성장동력을 2절에서 다루고, 이어서 3절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2. 아세안의 경제 현황 및 평가

가. 아세안의 경제 현황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침체의 수렁을 경험한 아세안은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아세안 6의 평균 성장률은 외환 위기 이후인 1998년 -7.9%라는 기록적인 음의 성장률을 경험했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 전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0.1%였지만 아세안 6의 성장률은 2.2%를 유지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과잉투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과도한 채무조정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202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에 아세안 경제는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해 최근 5% 전후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비록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세안의 존재가치가 잠시 낮아졌지만, 인구 6.5억 명, 역내 GDP 2.5조 달러를 보유한 거대 경제권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아세안에 대한 재평가 요구는 당연한 귀결이다.

나. 아세안의 성장 동력과 평가

아세안은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배경은 개별 국가가 가지는 각각의 장점과 특성을 서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 아래서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성장 동력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성장 동력을 유형화하면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서 경제 및 산업 특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다. ASEAN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는 최하위 캄보디아부터 최상위 싱가포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중소득국은 인구 동태적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증가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인구 보너스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노동 집약형 산업에 비교 우위를 보유한다.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고소득 국가는 고도로 발달한 인프라와 법 제도를 강점으로 지역 총괄 및 연구 개발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아세안 전체로 보았을 때 이처럼 상이한 비교우위 산업을 가진 국가가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면 아세안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인구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증가를 의미하며, 내수의 팽창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셋째, 풍부한 천연자원을 아세안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필리핀의 천연가스, 미얀마의 리튬 등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다. 넷째, 인도차이나 지역의 지리적 연계성(connectivity)이 개선되면서 현재 육로로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 연계성 개선을 위해 아세안은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Post-2015 Agenda on Connectivity”를 발표하고 2025년

까지 아세안 연계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외 원조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동남아가 아세안에 공여한 원조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AidData를 이용한 추정에 따르면 2012년 8억 8천만 달러의 양허성 원조를 동남아에 공여하였다. 사실 중국은 개발 협력 차원의 원조 그 자체보다는 원조와 투자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의 확대를 아세안에 희망하고 있다. 공공차관, 상업차관, 합작 투자 등을 혼합하여 거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아세안 지역 성장동력이 잠재력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주는 실질적인 계기로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아세안 스스로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한 성과 중의 하나인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 따라 2015년에 관세철폐가 대체로 완료되었고, 그 효과는 역내 무역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세철폐를 포함한 AFTA를 토대로 그 이외의 통합을 위해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틀 안에서 아세안 10개국이 노력 중이다. 아세안의 통합 속도는 유럽연합(EU)에 비해 더디지만, 서둘러 통합한 EU는 현재 Brexit을 경험하면서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아세안 통합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보유한 성장 동력을 고려할 때 한동안 아세안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ASEAN 10개국의 평균성장률은 5% 내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대 중반에는 전년 대비 4~5% 정도에 머물 전망이므로, 머지않아 아세안이 세계의 새로운 '성장중심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가. 한-아세안 교역 현황과 특징

한국은 2009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비해 수출의 변동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의 변동성이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한국 교역 자료를 활용해 1997년 이후 수입증가율의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를 산출하면, 각각 19.1과 2.74를 기록한 반면, 수입증가율의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는 각각 12.7과 1.72로 나타나, 수입증가율보다 수출증가율이 변동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수출이 외부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성장세 하락의 원인을 경기 순환적 요인(유가하락, 신흥국 경기부진 등)보다는 구조적 측면(수입 수요 감소, 수출경쟁력 하락 등)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와 중국의 수입수요가 소득 변화에 둔감해졌다. 즉 중국의 소득이 증가해도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 나타난 교역 둔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2012년부터 총교역의 증가세가 하락하기 시작해 2014년 37조 6천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교역액은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전년대비 교역증가율이 0.9%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12.4%, -2.8%로 음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세안의 총교역 규모도 2014년 2조 5,22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10.3%, 2016년 -0.5%를 기록했다. 아세안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전세계 총교역의 감소보다 작다. 한편 한국의 총교역액도 2014년 1조 98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5년 -12.3%, 2016년 -6.4%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에서도 목격된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3.1%, -0.5%로 음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교역 규모의 전세계적인 감소 속에서도 한국의 대아세안 간 교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세계 교역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세안은 일정부분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아세안 간 이루어진 교역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아세안 수출 비중 증가이다. 한국의 수출 가운데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4%에서 2016년 15.2%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20년간 최고치이다. 2007년 대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1.9배 증가하였는데, 대중국 1.5배, 대미국 1.5배, 대일본 0.9배, 대EU 0.9 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아세안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품목이 다각화되었다. 삼성, LG 등 한국 다국적 대기업이 2008년 이후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새롭게 조성된 생산기지에 중간재와 자본재로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전자기구 부품 등을 수출하면서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품목이 다각화되었다.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결국 한국과 아세안 간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규모의 경제, 소비의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해 양국 소비자의 후생을 높였다. 셋째, 한국 제품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이 감소함에도, 아세안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상품의 비중은 증가했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5%에서 증가

하기 시작해 2010년 이후 6%가 넘는 점유율을 계속 유지 중이다. 일본, EU, 미국은 1997년 각각 20.0%, 14.9%, 15.4%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넷째, 한국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수직 분화한 결과 양 지역 간 보완적 교역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품목을 22개 부(Section)로 분류해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진 품목을 정리하면, 2007년 이후 7개 품목이 산업내 무역을 지속하였고, 5개 품목은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산업간 무역으로 나타난 품목은 7개, 전환한 품목은 2개 산업뿐이었다. 다섯째, 한국의 아세안의 대세계 수출품목의 다각화와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와 자본재를 한국에서 조달해 최종재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 과거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섬유류 수출이 대부분이었던 아세안의 수출품목 구성에서 한국 대기업의 투자 진출이 본격화된 2009년 이후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나. 한-아세안 투자 현황과 특징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베트남이 한-아세안 FTA의 발효와 때를 같이해 WTO라는 다자체계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향후 경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 투자가 급증하였다. 또한 2009년에 한-아세안 FTA 투자 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었고, 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이행 중이다. 한-아세안 투자협정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투자의 일반적 대응, 투명성, 송금, 수용 및 보상 등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아세안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감소했지만, 그 이듬해인 2010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 대기업은 투자금액과 투자 건수 모두 증가했는데, 투자금액은 부침이 심한 반면, 투자건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대기업은 대아세안 지역 투자 결정 의향을 낮추기보다는 투자 건당 투자 금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즉 추가에 대해 더욱 신중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업이 아세안 지역에 생산네트워크 구축 의지가 높아지면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재편되고 있다.

투자의 재편은 한국계 다국적 대기업이 현지에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현지 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LG 등 전기·전자

제조 대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베트남 토종 부품·소재 기업은 부족한 기술력으로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의 협력업체가 중간재 납품을 위해 다수 동반진출하면서 지역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6년 한국의 대아세안 업종별 투자금액 비중은 제조업 45.2, 서비스업 41.6%, 업종별 투자 신고건수 비중은 제조업 53.9%, 서비스업 34.3%를 차지했다. 제조업으로의 투자는 2008년과 2009년 투자금액 및 신고건수 기준 모두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 중이다. 제조업으로의 투자가 빠르게 회복된 이유는 아세안 스스로 역내에 결성한 경제통합체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메가 FTA 참여로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2000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대부분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업 투자는 주로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집중돼 전체 서비스업 투자 가운데 69.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목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출촉진, 저임활용 목적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았는데, 중반 이후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목적의 대아세안 투자금액 비중은 각각 12.5%, 12.4%로 2006년 이전에 약 30~70% 비중을 차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직접 투자 비중은 1997년 8.1%, 1999년 1.9%로 낮았으나, 2007년 52.1%를 차지한 이후 투자 목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목적이 변화한 원인은 아세안 시장의 성장과 한국 대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아세안 시장이 성장하면서 과거에 상품을 단순히 수출·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생산법인 혹은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아세안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현지 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동남아 진출을 고려할 때 기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간재 판매목적도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세안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다. 산업

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유입 총액 중 아세안의 비중이 6.2%였으나 2016년에는 11.5%로 증가하였다. 국별로 싱가포르의 비중이 높으면 산업별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년 동안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 금액의 63.9%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가 28.1%, 인도네시아가 4.2%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의 대한국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부펀드와 금융업 종사기업의 투자 외에도 중국 자금이 싱가포르를 우회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투자 신고 건수가 10% 후반에서 20% 초반으로 비중이 낮아졌으며, 투자금액도 2010년 50.9%를 기록한 이후 그 비중이 2016년 24.1%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 한-아세안 서비스 및 인력 교류 현황과 특징

아세안은 2002년부터 미국을 이어 한국의 제2대 서비스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총서비스교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5.8%, 2010년 16.6%, 2013년 18.3%, 2015년 20.4%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서비스 교역 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 수출입 가운데 운송 서비스 교역 비중이 2015년 수출 35.6%, 수입 30.7%로 가장 높으나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5년 서비스 수출의 경우 운송 서비스 외 기타사업서비스, 여행 서비스, 기타서비스의 비중이 각각 18.3%, 10.0%, 13.0%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서비스 수입은 운송서비스 다음으로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가 각각 27.7%, 20.0%, 10.7%를 차지했다.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및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산업 인력 연수 등 사업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전체 한국인 출국자 가운데 25% 이상이 아세안 방문자였고, 2013년부터는 아세안 방문 한국인 수가 중국 방문 한국인 수를 추월하였다. 한국관광통계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07년 331만 명에서 2016년 55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입국자 수는 2007년 76만 명(전체 해외방문객의 11.9%)에서 2016년 222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아세안 방문객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방문객의 다각화 측면에서 아세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간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체류 아세안 국적인의 비중은 2017년 3월 현재 전체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27.5%이다.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베트남인

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캄보디아, 미얀마의 산업 훈련 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4.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평가 및 중장기 비전

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 의의와 통상환경의 변화

2015년 12월 아세안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1967년에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창설된 아세안이 2015년 12월 그 성격을 달리해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협력을 중요시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한 것이다. 출범의 이면을 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되려는 아세안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개방형 공동체이다.

비록 2015년 말의 통합이 실질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통합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회원국 간 제도적 통일성을 완비하고, 마련된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의 조율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아세안 싱글 윈도와 같은 무역 원활화 조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조치의 실질적 이행은 투자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직접투자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아세안으로의 투자유입액이 중국으로의 투자유입액보다 크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완결된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점진적으로 완결된 경제공동체로 진화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선제적으로 아세안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역내 경제환경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개정 및 조정되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부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인구 2.5억 명, GDP 6.5조 달러의 세계 7대 경제권의 형성과 중산층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평가 및 중장기 비전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포함한 경제협력이 강화되었으며,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양 지역 간 교역을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익률 하락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아세안으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현지 수요를 확대했고, 한국 기업의 최종재 생산은 아세안은 수출품목을 다각화 및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은 투자를 통해 강화되었고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기 보다는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한국 대기업이 이룩한 경제협력의 성과와는 구별되는 다른 차원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아세안은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사례와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업 가능성의 제고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아세안 각국의 노력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와 정책변화에 힘들어하는 한국 중소기업에도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은 세계 경제로의 개방을 의미한다. 다국적 대기업이 앞다투어 아세안으로 진출하고 있고, 아세안에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즉 AEC의 출범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초를 두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 다른 차원의 진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회를 우리 기업이 누리기 위해서는 AEC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2015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AEC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22%에 그쳤다.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 및 합병(M&A), 또는 지분투자 등을 통해 역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현지 토종 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함께 아세안 지역은 중국의 뒤를 이은 제2의 생산기지가 되었다.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 지역의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은 향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전망이며,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지역 경제협력의 증장기 비전을 ‘한-아세안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으로 삼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인력의 창업 진출 확대와 우리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년인력

의 창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사업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의 투자가 아니라 소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성공한 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면 제 2, 제3의 성공사례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아세안 기업 가운데 협업이 가능한 기업체 리스트를 작성해 우리 기업에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아세안 진출 대기업과 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다국적 대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과 한국과의 보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은 포용적 관점에서 아세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ASEAN is a group of 10 countries with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In order to utilize the diversity as a growth engine, each country should strive to form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is study examined the outcome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Korea. The expansion of Korea's direct investment in ASEAN ha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mplementary economic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as well as has made it the second production base replacing China.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regions, we have to find a wa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local SMEs of ASEAN and Korean SMEs, and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MEs located in Korea and Korean SMEs located in ASEAN.

캄보디아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과 우리의 기회

권경무*

서문

지난 20년간 캄보디아 경제는 7%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민소득은 2016년 20억 달러를 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15년 \$1,000을 넘어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을 졸업하여 저소득중간개발도상국(Lower Middle Income Developing Country)으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 각국 투자자들은 캄보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23억 달러를 캄보디아에 투자하여 누적 기준 국별 2위를 점하고 있으며, 원조액도 6.5억달러로 양자원조국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도 연간 4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등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 現 코트라 캄보디아 프놈펜 관장
○ 2011. Alto University MBA 졸
○ 2011-2014 KOTRA 실리콘밸리 IT팀장
○ 2015-2016 KOTRA 중견기업지원팀장
○ 2016-현재 KOTRA 프놈펜무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제조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고 기술력부족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외국의 대규모 글로벌체인을 활용한 투자를 찾을 수 없지만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활동중이다. 한-캄 재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주요국들은 어떤 분야에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기업들의 진출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기업들의 투자진출시 이들 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단계와 분야가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각국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해외시장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진출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원한다.

□ 미국기업 진출현황

미국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약 100백만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 GDP의 0.5%에 해당된다. Chevron은 캄보디아에서 석유시추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1995년부터 Caltex가 진출하여 으로는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캄보디아 2대 석유유통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oca-Cola(투자회사는 Bottling Investment Group)도 1993년에 진출하여 콜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1억달러를 투자하여 최신 콜라 및 음료공장을 건설하였다. 동사는 캄보디아 유일의 음료용 알루미늄 캔을 제조하는 Crown Beverage Cans Cambodia Limited,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Moster Energy Company와도 협력 및 동반진출함은 물론 캄보디아의 높은 전기료를 감안하여 효율적 전기사용시설을 갖추고 진출하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CBREGroup은 2007년 캄보디아 건설붐 시기에 진출하여 단순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및 컨설팅, 가치평가 및 부동산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캄보디아의 주요 부동산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캔디제조업체인 American Licorice, 보험업체인 Prudential, 바이오 가스 발전

업체인 W2E Siang Phong, 다이아몬드 가공 Tiffany & Co, Dupont, Otis Elevator, Avery Dennison RBIS 등 2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미국기업의 제품과 브랜드 등을 프랜차이즈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으며 대부분 캄보디아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농기계 업체인 John Deere(200마력 이상은 1위), 자동차 업체인 Ford, GM, Chevy, 오토바이 업체인 Harley-Davidson, Gallo Wines, Swensens's Ice Cream, Dairy Queen, Krispy Kreme, Carl Jr's, Cold Stone Creamery, Microsoft, Kohler, Domino Pizza, Burger King, Hard Rock Cafe, Coffee Bean and Tea Leaf, Starbucks Coffee 등이 진출해 있다.(www.amchamcambodia.net)

미국기업들의 특징은 소매분야에 강하며, 상공회의소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정부투자기관인 OPIC의 경우 미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시 투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캄보디아 최대 금융기관인 ACLEDA 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연간 2억달러 내외로 소규모이며 자동차, 기계, 의약품과 영상물 등이며 수입은 10배인 20억불 내외로 주로 섬유(의류), 신발, 플라스틱 생활용품, 가죽제품과 목재 및 가구 등이다. 미국의 캄보디아 원조는 연간 60~100백만달러 내외로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기초의료 및 환경(AIDS 퇴치, 결핵 및 말라리아 예방, 환경보호)과 지방 생활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캄보디아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도 활동하고 있다.(www.usaid.gov)

□ 유럽기업 진출현황

캄보디아의 경우 근대에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아 고위급의 경우 프랑스어와 프랑스 유학이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프랑스업체 중심의 유럽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세계적인 석유기업은 Total은 1993년에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현재 약 40여개의 주유소와 함께 다양한 오일(가솔린, 경유, 등유, 항공유, 윤활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식품매장, 술라 및 LPG 판매업도 하고 있다.

1995년 프랑스 Vinci의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Societe Concessionnaire des l'Aeroports 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은 Muhibbah Masterron사와 함께 프놈펜 공항 등 캄보디아 3개의 국제공항 설립과 운영에 대해 25년간 독점계약을 하였고 당시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인 Berger Group에서 추가적인 항공투자 제안에 따라 프놈펜공항은 2015년 추가 투자를 통해 Cambodia Airport Management Services사가 독점 운영하고 있다.

Forte는 1999년에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화재 및 손해배상 보험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물류분야에 ASI, 의약분야에 Sanofi, 은행분야에 BRED 등 다양한 분야에 프랑스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유럽기업들은 캄보디아에 대해 LDC(최빈개발도국) 지위를 부여하여 무기와 마약이외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의 3대 국제 GI(Geographical Identification) 농산품인 Kampot Pepper도 프랑스인에 의해 개발되어 주로 유럽으로 수출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Bosch 등을 비롯한 자동차(Automotive Asia)가 가장 활발히 진출한 분야이며, 독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FW, 의류판매업체인 Boss, 의약품 판매 Bayer 등이 진출해 있다.

EU에서는 캄보디아를 최빈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로 지정하여 무기와 마약류를 제외하고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캄보디아 최대 제조산업인 섬유제품의 40% 이상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유럽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2016년 6억유로 정도로 기계와 운송장비, 농산식품이 대부분으로 수출 증가율이 연간 5% 내외에 불과하다. 반면 캄보디아의 유럽수출은 2016년 45억유로 내외로 연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며 섬유(의류) 및 신발(90%), 농산품(후추)과 가죽(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유럽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지난 20년간 18억유로 내외로 프랑스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다. EU의 대 캄보디아 원조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연간 60백만달러 내외로 이중 프랑스의 원조가 대부분(8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원조는 환경과 지방생활개선, 농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ec.europa.eu)

유럽기업들은 대부분 EUROCHAM 회원사들로 약 200개사가 진출해 있다.(www.eurocham-

cambodia.org)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별도의 상공회의소를 운영중에 있지만 유럽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회원할인 및 공동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유럽상공회의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 일본기업 진출현황

일본은 아세안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로서 캄보디아에도 약 200여개사가 진출해 있다. 가장 큰 투자업체는 AEON Shopping Mall로서 프놈펜에 2014년 대규모 쇼핑센터를 오픈하였으며 2018년 Tul Kok 지역에 두 번째 쇼핑몰을 개장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의 유통시장은 AEON Mall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캄보디아 소매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프놈펜 1차 Mall은 66,000s/m, 2차 Mall은 75,000s/m의 캄보디아 최대 쇼핑센터로 식품과 의류, 생필품, 식당, 오락시설(볼링, 영화관, 오락실, 아이스케이팅장 등) 등을 구비하고 있다. AEON Mall은 상가임대 방식이며 AEON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외원조기관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유무상 원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주요 정부에 컨설팅 직원을 두고 함께 운영하면서 캄보디아의 주요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에 캄보디아 최대 특별경제구인 PPSEZ(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에 투자를 하여 캄보디아 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캄보디아 증시에 상장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하누크빌 항만에 투자하여 증시 상장시켰다. 그 외에도 JICA에서는 시하누크빌 SEZ, 프놈펜 상수도 기업 등에 원조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제조업체로는 2015년 Minebea사가 프놈펜경제특별구역(PPSEZ)에 stepping motor 조립 공장을 설립하여 종업원을 약 5,000여명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2011년 태국의 흥수이후 THAI+1 전략을 통해 생산기지를 다원화하고 있으며 미쯔비시사의 전장제품을 비롯하여 전자 및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혼다의 경우 캄보디아에 오토바이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오토바이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Suzuki Motor, O&M Cambodia, Sumi Cambodia Wiring Systems, Footmark Cambodia, Rohto-Mentholatum(eye drop), Rokko Phoenix(신발), Okato Cambodia(가정용품),

도교부품, 후지전기, 니코금속, 텐소, Ajimoto 등 제조업체만 100개 이상이 진출해 있다.

그 외 Kubota는 캄보디아 농기계시장 부분 1위이며, Sumitomo상사, 이토추상사, 마루베니상사, 미쯔이상사 등이 건설부분과 함께 진출해 있는데 2016년말 일본 ANA 항공의 직항운영으로 인적 물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대일본 수출은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2.5배인 8.3억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캄보디아의 의류 및 신발, 가죽제품과 우산 등의 제품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은 캄보디아에 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2016년 전체 수출액 5.3억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30%나 증가하였고 캄보디아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태국 등지에서 만들어진 일본산 브랜드 제품들의 캄보디아 시장 점유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은 전통적인 아세안국가 원조국으로 중국다음 2위의 원조국으로 캄보디아 전체 원조의 10% 정도인 연간 1.3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로 및 교통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 상수도 및 보건(병원)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다.(www.jica.go.jp)

캄보디아 일본기업협회에는 약 200여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캄보디아 투자청, 국세청, 관세청, 재정부 등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을 지원함은 물론 일본 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www.jbac.info)

□ 중국기업 진출현황

중국의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은 타의 주종을 불허한다. 1995년부터 약 3,000개 이상의 중국기업이 캄보디아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 캄보디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화교 및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대만 등의 화교들과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대표적인 중국투자기업은 시하누크빌 SEZ을 운영하고 있는 Jiangsoo Taihu 기업으로 2006년에 SEZ를 개발하여 약 100개사가 섬유, 신발,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 등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의 원조와 투자 지원을 담

당하고 있다.

중국의 캄보디아 원조와 투자는 구분하기 힘들정도인데 중국은 캄보디아에 10개 이상의 다리와 2,000km가 넘는 도로건설, 수력 및 화력발전소, 원유채굴, 공항 및 항만, 신도시 및 리조트, 상가 및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캄보디아 남서쪽의 KO Kong지역에 대단위 리조트와 공항을 건 설중인 Dare Savior(UNION Group)는 중국인 20만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건 설중인데 총투자규모만 38억달러이다. 캄보디아 건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Sine Great Wall International Engineering은 The Bridge를 비롯한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으며, 캄보디아 최대 항만도시이자 특별 경제구역인 Sihanoukville은 중국의 대규모 리조트투자로 해변이 변하고 있다. Kamchay Hydro Power사는 캄보디아 최대 수력발전소(400MW)를 건설하였으며, 캄보디아 최대 설탕공 장인 Rui Feng, 캄보디아 최대 사탕수수농장 등에 투자하였다. 캄보디아 최대 수출 및 제조 산업인 섬유봉제산업의 경우에도 중국기업이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5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GDP의 2%를 차지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인의 캄보디아 경제적토지양 허규모는 107개 기업에 4.7백만헥타인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홍콩과 대만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도 활발하다. 홍콩에 상장된 카지노업체인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Naga Hotel & Casino의 경우 캄보디아 최대 카지노기업으로 프놈펜에서 독점 적으로 카지노를 운영중에 있다. 홍콩의 Asia Insurance Group도 1995년 캄보디아에 진 출해 있으며, 약 100여개의 대만기업들은 주로 섬유 및 건설 부분에 주로 투자하였다.

중국(홍콩 및 대만포함)의 캄보디아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16년 누적기준으로 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 FDI 총액의 70%를 중국이 차지할 정 도이다. 중국기업은 대규모 리조트단지 및 상가건물, 아파트건설 등에 주력으로 투자되고 있 다. 중국의 원조로 2023년 개최하기로 한 동아시아국제스포츠대회를 위해 건설중인 체육시 설과 보조시설도 대규모 프로젝트중의 하나이나 숙박시설 등의 타당성 미흡으로 중단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중국의 캄보디아 원조는 매년 2억달러에서 일대일로 정책이후 3억달러 이상으로 상향되었 는데 2002년 이후 누적 40억(80% 이상은 유상, 무상은 2억달러 내외) 달러가 넘어 캄보디아 전체 원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분야는 대부분 인프라분야(도로건설 6.7억달러, 농업 6.3억달러, 전기 2.2억달러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건설시 중국의 원자재와 인력까지 대거 유입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캄보디아는 2013년 중국산 헬리콥터를 \$195백만달러에 12대 구입하였으며, 중국은 캄보디아에 군훈련소 건설운영, 합동 군사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군함 및 유조선도 수시 입항하고 있어 단순 원조 진출보다는 국가적 진출로 보여진다.

캄보디아의 중국교역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7억달러에 불과하던 양국교역은 10년만인 2016년에 51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캄보디아의 대중국 적자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45억달러로 캄보디아에 있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라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섬유원부자재가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건설자재(철근 등), 플라스틱 및 종이 등 캄보디아에서 필수적인 제품 들이다. 캄보디아의 대중국 수출은 6억 달러이며 50% 이상이 중국 진출기업에서 제조된 것으로 가죽, 섬유 및 신발, 전기전자부품 등이다.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의거 중국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쌀과 농산물 수입확대를 약속하여 2016년 약 20만톤의 쌀 수입쿼타를 캄보디아에 배정하였다.

□ 아세안 기업 진출현황

아세안 국가들의 캄보디아 투자도 매우 활발한 편인데 이중 말레이시의 투자가 가장 눈에 띈다. 캄보디아 최대 통신사인 Smart Axiata를 2016년에 인수하여 캄보디아 최대 통신업체가 되었으며, 동사는 최근 모바일 금융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백화점인 Parkson Mall(2018년 오픈예정), 보험회사인 Infinity Financial Solutions, Leader Infrastructure Limited에서 석탄발전소인 Cambodia Energy Limited(일본 마루베니에서 20% 지분) 등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다.

싱가포르의 Singa 맥주인 Asia Pacific Breweries, 캄보디아 최대 SI업체인 Thakral Cambodia Industries, 부동산 개발업체인 Woodbridge International 등이며, 태국의 경우 시멘트(Siam Cement), 사료(CP Group, Betagro), 석유판매업체인 PTT Cambodia, 병원(Royal Phnom Penh Hospital)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통신업체인 Metfone이 가장 대표적이며, Cho Ray Phnom Penh Hospital, 고무, Ankor Milk, Chak Angre Hospital, 비료공

장 등과 물류 분야에 진출해 있다.

아세안국가의 캄보디아 투자는 2005년부터 2016년간 38억달러였으며 2016년도에는 635백만달러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싱가포르(15%), 말레이시아(31%), 베트남(36%), 태국(18%) 등이 주요 투자국가이며 부동산, 통신, 섬유 등이 주요 투자분야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화교중심으로 캄보디아투자와 잘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및 유럽기업들과 협력도 활발한 편이다.

2015년 AEC 출범으로 90% 이상의 제품이 아세안 국가간 교역이 자유화되어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활성화되고 있다. 2014년 캄보디아의 대 아세안 수입은 29억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46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의 대 아세안 수출도 2014년 362백만달러에서 2016년 867백만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ASEAN 시장의 경우 역내 교역투자보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역외 교역투자가 더 활발한 점이 향후 AEC 발전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가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도 AEC출범으로 캄보디아를 우회한 투자(베트남 및 미얀마 등)로 캄보디아 제조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일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태국의 경우 매년 3-4차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1-2회 자국 전시회를 개최함은 물론 중소기업 위주의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어 캄보디아의 태국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기업 진출현황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제 2위 투자국으로서 수출입은행자료에 따르면 97년 이후 800개 넘는 기업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기업은 (주)부영으로 프놈펜에서 부동산 개발(주택 및 상업단지), 씨엠립의 골프

장 및 리조트, 통신(Camintel), 은행(Booyoung Capital) 등의 분야에 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투자에 본격 진출하여 한때 캄보디아 경제를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후 2조원대의 Camco City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42 Gold Tower, 부영 프로젝트 등의 개발이 중단되었고 GS의 투자철회이후 일본과 중국 등에 주도권을 내준 상태이다.

주력 제조부분 투자는 섬유 및 봉제 분야로 최대 70개 이상기업이 투자를 하였으나 2017년 10월 현재 약 52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솔섬유, 약진통상, 대영, 에이스어패럴, 인경어패럴, 인재가먼트, 윌비스, 코튼클럽, 우리셔츠, 좋은 사람들, 가방분야에 시몬느, 하나가방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분야는 2016년 전북금융지주에서 Phnom Penh Commercial Bank를 인수한 것이 가장 크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 웰컴저축은행 등이 진출하였고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와 유안타 증권도 진출해 있다.

건설업체로는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한일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유신 등이 진출해 있으며, 그 외 CJ 사료, 한화(조림), 현대코퍼레이션(농업), MH Bio(농업), 경신 및 성지전선(자동차 전장)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다.

최근 농업분야 신송식품(카사바 전분), 삼광식품(후추), 자동차 부분에 KOLAO 등이 진출하였으며,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지사형태로 Camco Motors는 현대자동차 제품을 조립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2016년까지 총 44억달러(캄보디아 CDC 통계기준)를 투자하여 중국에 이어 누적투자기준 2위국이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섬유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체가 약 100여개 있으며(이중 섬유업은 50여개, 기타 의약, 전선, 농식품 등), 금융업(은행 등 20여개), 농업(약 50여개), 부동산개발(10여개) 등에 주로 진출하였다.

대캄보디아 원조금액은 유무상 합하여 누적기준 7.2억달러로 이중 무상원조가 2억달러이며 나머지는 유상원조이다. 우리나라의 원조분야는 도로 및 운송분야가 37.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위생·보건분야 29.8%, 교육 12.5%, 농업 5.4%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공식 ODA이외 민간분야의 NGO단체들이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원조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1997년 재수교당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교역규모는 5천만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8억 7천만불에 이르러 거의 10배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캄보디아 진출 섬유봉제기업에 소요되는 섬유원부자재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중고자동차(화물, 버스, 승용차 등) 등으로 한정되었지만 최근 들어 물과 음료수, 화장품 및 악세사리 등의 소비재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알루미늄판과 같은 중간재 수출도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의류(셔츠, 스웨터)나 전선(해네스)가 주력이며 최근 알루미늄 스크랩과 천연고무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우리나라가 연간 3억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기타 외국기업 및 캄보디아 주요기업

캄보디아는 ASEAN 국가로서 ASEAN-호주.뉴질랜드 FTA에 따라 호주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도 활발한데 대표적인 기업은 ANZ Royal Bank과 BHP Billiton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Manulife Cambodia, ABA Bank(National Bank of Canada 투자) 등 금융부분위주로 진출해 있다. 최근 인도기업들도 의약품, 병원 및 농업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에는 많은 명품기업들도 진출해 있다. 핸드폰 하나에 7백만원 이상하는 Vertu가 2015년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하루에 30대 이상을 판매하였고 도심에서는 롤스로이스가 수십대 돌아다니고 있으며 1벌에 수백만원하는 Boss, 싱가포르의 명품 차(Tea) TWG 까지 캄보디아 부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진출해 있다.

한편, 캄보디아 기업들은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부동산 개발, 물류 및 유통, 금융, 외국산제품 수입 등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 우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약한 편이다. 캄보디아 최대 기업은 Royal Group의 경우 부동산, 전력, 은행, 통신, 농업, 철도운영, 호텔, 방송, 무역(철근 등) 등 서비스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대 농업기업인 MongReththy의 경우 팜유생산 및 수출이 주력산업이며 최근 사료공장을 오픈하였다.

Chip Mong Group의 경우 부동산개발, 호텔, 시멘트 및 광산, 농업, 주류(Cambodia Beer) 등이 주력부분이며, Sokimex Group의 경우 부동산개발, 석유판매, 호텔, 농업 등이 주력 산업이다. 이용팻그룹(LYP)은 부동산개발, 농업, 호텔&카지노, 담배제조 등의 분야에, LCH Attwood 그룹은 부동산개발과 PPSEZ, 항만 및 주류 유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T Pacific Group은 담배(British American Tobacco과 합작), 공항, 전자(Mitsubishi 합작), 철강, 농업분야가 주력이다. 그 외 ANCO Company는 카지노와 호텔, 부동산, 농업, 담배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Pheapimex그룹은 목재 및 광산, 부동산개발, 소금농장, 중국의 Wuzhishan LS 및 Jiangsu Taihu International과 합작한 농업 및 건설부분이 주력산업이다.

금융산업에서는 ACLEDA Bank와 Canadia Bank가 캄보디아 캄보디아인에 의해 설립되어 금융 부분의 1.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과 쇼핑센터(Sorya Mall) 등에도 진출하여 활동중이다. 주류 및 음료는 Carlsberg가 50%의 지분을 소유한 Cambrew(Ankor)와 Cambodia Beer 2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결론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으로 오랜 내전이후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이후 지난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수가 작은 시장이고 제조를 위한 기초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중산층 증가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진출 사례를 보면 캄보디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길목장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발전으로 차량과 기름이 필요하고 식료품과 금융(보험)이 필요하며, 통신과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자국의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진출하여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함께 해당기업들도 자리매김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에 입각한 캄보디아 투자는 물론 정부차원의 명확한 방향제시로 캄보디아에서 독보적인 활동(예 자동차와 오토바이)은 물론 주요 기간산업에 까지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거대한 물결처럼 한꺼번에 다양한 분야에서 캄보디아를 점령하듯이 밀려와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의 속국이 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 인프라, 농업, 유통분야에서 중국의 진출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00% 단독투자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캄보디아 기업과 합작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기업들이 캄보디아의 재벌 또는 정치가와 함께 합작투자인 경우도 있지만 합작투자 성공사례는 찾기가 힘들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화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태국과 베트남은 이곳의 정치 및 비즈니스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우리보다는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에 한 획을 긋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장밋빛 전망과 자본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세력에 의존하여 진출하여 큰 실패를 맞보기도 하였으며,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섬유 등), 농업개발 등에 진출하였으며 최근 금융산업 위주로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제 2위 투자국이지만 선진국의 길목장사, 일본의 인프라 및 글로벌 밸류체인, 중국의 물결, ASEAN의 네트워크를 이곳에 가지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 시장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산업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나 기초산업이 많아 단순 시장조사이후 투자를 하는 경우 실패의 확률이 높다.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연관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여 위험을 줄이면서 캄보디아 시장에서 주력산업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내수시장의 한계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경제발전 단계와 현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물류(트럭운송), 식음료, 유통, 글로벌밸류체인, 농업개발, 소비재, 인프라 분야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M&A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를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이 가능성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해외투자는 예상보다 험난하다.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세무, 관세, 제도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를 통해 필요한 인력들이 구성되어야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네트워킹과 전문가를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Competitiveness and Linkages in Cambodia's Manufacturing Sector, UNDP 2014
- Non-tariff Measures in ASEAN
- KOTRA국가정보 및 웹사이트
- KOTRA 전략시장 진출전망 2017
- 외교부 국가정보 및 웹사이트
- KOTRA 전략시장 전망 2017
- KOICA 캄보디아 국별 원조현황 2017
- 아세안과 한국의 생존전략, 글로벌 어페어즈, 주명건의외 2015
-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방안, KIEP 15-19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KIEP 16-11
- KIEP 아세안 브리핑, KIEP
- NBC Annual Report 2015, National Bank of Cambodia
- Report on Cambodia FDI Survey Result 2014, NBC
- Cambodia Economic and Monetary Statistics 2016, NBC
- Annual Repor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2016~2017, MAFF Conference 2017(April)
- FAO Country Report on Cambodia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 Economic Census of Cambodia 2011
- ASEAN Investment Report 2016,
- 무역협회 통계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캄보디아 농림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ASEAN Investment Report 2016, UNCTAC

Open Development Cambodia.net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 이선진 외, 동북아 역사재단

Guide to Doing Business in Cambodia, BNG Legal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urvey Result 2014, Bank of Cambodia

Abstract

Cambodia is not a big market as the country has just graduated from least development country in 2015 with its population of over 15 million. However it has shown a remarkably fast growth as it has experienced more than 7% annual growth for last two decades.

This comes from mainly openness policy of government to FDI in every sector together with foreign ai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aiding countries. Foreign companies have been playing a great role in industrialization of Cambodia economy and contributing strong macroeconomic stability and significant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of Cambodia.

Compared with other ASEAN countries, Cambodian economy has several special strong points for foreign investment such as widespread use of dollar in commerce, secured profit remittance to abroad, and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in most sector. There are more disadvantages in investing Cambodia, however, such as corruption, and weak infrastructure.

Foreign investors in Cambodia has advanced in retail, energy, food processing, agriculture, garments and shoes, finance,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sector, China, Korea, Japan, US, EU, ASEAN are the main investors to Cambodia.

Investors from OECD countries which has more foreign business experience got the right corner of the street in Cambodia and have grown together with Cambodian economy. Japan has been utilizing Cambodia as one of global value chain and government-driven infrastructure.

Recently Chinese investment looks like big wave and dominating in every field of Cambodia economy including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distribution and consumer market.

Singapore, Thailand, Malaysia and Vietnam have similar cultural sympathy and easy networking partner in Cambodia. So they could access to more information in doing business with Cambodia.

Korea has been one of not only the biggest investing countries but also the most reliable development partner to Cambodia.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EXIM bank Korea has invested more than US 23billion which ranks 2nd biggest investment country in Cambodia. Korea also 3rd biggest foreign aid country in Cambodia.

Once Korean investment has been ignited real estate market of Cambodia, however, ended to failure because of wrong approach and lack of capital and experience. Garment sector which could utilize low labor cost of Cambodia is still staggering because of high rising labor cost and tax problem. It is difficult to find a successful brand in Cambodian market from Korean Investment yet.

There are still lots of market opportunity in developing Cambodia market. Korean investment should take advantage from its failure and get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Cambodia. Building cooperation in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Cambodia and networking with Cambodian businessmen and policy-maker. cluster based advancement is quite recommendable to Korean business society.

아세안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박번순*

1.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은 동남아에 위치한 10개 국가가 결성한 지역협력체이다. 1967년 8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국이 출범시킨 아세안은 이후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1990년대 말부터 10개국 체제를 갖췄다. 아세안의 역사는 50년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결속력이 높은 협력체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10개국은 사실 매우 이질적이다. 인구, 면적, 경제발전 단계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종교 및 문화 등에서도 서로 달라 아세안은 다양성 속에서 공존을 모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정불간섭,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 등을 중요한 운영방식으로 삼고 있다.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켰는데 아세안 전체를 단일 시장이자 하나의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는 오랫동안의 비전을 형식적으로 달성한 것이다. 통합 아세안의 1인당 GDP는 약 4,000달러로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있다. 아세안의 인구는 2016년 현재 6.4억 명으로 세계 3위, 경상 GDP는 약 2.6조 달러로 5~6위, 상품 수출입은 각각 1조 달러 이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前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산업연구원

으로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서는 인구 12배, 수출입은 2배 이상, GDP는 1.8배 이상이다. 따라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작동한다면 세계 경제의 질서 형성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아세안은 또한 높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 아세안의 인구는 2016년 현재 약 6.4억 명 수준에서 2050년에는 7.9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인구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므로 이는 큰 장점이다. 인구의 평균연령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아 아세안은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도 갖고 있다. 또한 아세안 선발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나 이제 이륙을 시작한 베트남이나, 경제개혁을 시작한 미얀마 등 후발 아세안은 향후 빠른 성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아세안 경제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경제지표(2016)

구분	면적 (천km ²)	인구 (만명)	GDP (억달러)	1인당 GDP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브루나이	6	42	114	26,938	49	31
캄보디아	181	1,576	200	1,269	100	126
인도네시아	1,914	26,112	9,323	3,570	1,445	1,357
라오스	236	676	159	2,353	30	47
말레이시아	330	3,119	2,964	9,502	1,894	1,684
미얀마	677	5,289	674	1,275	110	166
필리핀	300	10,332	3,049	2,951	563	863
싱가포르	1	561	2,970	52,961	3,298	2,829
태국	513	6,886	4,068	5,908	2,153	1,947
베트남	331	9,270	2,026	2,186	1,768	1,742
아세안 계	4489	63,863	25,547	4,000	11,410	10,792
한국	99	5,125	14,113	27,539	4,954	4,062

자료: 세계은행

아세안은 아시아 경제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은 성숙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와 인구증가 정체로 성장 잠재력은 낮아졌다. 현재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내수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동북아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은 동북아- 아세안- 인도로 연결되는 아시아 경제회랑에서 동북아와 인도를 연결하면서 중심지 역할도 할 수 있다.

II. 아세안 경제의 과제

현재 아세안은 모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의 발전과정은 동일하지 않았다. 동북아의 한국과 대만이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했던 1960~70년대 기간에 싱가포르를 제외한 선발 아세안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수입대체공업화를 채택했다. 식민지 경험에서 오는 외세에 대한 경각심,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냉전시대에 일부 국가의 비동맹 노선 추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 시기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나 혹은 유사한 체제였다.

아세안 선발국은 1980년대 중반 모두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전략을 바꾸었다. 1985년 9월 선진국들이 통화가치 조정에 합의한 플라자합의 결과 엔화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일본 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대만 기업도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곧 일본기업을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이제 선발 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투자 주도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시작했는데 국내정정 불안으로 성장의 대열에서 탈락한 필리핀을 제외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전반기까지 고도성장을 했다. 또 1990년대가 되면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시작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고 동북아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고도성장은 버블을 낳았고 버블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봉괴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위기 전염국은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했지만 그들 앞에는 전연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증강되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은 이제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자원가격이 급등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이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아세안 선발국의 경제성장률은 5% 정도에 그쳤고 이는 중국이 10%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구조 조정과정에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지는 못했고,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다른 타격이 되었다. 수출주도형 공업화 과정에서 아세안의 대외의존도는 높아졌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의존도는 2016년 현재도 싱가포르가 200% 이상, 말레이시아가 130%, 베트남 170%, 태국 96% 등으로 한국의 64%보다 더 높다(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Pacific). 따라서 무역은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입억제, 보호무

역주의,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아세안의 교역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2016년 수출규모는 2010년 수준으로 퇴보했고 베트남을 제외하면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역시 2016년 수출은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수출부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 주요국의 1인당 명목 GDP 추이를 보면 2014~2016년 기간 평균 GDP가 2011~2013년 기간의 그것보다 오히려 적어졌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이 기간에 10.9% 증가했으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득은 5% 이상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정체상태를 보였다. 다만 필리핀과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상승했다. 결국 1인당 소득과 수출의 변화를 보면 적어도 아세안 국가 중에 선발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성장이 정체되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명목소득 및 증가율 비교

(단위: 달러, %)

구분	2011~2013	2014~2016	증가율
한국	24,776	27,485	10.9
인도네시아	3,648	3,466	-5.0
말레이시아	10,689	10,110	-5.4
필리핀	2,565	2,891	12.7
싱가포르	54,542	54,309	-0.4
태국	5,841	5,888	0.8
베트남	1,735	2,115	21.9
중국	6,350	7,959	25.3

자료: 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해 필자 작성

그렇다면 아세안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인가? 아세안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은 현재 한국-아세안의 경제협력이나 향후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다.

아세안 경제가 현재의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측면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와 관계가 있다. 아세안 선발국을 중심으로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으나 수출부문은 다국적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아세안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소극적이다. 아세안 상품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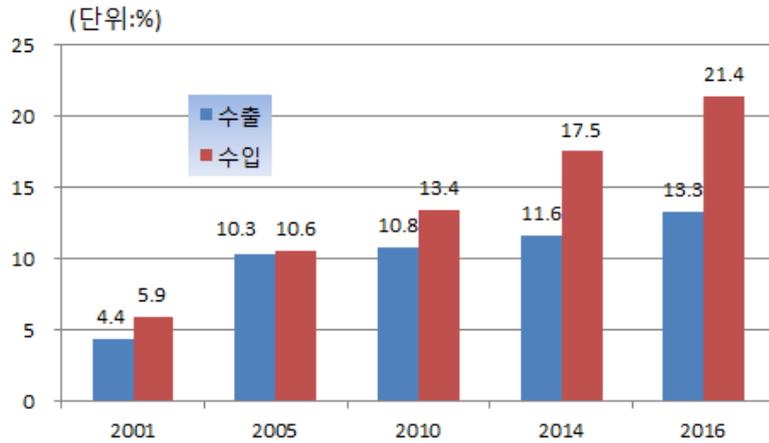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아세안은 연구개발 역량이 아주 낮다. 예컨대 한국은 2014년 GDP의 4.3%를 R&D에 사용하고 있으나 태국은 약 0.5%,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특허국에 등록된 실용특허의 경우도 2013~2015년 3년 동안 한국의 경우 연간 16,000건이 넘었으나 태국, 필리핀의 경우 연평균 50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도 연평균 80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속히 진전되는 산업의 조류를 따라 간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아세안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중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아세안에게 두 개의 상반된 효과를 미쳤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세계 시장에서 아세안 상품시장을 잠식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아세안으로부터 1차 상품을 수입하거나 전자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등 부품을 수입했다.

이러한 중국의 파급효과는 경제협력 과정에서 변하게 되었다. 중국으로 집중하던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 일부가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와 생산비 상승으로 아세안, 특히 베트남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아세안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그 대신 중국의 성장 둔화로 1차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산업 기반이 강화되면서 이제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아세안에 소비재를 수출하던 아세안이 이제 자본재까지 수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상품은 아세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의 총수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1년 5.9%에 불과했으나 2010년 13.4% 그리고 2016년에는 21.4%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해 아세안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은 2001년 4.4%, 2010년 10.8%, 그리고 2016년에는 13.3%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세안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켰으나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저하된 아세안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나아가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그림 1] 아세안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 추이



자료: ITC

셋째,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세안은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경제통합을 추진했고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켰다. 경제통합은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수평적 분업으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던 생산설비를 한 지역으로 통합할 수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행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직분업 차원에서 보면 무역 비용이 감소하면서 부품과 중간재를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소싱을 하게 되면서 부품업체들은 생산비용이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새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경제통합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하지만 현재 아세안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합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 즉 아세안 경제통합이 실질적인 통합이 아닌 선언적 통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를 통합하고 국경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완전한 개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는 이를 어렵게 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1인당 소득은 싱가포르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며 말레이시아가 21%, 태국이 1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세안 국가 간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아세안의 통합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 아세안이 어떻게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갈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III.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구조

한국과 아세안은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그리고 관광 등 인적자원의 교류 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아세안 교역은 2016년 현재 1,188억 달러로 아세안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수출은 2016년 현재 745억 달러로 총수출의 15%인데 이는 중국의 25.1%,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16.4%보다는 적지만 미국의 13.4%, EU의 9.4% 보다 많다.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 한 국가에 대한 수출도 전체 수출의 6.6%로 대일본 수출 4.9%보다 더 많다. 아세안 수출은 2010년 11.4%, 2013년 14.7%, 2016년 15%로 급증했는데, 이는 한국에게 아세안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가를 말해준다.

〈표 3〉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	2012	2014	2016
수출	532	791	846	745
수입	441	520	534	443
수지	91	272	312	302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4〉 한국의 주요수출시장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		2013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1,168	25.0	1,458	26.1	1,244	25.1
일본	282	6.0	347	6.2	244	4.9
아세안	532	11.4	820	14.7	745	15.0
- 베트남	97	2.1	211	4.1	326	6.6
NAFTA	628	13.5	770	14.9	811	16.4
- 미국	498	10.7	621	11.1	665	13.4
EU	535	11.5	489	8.7	466	9.4
전체	4,664	100.0	5,596	100.0	4,954	100.0

자료: KITA

한편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은 해외투자를 시작할 때 먼저 아세안을 선택했다. 중국과 국교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경공업체들은 국내생산비가 상승하자 제 3국 시장에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진출했고, 1990년대 초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베트남도 중요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세안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아세안 투자는 소강상태에 이르렀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아세안 선발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정체되었다.

최근 수년 아세안은 다시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모두 급증했다. 대아세안 투자액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계속 중국 투자를 상회했고, 2016년에도 51억 달러이상으로 33억 달러 수준의 대중국 투자보다 훨씬 많았다. 2014년부터는 신규 투자건수에서도 아세안 투자는 중국투자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6년의 경우 대아세안 투자건수는 1,078건으로 중국의 695건 보다 훨씬 많아졌다.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은 중국, 일본의 아세안 경제협력에 비해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결코 못하지 않다. 일본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대아세안 수출입과 투자규모는 한국보다 더 많다. 신규투자나 투자잔액에서 한국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무역수지 흑자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상대적 규모에서는 한국이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이다.

〈표 5〉 한중일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수준(2016)

구분			수출	수입	신규투자	투자잔액
한국	금액	억달러	745	443	51	501
	비중	%	15.0	10.9	42.9	14.2
중국	금액	억달러	2,627	1,829	146	627
	비중	%	12.3	12.0	10.0	5.7
일본	금액	억달러	955	923	206	1,670
	비중	%	14.8	15.2	15.1	13.3

주: 중국과 일본 투자는 2015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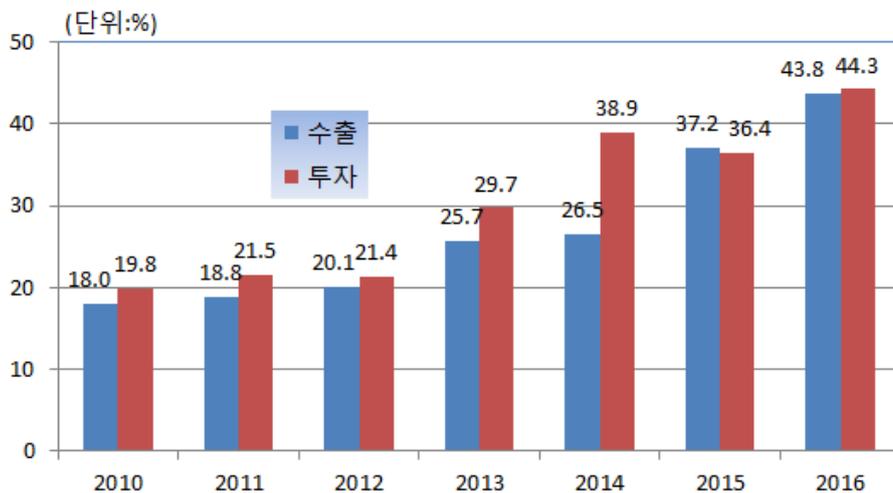
자료: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투자는 중국 상무부, 일본의 무역과 투자는 일본 JETRO

결국 현재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의 문제는 비대칭적 협력이라는 점이다. 투자의 경우 경제발전 차이 때문에 한국의 일방적 투자가 당연하지만 교역에서도 한국의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수지 흑자가 눈에 띈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에서 나타나는 문

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대아세안 교역에서 만성적인 흑자를 누리고 있으며 이 무역수지 흑자가 아세안에서도 베트남 등 저소득국가로부터 주로 얻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6년 총 흑자 302억 달러 중 선발 아세안에 대한 흑자는 77억 달러이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후발 아세안에 대한 흑자가 225억 달러이다. 둘째, 최근 대아세안 교역, 특히 선발아세안에 대한 교역규모가 정체하고 있다. 이들과는 수출도 정체하지만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교역정체는 아세안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한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잠식도 한 몫하고 있다. 셋째, 선발 아세안국가와의 무역과 투자가 정체하고 있는 대신 베트남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대베트남 수출은 2010년 아세안 전체 수출의 18%였으나 2016년에는 43.8%로 증가했다. 투자에서도 노동집약적 투자보다 자본 및 기술집약적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투자집중도는 2010년 19.8%에서 44.3%로 증가했다.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2]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과 투자에서 베트남 비중



자료: 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

IV. 대아세안 경제 협력의 방향

한국의 외교나 경제에 아세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발 아세안국가들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선진국의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이고 신흥 아세안 국가는 당분간은 고도성장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고령화와 투자부족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적 역동성이 급격히 저하되지만 아세안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인구도 많다.

한국에게만 아세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세안은 아시아 경제 질서 형성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아세안+3 체제를 구성하는 한중일 혹은 아세안+6 체제를 구성하는 한중일 외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모두 공식적으로는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의미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북아 3국이 협력보다는 반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중규모 개방지역으로서 아세안경제가 갖는 잠재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기도 한다. 한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아세안에 대한 전략을 새로이 해야 한다. 그 첫째는 아세안에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 리더들의 인식제고이며 둘째는 한국과 아세안의 호혜적 발전이다.

먼저 한국의 지도자들이 아세안을 보는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적한바와 같이 아세안은 2016년 현재 한국의 수출의 15%, 해외투자 40% 이상을 담당한다. 대일본 수출 비중이 4.9%, EU 27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9.4%라는 점, 그리고 미국 비중이 13.4%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세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경제에서는 반세계화, 보호주의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협력 여지가 많고 아시아 차원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 속에서 제휴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나 일반 국민들은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다. 아세안은 제 2-3위의 경제협력 대상이지만 주로 시장으로서 인식하는데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한국이 아세안+3 체제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설립을 주도하여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아세안+3 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아세안은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무시되기 일쑤였다. 노무현대통령 시대의 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신아시아구상, 박근혜대통령 시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 등에서 아세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강에 특사를 파견한 이후 아세안에도 특사를 파견했는데 처

음부터 5강으로 아세안을 인식했어야 했다. 아세안에 뒤늦게 특사를 파견했으나 곧 이어 EU, 인도에도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아세안을 대우한다는 전략이 빛을 잃었다. 아세안 외교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서 아시아 공동체를 향해 아세안과 협력하며 아이디어의 제공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는 호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아세안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중국의 보완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제무대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국의 아세안 정책은 아세안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세안 경제의 장기적인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역내의 개발격차를 줄이는데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의 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대아세안 ODA 정책도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한다. 먼저 아세안에 대한 ODA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아세안 주요국을 ODA 중점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국가들에 대한 비중이나 규모는 1980-90년대 일본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보다 아직 낮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ODA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다. 일본과 중국처럼 아세안의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ODA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ODA는 경제인프라 보다는 교육, 보건, 기술 및 지식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야 한다. 아세안선발국 대상으로는 언론계나 학계인사들의 장기체류 연수를 확대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유학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견기업의 제휴를 확대하고 한국에서 성공한 벤처캐피털이나 투자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아세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투자의 확대 균형이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극히 비대칭적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시장이자 한국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투자의 경우야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적 발전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교역에서는 확대균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공급하는 중간재, 부품 등인 경우가 많아 무역 불균형이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흑자를 줄인다고 수출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도 없다. 결국 장기적으로 무역확대를 통해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무역의 균형을 위해서는 아세안에서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흑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확대균형이 필요하다.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지 자원 및 자원 가공형 분야에 우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역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차원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역 확대를 통해 시장의 창출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새로운 보호주의로 무역이 축소된다면 양측 모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 회귀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무역비용을 축소하여 교역을 확대하여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프로그램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측의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가 제안한 아세안+3 체제의 산물들이다. 한국의 국력을 비교할 때 중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협력과 경쟁하기 곤란하다. 아세안을 둘러싼 전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혁신자, 아이디어 제공자로 다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s a regional bloc in Southeast Asia formed by 10 countries. ASEAN has 50 years history and is ranked in the top five of the world in terms of economic size such as population, GDP, and trade volume. ASEAN absorbs 15% of Korea's total exports and more than 40% of Korea's overseas investment is invested in ASEAN. However, some of ASEAN member countries are now losing their economic dynamism and falling into the middle income trap. In order to recover and sustain its economy in the future ASEAN has to find the solution to the daunting tasks such as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innovation, development of new adaptation models in competition with China, and deepening of ASEAN Economic Communit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is being developed in favor of Korea. Korea is using ASEAN as an export market and production base, and has a huge trade surplus. In order to further deepe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in the future, this asymmetric problem should be solved. To this end,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leader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ASEAN to the future of Korea. We should also make sure that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is necessary. To this end, cooperation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SEAN, and ODA should be expanded and established in this connection. In addition, trade expansion needs to be balanc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operate.

필리핀의 두테르테노믹스와 한국의 협력 방향

신민금*

1. 서론

필리핀은 한때 주변국 대비 저조한 성장으로 '아시아의 병자(Sick man of Asia)'라고 불렸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베트남(V), 인도네시아(I)와 함께 VIP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고성장은 소비 호조 및 건설경기 활황,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취약한 제조업, 고실업, 빈곤 등 문제는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2016년 6월에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빈곤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이니셔티브가 두테르테노믹스(Dutertenomics)의 핵심이다. 본고에서는 필리핀의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고, 정부의 인프라 확충 정책 및 인프라 개발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프라 관련 대필리핀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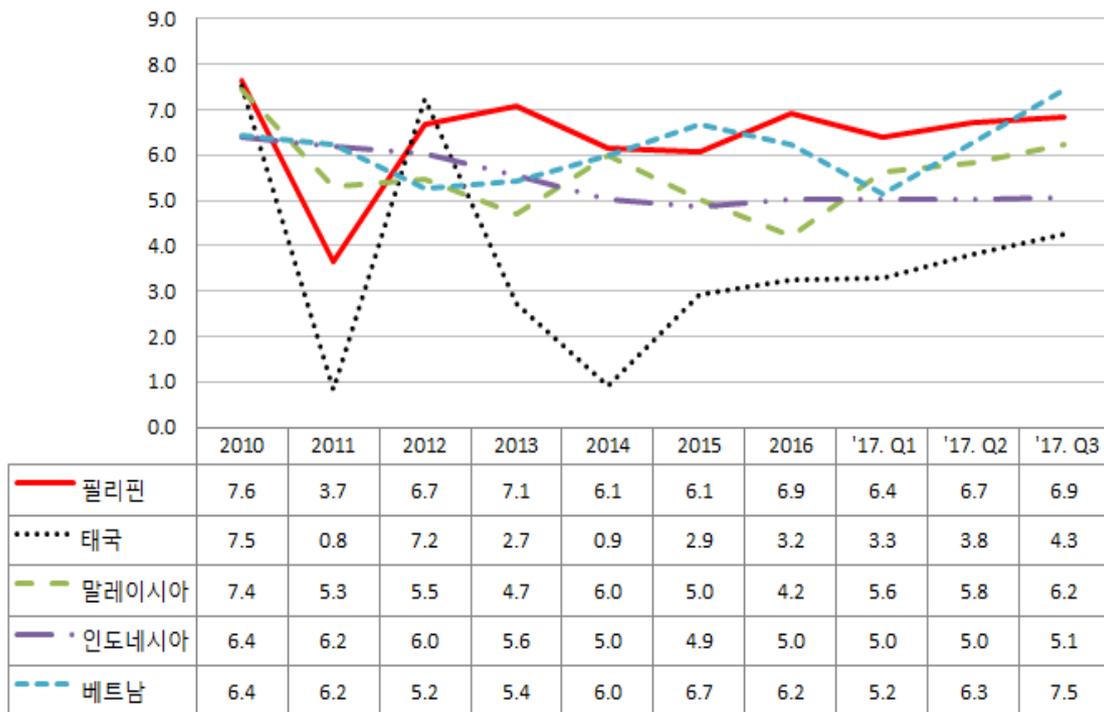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 최근 거시경제 동향

필리핀은 2012년 이후 민간소비 호조, 정부지출 증가, 투자 증가 등 요인에 힘입어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고). 필리핀 경제의 고성장은 막대한 해외송금액 유입 및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산업 호황이 민간소비 및 건설경기 호조를 지탱하고, 아키노 전 정부(2010~16년 집권)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 목표치인 3~5% 내 물가 안정, 낮은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16년 기준 34.6%)*, 풍부한 외환보유고(17년 말 기준 8.3개월 치 경상수입액)**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도 양호한 상황이다(표 1 참고).

[그림 1] 아세안 주요국의 실질GDP증가율 추이

(단위: %)



주: 분기별 자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Global Insight DB,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검색일: 2018. 01. 12).

* 15년 기준 36.2%, 필리핀 재무부, <http://www.dof.gov.ph/index.php/general-govt-debt-to-gdp-ratio-down/>.

** 필리핀중앙은행, <http://www.bsp.gov.ph/statistics/sdds/table12.htm>.

〈표 1〉 필리핀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3년~17년 3/4분기)

항목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Q1	2017년 Q2	2017년 Q3
실질 GDP 증가율	%	7.1	6.1	6.1	6.9	6.4	6.7	6.9
민간소비	%	5.6	5.6	6.3	7.0	5.8	5.9	4.5
정부지출	%	5.0	3.3	7.6	8.4	0.1	7.1	8.3
고정투자	%	11.8	7.2	16.9	25.2	14.7	9.4	7.1
수출	%	-1.0	12.6	8.5	10.7	20.3	20.4	17.2
수입	%	4.4	9.9	14.6	18.5	18.6	18.7	13.9
1인당 GDP	달러	2,760	2,843	2,878	2,951	-	-	-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2.9	4.2	1.4	1.8	3.2	3.1	3.1
기준금리	%(기간말)	3.5	4.0	4.0	3.0	3.0	3.0	3.0
평균 환율	PHP/USD	42.4	44.4	45.5	47.5	50.0	49.8	50.8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기간말)	75.7	72.1	74.0	73.4	73.0	73.5	72.9
무역수지	십억 달러	-17.7	-17.3	-23.3	-35.5	-6.3	-7.0	-6.0
경상수지*	%/GDP	4.2	3.8	2.5	-0.3	-0.7	-0.1	0.7
재정수지	%/GDP	-1.4	-0.6	-0.9	-2.4	-	-	-
실업률	%(평균)	7.1	6.8	6.3	5.5	6.6	5.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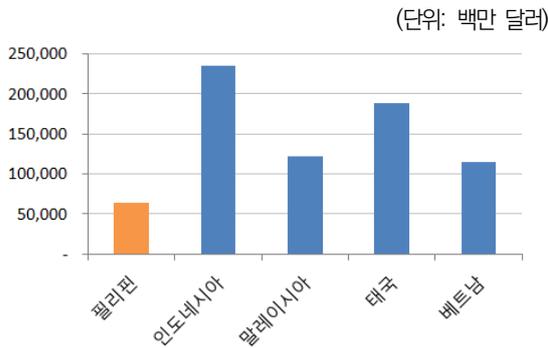
주: 분기별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는 필리핀중앙은행 자료임.
 자료: Global Insight DB, 필리핀중앙은행(검색일: 2018. 01. 12).

하지만 최근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제조업, 고실업, 빈곤 등 필리핀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주변국이 1960~70년대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한 반면, 필리핀은 거버넌스 문제, 토착기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호주의, 낙후한 인프라, 과대평가된 환율에 따른 낮은 수출경쟁력 등 요인으로 인해 외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발달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2016년 기준 필리핀의 FDI 누적 유입액은 약 64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1/4, 태국의 1/3,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1/2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2 참고). 취약한 제조업 부문에 기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족, 높은 인구증가율 등 요인에 기인하여 고실업 및 빈곤 문제도 상존한다. 필리핀의 실업률은 하락 추세이나, 아세

* 2017~18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인프라 부문 순위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전체 137개국 중 97위를 차지하며, 주변국에 비해 저조한 순위를 기록함(말레이시아 22위, 태국 43위, 인도네시아 52위, 베트남 79위), World Economic Forum(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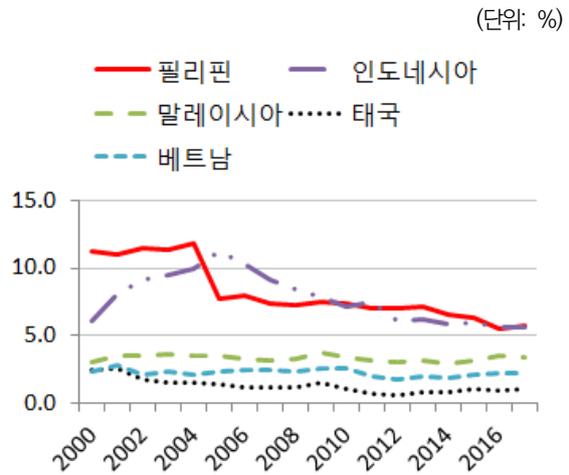
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비 높으며, 높은 과소실업률(Underemployment)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실업 혹은 준실업 상태이다(그림 3 참고)*. 필리핀의 전체 인구 대비 국가빈곤선 아래 빈곤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22%로, 주변국인 베트남(13.5%), 인도네시아(11.3%), 태국(10.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림 2] 아세안 주요국의 FDI 누적 유입액 비교(2016년 기준)



자료: UNCTAD(검색일: 2018. 01. 12).

[그림 3] 아세안 주요국의 실업률 비교



주: 전체 노동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8. 01. 12).

3. 인프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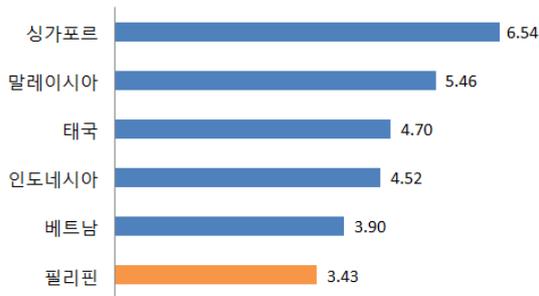
필리핀의 인프라 수준은 아세안 주요국 중 가장 낮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제조업 육성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017~18년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 수준은 아세안 주요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고). 위 보고서에 나타난 필리핀의 종합 인프라 지수는 7점 만점에 3.43점으로, 필리핀

* 오윤아, 신민금(2013), p.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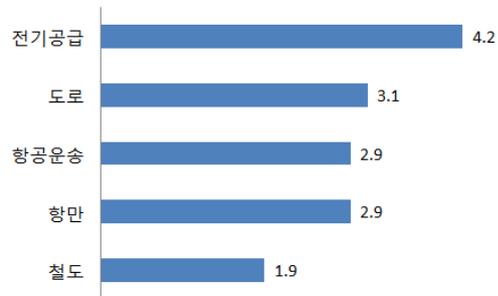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자료는 2014년 기준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8. 01. 12).

은 전체 평가대상 137개국 중 97위를 기록하였다. 필리핀의 인프라 부문 순위는 필리핀 국가 전반 순위인 56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필리핀의 종합 인프라 지수는 아세안 후발가입국인 베트남(3.9)보다도 낮다. 필리핀의 인프라지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철도, 항만, 항공운송, 도로, 전기공급 순으로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고). 특히 철도 부문은 7점 만점에 1.9점을 기록하여 매우 낙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필리핀이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악지형이 많아 철도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아세안 주요국의 종합 인프라 지수(2017~18년 기준)



[그림 5] 필리핀의 부문별 인프라 지수(2017~18년 기준)



주: 총 137개국 평가, 인프라 지수는 7점 만점임.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7), pp. 328-329.

주: 인프라 지수는 7점 만점임.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7), p. 239.

교통인프라 발달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은행의 2016년 물류성과지수(LPI)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10개국 중 7위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아세안 후발가입국과 함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표 2 참고). 필리핀의 종합 물류성과지수 순위는 전체 160개국 중 71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인프라 부문 순위가 82위로 매우 낮은 점으로 볼 때, 낙후한 인프라로 인해 물류 부문 발달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세안 국별 물류성과지수 순위(2016년)

국가	종합 물류성과지수 (LPI)	통관	인프라	국제선적	물류 경쟁력	화물추적	적시성
싱가포르	5	1	6	5	5	10	6
말레이시아	32	40	33	32	35	36	47

국가	종합 물류성과지수 (LPI)	통관	인프라	국제선적	물류 경쟁력	화물추적	적시성
태국	45	46	46	38	49	50	52
인도네시아	63	69	73	71	55	51	62
베트남	64	64	70	50	62	75	56
브루나이	70	57	66	62	93	68	84
필리핀	71	78	82	60	77	73	70
캄보디아	73	77	99	52	89	81	73
미얀마	113	96	105	144	119	94	112
라오스	152	155	155	148	144	156	133

주: 평가대상 국가는 총 160개국임.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s://lpi.worldbank.org/>.

4. 두테르테노믹스의 주요 내용

1) 인프라 확충 정책

필리핀 경제가 최근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실업, 빈곤 등 문제가 지속되는데 대해 두테르테 정부는 자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빈곤해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추진('Build, Build, Build' program)이 '두테르테노믹스'의 핵심이다.

정부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0+10 사회경제 의제(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등 주요 개발계획에 나타나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10월 장기 개발비전인 '비전 2040'을 발표하여 2040년까지 25년간의 장기 개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비전은 '빈곤층이 없는,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번영한 사회'를 목표로 하며, 비전 실현을 위한 중점 개발 분야로 △ 주택 및 도시개발 △ 제조업 △ 연계성 △ 교육서비스 △ 관광 △ 농업 △ 보건서비스 △ 금융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중 연계성,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는 인프라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0+10 사회경제 의제'에도 11개의 중점 과제 중 인프라 투자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표 3 참고).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은 '비전 2040'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중기개발계획으로, 2022년까지 상위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정

부는 이번 개발계획을 통해 △ 매년 7~8% 경제성장을 통한 1인당 소득 5,000달러 달성 △ 농촌 빈곤 감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농촌 빈곤율 15년 30%→22년 20%) △ 일자리 창출(매년 95만~110만 개) 등을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 제시하였다.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우호적 경제환경 조성, 인프라 확충, 환경보호, 안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주요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 0+10 사회경제 의제

분야	주요 내용
평화와 질서	-
거시경제	아키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재정	세제 개편
투자환경	기업 규제 완화, 지방 비즈니스 유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인프라	인프라 투자 확대
농업	농업 및 농기업 생산성 향상
토지	토지사용권 제도 정비, 토지관리 제도 개선
교육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기술 및 훈련 제공
과학, 기술, 예술	과학, 기술, 예술 분야 진흥
빈곤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확대
인구	출산보건법안 시행 및 강화

자료: 정주영(2016).

인프라 확충 추진 방식도 변화하였다. 두테르테 정부는 민관협력(PPP)보다는 정부예산, 원조, 상업적 차관 등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배경은 전임 아키노 정권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관협력(PPP) 중심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전임 아키노 정권에서 체결된 PPP 프로젝트 계약은 존중하는 한편, 전반적인 PPP 추진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임기 6년(2016~22년)간 8조 4,000억 페소(약 1,682억 달러)를 지출하고자 하며, GDP 대비 인프라 지출 비중을 2017년 기준 5.4%에서 2022년에 7.4%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임 아키노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중시한 반면,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기조는 약간의 재정적자

* 상위중소득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036~12,475달러인 국가를 일컫으며, 필리핀의 1인당 GNI는 2015년 기준 3,550달러로 하위중소득국에 속함,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 Global Insight(2017), p. 20.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프라 건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두테르테 정부는 GDP대비 재정적자 억제치 비중을 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다. 정부의 인프라 확충 의지는 2018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필리핀의 2018년 예산은 3조 8,000억 페소(약 754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2.4% 확대되었으며, 인프라 부문은 교육, 경찰 부문과 함께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최근 인프라 확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개혁도 단행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월 초부터 소비세 인상 및 소득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을 시행하였다(표 4 참고).** 정부는 간접세를 인상하여 세수기반을 늘리는 한편, 개인소득세를 면제하여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조세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 석유제품, 담배, 자동차, 광물제품 등에 대한 소비세 인상 △ 석유제품, 설탕함유 음료에 대한 소비세 도입 △ 서민층 개인소득세 면제 등이다. 조세개혁 시행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조세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기준 900억 페소(약 18억 달러)의 추가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촉진 및 포용을 위한 조세개혁법(TRAIN)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비세 인상·신설	· 인상 품목: 담배, 석유제품(휘발유, 가스, 나프타 등), 자동차, 광물제품(석탄, 코크스, 비금속광물, 구리, 금, 크롬 등) · 신설 품목: 석유제품(등유, 경유, LPG, 병커유), 설탕함유 음료 등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	· 연소득 25만 페소(약 5천 달러) 이하 개인소득세 면제 · 연말 성과급(13th month pay) 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 : 8.2만 페소(약 1,632달러) → 9만 페소(약 1,791달러)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기준 상향	· 부가가치세(12%) 면제 대상 기업 매출기준 상향 : 연매출 192만 페소(약 3.8만 달러) → 300만 페소(약 6만 달러)
기타	· 이자소득세 인상, 인지세 인상, 필리핀복권위원회(PCSO) 복권당첨금 세금 신설(1만 페소 이상인 경우 20%), 증권거래세 인상(주식 매도시) 등

주: 달러당 50.24페소(2018.01.09. 15:08 KEB하나은행 고시기준).
자료: 신민금(2018).

* EIU(2017), p. 7.

** 두테르테 대통령이 '촉진 및 포용을 위한 조세개혁법(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에 서명함에 따라(2017. 12. 19) 조세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정부는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CTRP: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에 따라 총 5단계에 걸쳐 조세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번 조세개혁법(TRAIN)은 그 중 1단계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테르테 정부는 2017년에 국가경제개발청(NEDA) 산하에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이 지원단은 재무부(DOF), 예산관리부(DBM), 공공사업고속도로부, NEDA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교통 인프라 확충 중점 추진: 도로, 철도 중심

두테르테 정부는 수도권외의 교통체증 해소, 지방의 연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로,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자 한다. 정부는 물류비용 및 시간을 절감시켜 제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지역 연계성을 높여 농촌 빈곤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2017년 6월에 총 75개의 플래그십 인프라 프로젝트(Flagship Infrastructure Projects)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량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 6,000억 페소(약 313억 달러)이다. 75개 플래그십 인프라 프로젝트 중 2017년 6월 27일 기준 NEDA가 승인한 주요 프로젝트는 필리핀 루존섬 철도(PNR North 2), 메트로 마닐라 BRT, 민다나오섬 철도, 공항(다바오, 일로일로, 바콜로드, 라간당안), 세부 국제컨테이너 항만, 교량 등 건설공사가 있다(표 5 참고). 이 중 '신규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만' 및 '팡귄만 교량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의 자금지원으로 추진된다.

대다수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ODA 자금으로 추진되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필리핀의 인프라 부문에 대규모 원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에 필요한 이익을 취하는 실리외교 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과의 양자관계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75개 플래그십 인프라 프로젝트 중 35건의 프로젝트가 중국 자금으로 추진되며(2017년 6월 27일 기준), 세부적으로는 교량·철도·도로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홍수 관리 시설, 수력발전소, 관개시설, 댐 등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 Padin, Mary Grace(2017).

〈표 5〉 75개 플래그십 인프라 프로젝트 중 NEDA 승인 주요 프로젝트

(2017년 6월 27일 기준)

구분	프로젝트명	기공	자금지원	총 사업비 (백만 페소)
1	PNR North 2 (Malolos-Clark Airport-Clark Green City Rail)	2018.3	일본	211,460.00
2	Davao Airport	2017	GAA	40,570.00
3	Metro Manila BRT - Line 2 (EDSA/Central)	2018.Q1	ODA	37,760.00
4	Mindanao Rail Project (Phase 1) - Tagum Davao Digos Segment	2018.Q1	GAA	35,257.00
5	Iloilo Airport	2017	GAA	30,400.00
6	Bacolod Airport	2017	GAA	20,260.00
7	Clark International Airport New Terminal Building Project	2017.6	GAA	15,354.48
8	Laguindingan Airport	2017	GAA	14,620.00
9	New Cebu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2017.12	한국	9,200.00
10	Panguil Bay Bridge Project	2017.9	한국	4,858.99

주: 달러당 50.41페소(2018.01.16. 09:50 KEB하나은행 고시기준).

자료: NEDA, "Flagship Infrastructure Projects(as of June 27, 2017)," <http://www.neda.gov.ph/infrastructure-flagship-projects/>.

두테르테노믹스 추진으로 필리핀의 인프라 시장은 교통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6~22년에 필리핀 인프라 시장은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6 참고). 두테르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부문은 2016~22년 기준 연평균 8.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인프라 부문은 도로 및 교량, 철도 부문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그림 6 참고).

〈표 6〉 필리핀 인프라 시장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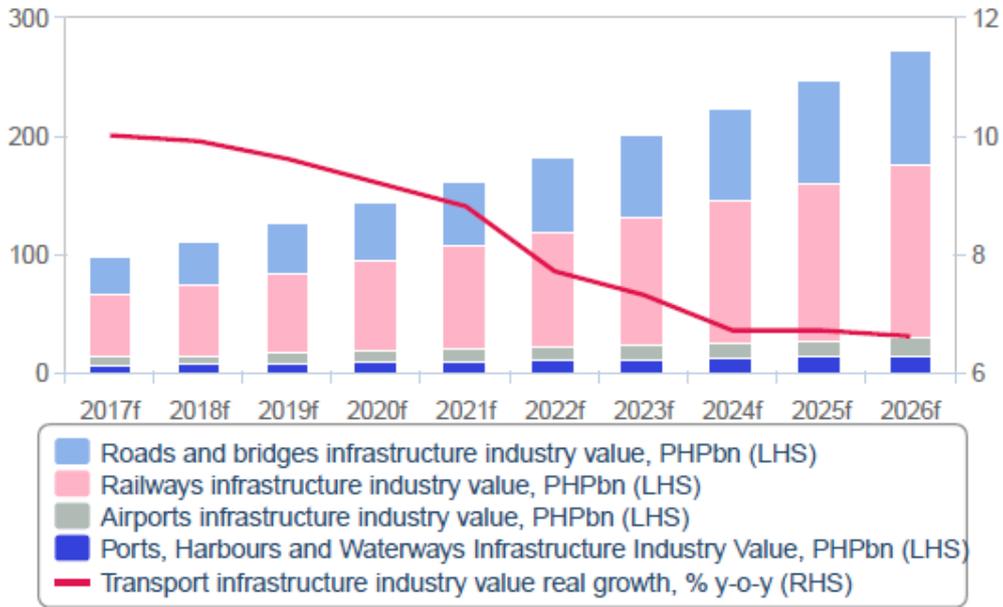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프라 시장 규모 ²⁾	십억 달러	69.4	80.9	93.2	106.5	120.6	135.1	
실질 성장률	인프라	%	12.5	12.2	11.2	10.3	9.3	8.0
	교통 인프라	%	10.0	9.9	9.6	9.2	8.8	7.7
	도로 및 교량	%	11.9	12.0	11.2	10.4	9.6	8.4
	철도	%	10.6	10.0	9.5	9.0	8.9	7.9
	공항	%	-0.5	0.4	3.4	5.5	5.5	3.6
	항만, 부두, 수로	%	10.8	10.6	9.5	8.4	7.4	6.0

주: 1) 위 자료는 전망치임.

2) 페소를 저자가 달러 환산(달러당 50.41페소, 2018.01.16. 09:50 KEB하나은행 고시기준).

자료: BMI(2017), p. 11, p. 16.

[그림 6] 교통 인프라 세부 부문별 성장 전망



자료: BMI(2017), p. 18.

5. 한국의 협력 방향

1) 고위급외교를 통한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두테르테노믹스 추진으로 필리핀의 인프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상외교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정상회담 개최시 인프라 개발협력을 주요 의제로 상정,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형태로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17년 1월 필리핀을 방문하여 향후 5년간 필리핀에 1조 엔(약 90억 달러) 규모의 개발원조 및 민간투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7년 10월 필리핀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해 11억 달러 규모의 차관패키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10월 방중 직후 중국 기업들과 총 240억 달러 규모의 인

* BMI(2017), p. 13.

프라 및 금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다.* 두테르테 정부가 중국 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데 대해 균형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이를 한국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점 사업 집중 지원을 통한 원조 효율성 극대화

두테르테 정부가 ODA, 상업적 차관, 정부예산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추진 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교통 인프라 분야 ODA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인프라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ODA 지원액은 규모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금의 한계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원조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조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은 개발수요가 높아 한국이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다. 대필리핀 ODA 지원방침인 ‘필리핀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교통 분야는 지역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재해예방과 함께 4대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되었다.**

3) 고급기술 시장 공략

우리 기업은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 현지 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산미구엘사, 아얄라그룹, SM투자회사, DMCI 홀딩스 등 현지 재벌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자금조달, 자재 조달, 시공 등 건설업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단순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입은 쉽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공급, 지하철 건설, 해상교량 건설 등 현지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bid., p. 7.

* Ibid., p. 13.

** 관계부처 합동(2016).

4) 건설수주 강국과 공동진출

인프라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사업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일본 등 건설수주 강국의 기업과 협력하여 필리핀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 조달력과 진출경험이 풍부한 일본 종합상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가격경쟁력 및 시공 품질수준이 높은 한국기업이 지분투자 및 수주를 통해 참여하는 협력방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짜레본(Cirebon)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07년에 한국 중부발전 및 삼탄, 일본의 마루베니상사, 인도네시아 트라이파트라사(三)가 공동으로 수주한 프로젝트이다. 마루베니상사가 사업총괄 및 재원조달, 중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삼탄은 연료공급, 트라이파트라사는 부지 및 인허가 취득을 담당하였다.*

5)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인프라 사업의 경우 추진 기간이 장기이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무슬림 무장반군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추진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 사례로, 2017년 중순 이슬람국가(ISIS) 조직과 연계된 마우테 그룹이 마라위시를 점거한데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병력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정치적 리스크 요인 외에도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부처간 의견조율 실패 등 요인에 기인하여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오윤아, 신민이(2016), p. 23.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신민금. 2018. 「필리핀,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본격 시행」. EMERiCs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윤아, 신민금. 201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윤아, 신민이. 2016.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전망」. 지역기초자료 16-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주영. 2016.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방향 및 전망」. EMERiCs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월 14일)

[영문자료]

BMI. 2017. “Philippine Infrastructure Report Q1 2018.”

EIU. 2017. “Country Report: Philippines.” (Dec 29)

Global Insight. 2017. “Country Report: Country outlook-Philippines.” (Dec 20)

Padin, Mary Grace. 2017. “Government forms inter-agency team to address project bottlenecks.” The Philippine Star. (July 28)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온라인자료]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필리핀 재무부. <http://www.dof.gov.ph/index.php/general-govt-debt-to-gdp-ratio-down/>.

필리핀중앙은행. <http://www.bsp.gov.ph/statistics/sdds/table12.htm>.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s://www.gso.gov.vn>(검색일: 2018. 01. 12).

Global Insight DB(검색일: 2018. 01. 12).

NEDA. “Flagship Infrastructure Projects(as of June 27, 2017).” <http://www.neda.gov.ph/infrastructure-flagship-projects/>.

UNCTAD(검색일: 2018. 01. 12).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s://lpi.worldbank.org/>.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8. 01. 12).

Abstract

The Philippines was once ominously dubbed the “Sick man of Asia” as it grew by just 3.6% on average from 1980 to 2010, which is much slower than East Asian tigers. Once called the “Sick man of Asia,” the Philippines has become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the region since 2012. High economic growth has been driven by remittance-fueled domestic consumption, expanding BPO industry, the construction boom, and the increased infrastructure-related spending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economy’s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cluding poverty, persistent unemployment, weak manufacturing sector, and low investment remain largely unchanged. Mr. Duterte is planning to address these structural weaknesses through “Dutertenomics,” a large-scale infrastructure spending initiative. The government plans to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 manufacturing industry, create employment, and reduce poverty by improving infrastructure, especially transport infrastructure. Where former president Aquino pushed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Duterte’s administration has signalled that the public sector will take the lead in the new projects it is proposing, instead seeking to finance the projects through taxe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commercial loans. This paper provides cooperation direction of Korea towards the Philippines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한-라오스 수력 자원 개발 협력 방안

신현준*

1. 서론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연료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메콩강이 길게 흐르고, 풍부한 강수량과 능선이 발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수력발전 자원을 개발하여 'ASEAN의 전력배터리'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여러 대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라오스 수력발전 시장은 많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및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라오스는 최근 한국인 여행자 수가 급증하는 등 많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우호적인 흐름이 보다 더 실효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라오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라오스 개황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236,800km²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1배)의 국토면적에, 약 69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이상 5개국)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주변국들은 해상을 통한 값싼 물류이동과 저임금 생산인력을 기반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용, 국경 통과 및 통관 문제 등이 발생하는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최근까지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지 못해 국내 산업 육성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이 지연되어 왔다.

라오스 정부는 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도차이나반도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젓줄인 메콩강(전체 길이 4,020km)이 1,898km에 걸쳐 길게 흐르고 있다. 1992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The Greater Mekong Subregion)’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는 ‘폐쇄적인 내륙 국가’가 아닌, 동서남북으로 국가와 국가, 생산기지와 생산기지를 연결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라오스 정부는 전국에 10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그림 1)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경제 특구의 대부분은 태국 국경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2014년 태국의 정세불안 이후, 라오스를 대체 생산기지로 고려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1] 라오스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출처: 라오스 기획투자부 홈페이지)



번호	라오스 경제 특구
1	사반세노(Savan-Seno)
2	보탄(Boten)
3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4	비엔티안(Vientiane)
5	씨이씨타(Saysetha)
6	푹효(Phoukhyo)
7	탓루앙 호수(Thatluang Lake)
8	롱타항(Longthanh)
9	동포사(Dongphosy)
10	탁헝(Thakhek)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 출범 이후, 라오스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점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국제 거래에 걸림돌이었던 제도를 발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주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비해 뒤쳐져 있는 라오스는 자칫 경제공동체내 국가들에게 시장이 종속될 위험이 매우 크다. 라오스는 특히 태국, 베트남, 중국(이상 3개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아서 2016년 말 기준, 수입은 80%이상, 수출은 75%이상 이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對라오스 수출은 2015년 170만불에서 2016년 126백만불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향후 주변 국가와의 라오스의 교역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최근 10년간 매년 7.8% 성장하고 있다. 1인당 GDP는 2008년 900달러 수준에서 2016년 2,352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라오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16년 기준, 90.76억불에 달해 GDP 대비 57.3%에 이른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라오스 정부가 허가한 전체 투자의 76% 정도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에 해당된다. FDI 투자 국가들을 살펴보면, 중국이 30%, 태국이 24%, 베트남이 19%이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5위(4.12%)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AEC 국가들 간의 결속이 강화되고, 2016년 발족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한 투자가 늘어나면 이러한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산업으로는 수력발전, 광산업, 임업, 관광을 들 수 있다. 1986년 라오스 시장개방 이후,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FDI 중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분야가 73억 달러(전체 FDI의 29.8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업이 전체 FDI의 24%로 2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최근 광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아 라오스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중국, 일본 등 지하광물 수입국들의 경제가 침체기에 머물러 있어 라오스가 생산하는 지하광물의 국제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국가 역량을 수력발전 자원 개발로 모으고 있다.

3. 라오스 수력 발전 활용 및 개발 현황

라오스의 전력생산은 수력과 화력(석탄)을 활용한 발전으로 나뉠 수 있다. 현재 총 생산전력의 80%는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며, 나머지 20%정도가 화력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라오스의 수력발전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라오스는 높은 연간 강수량과 메콩강 전체 수량의 35%이상이 흐른다는 지리적 이점, 산과 계곡이 발달한 구릉 지형 등 수력발전을 위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다. 최근 라오스 정부는 천혜의 수력발전 자원을 개발하여 전력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라오스는 내수전력소모 규모가 전력생산가능 규모에 비해 매우 적어 수출가능한 잉여전력이 발생된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생산 전력의 60%이상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라오스는 지리적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생산지와 가까이 접해있어 전력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중국과 태국에서 라오스 수력발전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라오스내의 전기 보급률은 1995년 15%에 불과했지만, 2015년 80% 수준으로 높아졌고 2030년에는 98%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오스의 전력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06 GWh에서 2015년 4,239 GWh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는 라오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 가전기기 사용이 보편화되어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산업부분의 전력소비 규모가 2011년 584 GWh에서 1,916 GWh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과거 전무하다시피 미약했던 2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1〉 라오스 전력 소비 현황(단위: kWh, 출처: 라오스 전력청(EDL) 2016년도 연간보고서)

년도	개인	가정	상업	여가(관광)	공공	관개	국제기구	산업(2차)	교육/체육	총계
2011	863,528	1,004,074,384	598,738,092	7,775,644	149,066,348	46,185,606	9,434,332	584,087,955		2,399,362,401
2012	962,327	1,160,983,870	796,716,638	8,828,124	173,918,474	39,451,631	10,427,767	680,870,098	3,010,072	2,874,206,674
2013	1,060,994	1,278,418,942	732,961,715	9,158,372	189,145,863	35,224,449	10,470,415	1,118,211,160	7,371,056	3,380,961,972
2014	1,154,943	1,424,146,614	532,060,747	9,486,531	204,241,041	35,613,634	12,992,443	1,564,405,495	8,379,490	3,791,325,994
2015	1,222,698	1,594,652,533	603,942,856	10,638,632	228,063,538	32,594,405	12,341,733	1,745,320,146	11,605,580	4,239,159,423
2016	1,300,467	1,735,171,427	683,316,824	11,329,138	252,205,976	34,241,745	12,811,390	1,916,375,354	14,657,032	4,660,108,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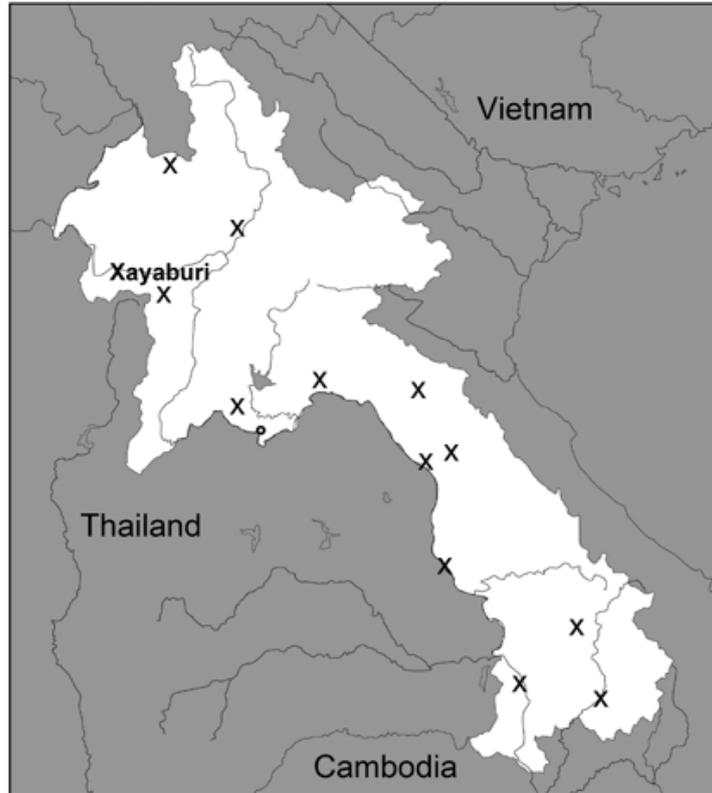
〈표 2〉 라오스의 수력발전 개발규모(출처: 라오스 전력청 및 United Nation)

지역	개발 가능 (MW)	개발 추진 중 (MW)	개발 진행률 (%)
아타푸(Attapeu)	1,718	1,144	66.59
보케오(Bokeo)	401	230	57.36
보이캄싸이(Bolikhamxay)	1,794	1,492	83.17
참파삭(Champasak)	3,625	2,924	80.66
후아판(Houaphanh)	971	910	93.72
캄무안(Khammouan)	1,441	116	8.05
루앙남타(Luangnamtha)	243	236	97.12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2,446	2,135	87.29
우돔싸이(Oudomxay)	1,103	1,051	95.29
퐁살리(Phongsaly)	947	527	55.65
살라완(Salavan)	400	241	60.25
사바나케트(Savannakhet)	320	317	99.06
비엔티안(Vientiane)	1,586	1,127	71.06
시아블리(Xayabouly)	2,275	977	42.95
사이솜본(Xaysomboun)	1,721	253	14.70
세콩(Xekong)	1,623	1,285	79.17
씨앙쿠앙(Xiengkhouang)	1,182	869	73.52
총계	23,796	15,834	66.54

라오스의 최대 수력발전 가능규모(표 2)은 약 23,796 MW에 달한다. 2016년 말 기준, 라오스에서 실제 생산되는 발전 규모는 3,500 MW로 최대 발전 가능 용량의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라오스 수력발전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1980년 후반, 시장개방 초기부터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수출용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림 2를 살펴보면, 라오스의 수력 발전소들이 주변국으로 생산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라오스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수출하는 전력량은 약 2,400MW으로 태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2,000MW로 가장 크다. 태국은 최근 자국내 가스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오스가 태국에 수출하는 전력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2019년부터는 7,000MW의 전력이 수출될 예정이다.

[그림 2] 주요 수력 발전소 위치('X'로 표시, 출처: BMI Laos Infrastructure Report Q3 2017)



라오스는 자국의 풍부한 수력발전 자원에도 불구하고, 전력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최근까지 베트남 등 주변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었다. 전력운영 효율을 높이고 생산전력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송전망 그리드(Transmission Grid) 프로젝트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송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술적으로는 전력수출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수출되어 수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 이는 전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전력 시장 상황 및 전기요금 체계, 기술적 문제(전압, 주파수) 등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협이가 개별 국가가 아닌 AEC 협의체를 통하여 진행된다면 그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전력 관련 건설 사업은 수력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인 라오스 5대 전력 구축 사업 중에서 홍사(Hongsa) 화력발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

업은 모두 수력발전과 관련이 있다. 수력발전소의 현황(표 4)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기준,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는 31개(총 설비용량 1,855MW)이며, 건설 중인 발전소는 44개(총 설비용량 2,854MW)에 달한다. 건설 계획 중인 수력발전소 중, 상업운영일(Commercial Operation Date, 실제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일자)이 확정된 사업은 총 90 건(총 설비용량 6,481MW 규모)이며, 사업추진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상업운영일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총 233 건(설비용량 7,206 MW)으로 현재 많은 수력발전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표 5 참조).

〈표 3〉 라오스 5대 전력 구축 사업(출처: BMI Key Projects Database)

사업명	설비용량(MW)	추진 현황
파몽(Pha Mong) 수력발전	2,670	계획
반쿰(Ban Khoum) 수력발전	2,330	사업타당성조사
홍사(Hongsa) 화력발전	1,878	완공
루앙 프라방(Laung Prabang) 수력발전	1,410	계획
팍 라이(Pak Lay) 수력발전	1,320	사업타당성조사

〈표 4〉 라오스 수력 발전소 현황(출처: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단계	발전소	설비용량
가동 중	15MW이상: 18개	15MW이상: 1,788MW
	15MW이하: 13개	15MW이하: 67MW
건설 중	15MW이상: 21개	15MW이상: 2,596MW
	15MW이하: 23개	15MW이하: 258MW

〈표 5〉 라오스 수력 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출처: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상업운영일	발전소	설비용량
확정	15MW이상: 41개	15MW이상: 6,079MW
	15MW이하: 49개	15MW이하: 402MW
미확정	15MW이상: 40개	15MW이상: 5,383MW
	15MW이하: 193개	15MW이하: 1,823MW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사업 분야는 발전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변전시설 개선 사업이 있다. 라오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전, 변전 시설은 이미 많은 설비가 노후화되어 개선 사업이

시급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소, 송배전 시설 교체 주기는 약 40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라오스는 햇볕이 강하고 비가 자주 오는 기후로 인해 설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변전소는 준공된 지 25년 이상 지났고(표 6 참조), 기자재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식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6〉 라오스의 주요 수력 발전 시설 현황(출처: 라오스 산업부)

지역	발전소	준공년도	Grid (전력망)	규모 (MW)	설비용량 (MW)	평균 생산량 (GWh/a)
비엔티안	Nam Ngum(Nam Song 포함)	1971	C1	2x15	30.0	1021.0
		1978		2x40	80.0	
		1984		1x40	40.0	
루앙프라방	Nam Dong	1970	C1	3x0.336	1.0	3.0
참파삭	Selabam	1969	South	3x0.668	2.0	30.0
살라완	Xeset 1	1994	South	1x3	3.0	180.0
		1991		2x3	6.0	
		1991		3x13	39.0	
보이캄싸이	Nam Phao	1995	C1	3x0.5	1.5	-
비엔티안	Nam Leuk	2000	C1	60	60.0	249.0
총 계					262.5	1483.0

〈표 7〉 라오스의 송배전 손실률(%), 출처: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3	17.9	15.3	13.7	12.0	10.1	10.3	12.0	8.9	10.2

라오스 정부는 전력 송배전 손실률 감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의 송배전 손실률은 2006년 19.3%에서 2015년 10.2%로 크게 개선되었다(표 7 참조).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이 4%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라오스의 송배전 손실률은 아직 높은 편이다. 라오스의 송배전 효율성을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GIS 옥내화 등 대폭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4. 한-라오스 수력 발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라오스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주변 국가들에 비해 시장개방의 역사가 짧고, 국가 경제 규모가 작다. 라오스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업들은 당장 불안정한 정치상황,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패,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소수 민족간 분열 가능성, 부실한 법적 기반 등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이 라오스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자금 확보와 회수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라오스 정부는 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 정부가 추후 상환하는 사업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전형적인 후진국인 라오스의 공공사업은 사업 입찰, 자금 연계, 건설 실행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사업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열악한 라오스 공공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관련 기관과 함께 진출을 도모해 사업의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수력발전과 같은 공공사업은 사업특성상 정책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동반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공공시장은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시장인 것이다. 우리 기관의 사업 참여는 의사결정주체인 라오스 정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특히 한-라오스 협력의 범위가 발전시설 건설이라는 물리적 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국가차원의 부(副)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까지 연결된다면 민관 협력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은 전기요금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중심의 산업변화를 필요로 한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전문 인력 양성, 전력 생산 원가 절감과 기술개발 등 라오스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현지시장을 진출하는데 있어 더없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라오스와 변전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7월, 라오스 전력청(Electricite Du Lao)과 송변전 기술 전수 및 변전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10월에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유티 변전기자재를 활용해 라오스 변전교육관을 개소하는 등 여러 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다.

둘째,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AEC 맹주 국가의 기업들과 라오스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 ‘세피아안-세남노이(Xe Pian-Xe Namnoy) 수력발전’ 사업은 우리 민관이 태국의 전력수요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SK 건설(주)과 서부발전(주)은 태국 전력청의 자회사인 라차부리(Ratchaburi)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반적으로 BOT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일정 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후, 발주자에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컨소시엄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에서부터 건설, 운영까지 약 30년의 사업권을 가지게 되었다. 역할 분담을 보면, 발전소 시공은 SK건설이, 기술자문 및 발전소 운영관리는 서부발전이, 생산된 전력 판매는 태국 전력청(EGAT)이 담당하여 생산된 전력은 27년 동안 태국에 판매된다. 현지 경험이 풍부한 태국 기업과 동반 진출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생산 전력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투자 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출 수 있다.

셋째, 라오스는 국내 산업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의 기자재와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어 우리 기업이 라오스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파트너 기업이나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동반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력발전 기자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자금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위치한 작은 나라임에도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라오스는 수력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라오스 수력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보와 기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력발전분야에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가 늘어 이를 기반으로 한-라오스, 더 나아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Lao PDR Public-Private Partnership Policy
- 2) 세계은행(World Bank)의 Laos Country Report
- 3) United Nation 홈페이지
- 4) BMI 2017년 3분기 보고서(Infrastructure 및 Power 부문)
- 5) 라오스 전력청(Electricite Du Laos) 2016년 연간 보고서
- 6)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발표자료
- 7) 라오스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홈페이지
- 8)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홈페이지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Korea and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hereinafter, Laos) has been diminished, mainly due to various travel TV shows broadcasted in Korea. It is about time to look into other areas to enhanc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untries around the globe are shown high interest in the sources of clean renewable energy. Hydropower is one of the most popularly produced and consumed clean renewable energy. Thanks to the Mekong River, massive seasonal rainfalls and the hilly landscape, Laos is considered as a country with a huge potential in developing hydropower generation resources.

Laos' hydropower generation is an attractive market to Korean companies. The Government of Laos puts a high priority in utilizing the resources to boost its economy. More recently, the Government has set out its goal to become 'the Battery of ASEAN'. For those companies targeting Laos' hydropower generation market, the formation of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15 can lead to better business opportunities. Laos can be thought as the gate to the neighboring hydropower generation markets such as Vietnam, Thailand and Myanmar.

This article provides the overview Laos' economy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Laos' hydropower gener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suggests the ways to enhance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in hydropower generation.

신남방정책과 한국-말레이시아의 동반자적 관계, 회고와 전망

이경찬*

동남아시아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가까운 필리핀은 4시간, 가장 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는 7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이 소요된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이다. 비단 이런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거리 또한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주목할만한 변화가 양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양자 간의 심리적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과 투자 등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관광이나 투자, 결혼이민, 이주노동자, 유학 등 인적교류가 크게 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신남방정책과 한국-아세안 관계

한국-동남아시아 관계 긴밀화의 저변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기구로서의 아

* 한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現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장 및 인도네시아교류원장

세안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인식과 관심 증대라는 변화가 깔려 있다. 오늘날 21세기 기회의 땅, Next-China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이자 투자 대상 지역이며, 매년 약 400만 명이 넘는 양측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인적 교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순방 중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문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외교 수준으로 강화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지역의 중견국가인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지역 질서 확립에 일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동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대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약소국으로서 최소한의 국가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67년 창립되어 작년으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그간 동남아시아 회원국 간 신뢰구축과 역내 평화 구현을 위한 핵심적 협력 기제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그런 성공적 토대 위에 2015년 말에는 공식적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하였다. 아태 지역의 많은 역내 국가들은 6억 3천만의 인구 규모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GDP 규모 약 2.5조 달러로 세계 7위권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아세안의 발전과 영향력 확대 과정에 주목하여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을 앞다투어 서둘러왔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그리고 말레이시아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역공동체 차원의 본격적인 협력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80년대 말로서 안보와 무역, 금융, 환경 등 개별국가 수준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지역의 문제를 지역협력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목적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세안과의 관계 수립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의 큰 외교적 도움이 있었던 것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1980년대 말 필자가 국비유학생으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 수학할 때의 일이다. 당시 주 말레이시아 대사였던 홍순영(전 외교부장관) 대사가 현지 대학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하던 중 주재국인 말레이시아의 바다위(Abdullah Badawi) 외교장관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잠시 후 돌아온 홍대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정말 기쁘고 경사스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아세안이 우리나라에 부분대화상대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대화상대국 지정을 위해 지난 7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거둔 외교적 수확이라 홍대사가 흥분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1989년 당시까지 개도국과 대화관계를 맺지 않았던 아세안은 내부 논란 끝에 한국을 위해 특별히 부분대화상대국이란 지위를 고안하여 대화관계를 개시한 것으로, 당시 홍대사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던 1989년 11월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된 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후일 마하티르 전임 총리의 뒤를 이어 2003년 말레이시아의 제5대 총리가 된 이후에도 바다위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것은 1981년 집권 이후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강화와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시행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전폭적 지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의 팬을 자처하며 지인들에게 마하티르의 저서인 『말레이 딜레마』를 선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던 홍대사와 말레이시아 고위 정부 인사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한-아세안 외교 비사의 한 토막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한국은 1991년 아세안의 완전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되었고, 1998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설립 제안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2010년에는 마침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자가 명실 공히 21세기 지역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국-말레시아 관계의 역사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초기 양자 간 관계는 정치적 무관심과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부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양국은 서로를 주요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두지 않았는데, 이는 양자가 공히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약소국이라는 점과 그들이 속한 각 지역의 지정학적 요구에 매몰되어 공유된 비전과 그 속에서의 상대국의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적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제 1의 국가 목표였으므로 약소국과의 관계 강화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와 국가건설 과정에서 전쟁을 겪은 한국과 유사하게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말라야공산당(MCP)의 게릴라식 무장봉기에 따라 1948년에 국가비상사태(Emergency)를 선포하고 영국군과 함께 대대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의 소위 해방전쟁과 중국의 한반도 무력개입에 고무된 말라야공산당의 준동,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좌파 중국계 신문들의 선전선동은 신생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다.

독립 초기의 안보불안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후반까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모두 자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도미노이론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위협에 맞서 영국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도 모스크바-베이징-평양-하노이-자카르타로 이어지는 공산주의의 축선이 말레이반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었다.

한국전쟁과 비상사태를 통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경험은 양국 지도자들의 인식과 나아가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6.25 이후 지속적

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싸워온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발전 경험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의 양자 관계는 일반적이며 평면적인 약소국 간 관계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이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에 머무르던 한국-말레이시아 관계는 1980년대 초 양국에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협력관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그에 더하여 인적교류, 기술협력 등 사회문화적 교류도 크게 확대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부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역협력의 강화 추세 속에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신흥공업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서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특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취임 직후 동방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한편, 아세안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역내 영향력 확대에 주목한 전두환 대통령이 대 아세안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마하티르는 정부 고위공무원들에게 보낸 정책서한에서 동방정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동방정책은 말레이시아의 발전노력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국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이들의 근면성, 근로기강, 애국심과 애사심,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전통, 노동생산성과 품질의 강조, 효율성의 증진, 노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경영 시스템 및 기타 국가의 발전에 유용한 요소들이다.” 이렇듯 동방정책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희생정신 등 정신적 요소들을 본받음으로써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경쟁력과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동방정책의 목표에 따라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및 정신적 가치와 직업윤리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1983년 양국 간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회의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 및 기술훈련, 이공계 학생들의 한국대학 유학,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의 한국기업 단기연수,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의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연수 등 4개 분야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983년 초 53명의 첫 번째 연수단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3년까지 10년 동안 단기연수 294명, 학위과정 89명, 전문대과정 78명, 공무원연수 279명 등 총 793명이 각종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였으며, UM, UKM, ITM 등 말레이

시아대학에서 개설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과정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증대를 시작으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1990년 한국은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 이어 말레이시아의 네 번째 주요 수출대상국으로까지 부상하였다. 양국 간 교역 패턴은 한국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전기 전자제품, 통신장비, 운송기계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형태로서 이는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 신흥공업국인 한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 중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건설부문으로서 1992년 말레이시아는 두 번째로 큰 해외 건설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 마하티르 총리는 동방정책에 따른 기술전수의 대가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도왔는데, 중동건설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 건설업체에게 말레이시아는 중요한 새로운 건설시장이 되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쌍둥이 빌딩인 KLCC와 동남아시아 최장의 연육교인 페낭대교, 메이뱅크 빌딩, 샤알람사원 등 잇달아 말레이시아에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완공하면서 동남아시아 건설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990년대 동방정책을 계기로 관계 강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양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각각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갔다. 2013년 기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교역규모는 US\$197억으로 아세안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8%를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10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CIS, 이라크에서의 에너지 탐사 및 개발프로젝트 공동수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조인하는 등 원자력, IT, 통신, 운송, 바이오 녹색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에도 합의하였다.

2000년대 들어 특히 주목할 현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와 인적접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 확산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K-pop, 한국음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만화가 인기라는 현지 신문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한류 열풍은 비단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와 관심의 수준을 넘어 음식, 패션, 화장품 등 한국 소비자 제품의 전반적인 선호도 증가 및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말레이시아는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학연수 국가로 떠오르고 있어서 최대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학생들이 영

어연수를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찾고 있으며, 정규학교에도 1천명 내외의 한국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연수 및 유학대상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와 적정한 학비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 만족스러우며 사회적 여건과 치안이 안정된 때문이다. 또한 다종족, 다문화, 다언어국가라는 사회적 특징 때문에 중국어와 말레이어 등 여타 외국어 학습 여건이 양호한 점도 어학연수생들이 말레이시아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교육부와 사립교육기관협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등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정능력이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활력의 요소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인들이 정식 노동허가 없이도 일정한 재정능력만 입증되면 자유롭게 말레이시아에 정착을 허용하는 MM2H(Malaysia My Second Home) 비자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국인들의 이주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발전된 경제 수준을 구가하는 가운데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여 안정된 경제·정치적 상황, 잘 갖춰진 사회 인프라, 저렴한 물가, 양호한 치안, 따뜻한 열대기후,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거의 없으며, 영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언어 장애가 적은 점,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됨으로써 식생활에 문제가 없는 점,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으로 유럽 및 타 동남아 국가로의 여행이 용이한 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매력적인 이민대상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및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과 자녀교육, 기타 각종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커뮤니티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 수는 약 1만 5천명 내외로 전 세계에서 16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5번째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양국 관계의 전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동방정책 30주년을 맞아 제2차 동방정책(LEP2.0)의 실시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2013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 중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는 제2차 동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1차 동방정책과 달리 2차는 교육 훈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나집은 첨단기술과 고도의 숙련된 기술에 초점을 맞춘 LEP2.0이 말레이시아가 국제경제의 가치사슬에서 보다 높은 위치의 고소득 국가군으로 진입함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곧이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향후 30년 간 양국관계의 기본적 틀을 제공할 LEP2.0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수차례의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4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나집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하는 한편 LEP2.0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행방안 도출을 책임질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LEP2.0을 통한 협력은 ODA나 EDCF 프로그램 등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시혜적 관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LEP2.0을 통해 아세안과 서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1차 동방정책이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LEP2.0은 녹색기술과 ICT,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협력과 실질적인 교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LEP2.0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 일과,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를 포함하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하여 상호협력 관계의 실질적 수준을 고도화시키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LEP2.0은 기존의 긴밀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역할

이상의 양국 관계를 돌아볼 때 말레이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는 먼저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에서 기인한다. 말레이시아는 한반도에 비해 영토 규모가 1.5배 정도 크고,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EU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성장한 아세안의 핵심 회원국이자 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이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해양실크로드의 동방거점이 되었던 말레이반도는 태평

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최단 해상교통로인 말라카해협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말라카해협을 통한 동서교역이 전 세계 물동량의 1/4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체 에너지원의 98%를 중동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라카해협은 한반도의 생존을 위한 경동맥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지니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중국 연해에서 출발하여 서태평양, 인도양, 지중해, 아프리카를 연계 개발하려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 개설 구상을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자본투자와 기술지원, 개발협력 등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2016년 말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는 베이징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함 개발을 포함해 국방, 철도, 에너지 등 28개 사안에 합의하였다. 해당 합의에는 사회 인프라 건설, 농업, 교육, 세금, 세관,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협력이 망라되어 중국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좋은 이웃”이라면서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협력, 개발, 번영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원의 80%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중국도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중요성과 아세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으로 최근에는 한류를 통한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더욱 가까워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협력기구(OIC)와 비동맹의 주요 회원국이자 아세안과 APEC 등 아태지역의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외교력을 검증받은 국가이다.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말레이시아의 교량 역할을 감안할 때 말레이시아는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우리가 추진하는 아세안 진출의 거점이 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나아가 할랄산업의 세계적 거점이자 이슬람금융과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우리 기업들의 이슬람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할랄산업이 약 2조 달러의 막대한 시장규모로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이웃한 말레이시아를 통하여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가치는 동아시아 지역협

력의 동반자로서 말레이시아의 역할에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더욱 높아진 국가적 역량과 경제력, 지역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쌍무적 관계뿐 아니라 ASEAN, APEC, EAS 등 다양한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나아가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확대 심화를 위한 우호적 협력자로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핵심인 ASEAN+3(APT) 체제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파트너이자 강력한 지지자가 되고 있다

일대일로를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앞서 2015년 일본은 1,100억 달러 규모의 '고품질 인프라 기금'을 설립하고 인도와 함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을 제의한 바 있다. 바야흐로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인도양으로까지 경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 및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구도의 형성, 지역질서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소의 증대에 대해 많은 지역 국가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이나 상호 배제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질서 형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당면한 어려움과 장애를 관리함에 있어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조절과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좋은 파트너로서 상호간 전략적 대화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Prosperity)의 핵심가치는 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류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과거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단선적 양자 관계를 인적·문화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포괄적이며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LEP2.0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이에 접점을 찾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구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이래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우호적 양국 관계를 돌아볼 때 말레이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당면한 어려움과 장애를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조절과 대화의 중재자로서 상호간 전략적 대화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Prosperity)의 핵심가치는 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류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과거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단선적 양자 관계를 인적·문화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포괄적이며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LEP2.0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이에 접점을 찾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구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onsidering the close and friendly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alaysia since the 1960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latter may become an important leverage in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for ASEAN".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faced by East Asian regionalism which has been evolving under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both Korea and Malaysia need to expand mutual strategic dialogue as a mediator in the control and communication of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In the process, the core values of People, Peace, and Prosperity pursued by the New Southern Policy is expected to become a new channel for increased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hich extends from the previous commodity trading centered relationship to the human and cultural dimension, the new administration of Moon Jae-in should strive for finding points of contact between the LEP2.0 pursued by Malaysian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the New Southern Policy on the other.

아세안의 대내적, 대외적 생존 전략과 한국

이재현*

1. 서론

동남아국가연합 혹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의 생존전략 혹은 대외정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세안 집합적 차원에서 대외정책이나 생존전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동남아 개별 국가의 생존전략이나 대외정책은 개별 주권국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없다. 그러나 아세안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일체로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생존전략을 추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아세안은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의 단순 합인지, 아니면 단순 합을 넘어서 보다 큰 부분이 있는지, 그도 아니면 아세안에 속한 개별 국가의 생존 전략과 대외정책과 별개로 아세안만의 생존전략과 대외정책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아세안의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집단적으로 관찰하면 일종의 대외전략 혹은 생존전략이라 부를 수 있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 본 연구는 이 패턴 속에서 관찰되는 바에 초점을 둔다.

* Murdoch University 정치학 박사
現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객원교수

대외정책, 생존전략 측면에서 아세안은 매우 독특한 존재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들의 지역적 협력 시초가 유럽연합이라면 아세안은 아마도 두 번째로 나타난 유사한 형태의 지역협력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아세안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했다. 아세안 시작 초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약소국의 지역연합을 보는 외부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많은 내외적 문제를 안고 있는 아세안이 성공할 것이라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다른 차원에서 아세안의 통합의 수준 (level of integration)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높지 않다. 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를 지향하는 현재도 느슨한 국가 간 협력 혹은 연합체 정도를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도 아세안 경제통합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통한 역내 상황 안정이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정치안보 차원에서도 역내 국가들 간 갈등을 해결할 분쟁해결 제도도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아세안은 국제무대에서 개별 국가의 무게 합 이상의 힘을 발휘해온 것이 사실이다. UN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해왔고, 현재도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Weatherbee 80-82).

이 글에서는 이런 아세안의 생존전략, 대외전략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전략 및 생존전략에 주는 함의를 찾아본다. 먼저 아세안의 생존전략을 두 단계 즉, 아세안 대내관계 조정의 전략과 아세안의 대외 관계에서 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차원의 전략은 명확히 구분된다. 전자는 아세안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건설 이후 어떻게 아세안 내 서로 다른 국가들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아세안 외부 주로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강대국의 압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아세안 생존전략은 한국에 역시 서로 다른 세 차원에서 함의를 준다. 아세안 대내 조정은 한국의 동북아 지역협력 전략에 대해서, 아세안의 대외 전략은 한국의 대 강대국 전략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관계에서 이런 아세안의 대외전략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아세안에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함의도 줄 수 있다.

2. 아세안의 대내적 생존전략

일반적으로 주권국가 간 지역협력은 경제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안보 협력으로 이동

한다는 주장이 많다.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지역협력 혹은 통합의 장점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숫자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아세안+3(ASEAN+3) 지역협력의 경우 이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설명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Terada 261-264).

그러나 많은 지역협력이나 통합의 노력이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그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 Coal and Steel Community)는 다분히 안보적인 이유에서 출발했다. 독일이 일으킨 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군사력 건설의 출발점이 되는 석탄과 철강을 유럽 차원에서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안보 차원의 이유가 철강석탄공동체의 시작이었다.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경우에도 물론 경제적인 목적이 창립 초기부터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에나 나타났고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 냉전 이후의 일이다. 창립 초기인 1960년대에는 정치안보적인 목적이 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이런 아세안의 정치안보적 목적은 이후 아세안 내 질서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아세안의 창립이 정치안보적인 목적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세안을 규정하는 근본 질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아세안 국가들 간 관계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아세안의 내적인 생존전략과도 직결된다. 아세안 창립의 정치안보적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최초 아세안 형성을 가져왔던 5개국, 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대내적, 대외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60년대 초 아세안 5라 불리는 이 5개국을 둘러싼 국내, 지역, 그리고 국제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다. 모두 신생 독립 국가 혹은 독립을 성취한지 10여년 정도 지난 국가들로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모두 겪고 있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국내 정치, 사회적 안정이 매우 중요했다. 국내 정치, 사회적 안정을 기해야만 그 바탕 위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민족주의 열망이 동원했던 국내적 지지는 이런 경제성장이라는 유인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했다. 아세안 5 국가들은 모두 대내적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했다.

당시 동남아 역내 환경은 이런 개별 국가의 열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레이시아가 1960년대 초 사바(Sabah), 사라왁(Sarawak),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합해서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재출범

할 즈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도달했다. 지역의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을 병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수카르노(Sukarno)의 판단으로는 이는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되었다. 이 합병의 배후에 영국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Meridith 173-174). 필리핀 역시 말레이시아가 사바, 사라왁을 병합하는 것을 두고 말레이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현재는 필리핀에 속한 술루(Sulu)의 과거 역사를 보면 술루 왕국의 지배가 이 지역까지 미쳤고, 따라서 필리핀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태국 남부 무슬림이 집중된 알라(Yala), 송클라(Songklah), 니라와띠(Nirawati), 빠따니(Pattani) 주 등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Measn 231-235). 이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 배후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반면 싱가포르는 인구의 대부분이 화교로 이루어진 작은 섬으로 생존의 문제가 있었다. 부존자원, 인구 측면에서 독자 생존이 쉽지 않은데 추가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는 무슬림 국가, 그리고 이 두 국가와 인종적, 언어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라는 큰 세 국가에 둘러 싸여 있었다(Acharya 14-17). 이런 상황에서 화교의 섬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이 있었고 나아가 주변 국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65년 지역의 가장 큰 국가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도네시아가 정권 변동에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대결정책(Konfrontasi)을 중단했고, 이런 정치적 변화는 아세안 창립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당시 지역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이웃국가와 관계 개선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주변 국가와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한 개별 국가들이 국내적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외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협력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을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방국가와 친한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반제국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인도네시아), 미국과 동맹국(태국, 필리핀)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Severino 6-11). 경제적 규모도 서로 달랐고, 개별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적 경제 관계 필요성도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큰 갈등을 겪은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세안을 규정하는 질서인 아세안의 방식(ASEAN Way)은 이런 맥락 속에서 등장했다. 아세안의 방식은 흔히 주권존중-내정불간섭(respect for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그리고 협의와 합의(consultation and consensus)로 요약된다(Haacke 49-51). 전자의 경우 지역협력을 하되 상호 국내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히, 개별 국가의 국내 정치, 민주주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각 국가는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협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모든 아세안 차원의 결정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보다 중요하게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국가라도 적극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명백하고 적극적인 반대가 부재한 경우 이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 내 의사 결정이 보다 강한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아세안 내 작은 국가들에게 최소한의 거부권(veto power)을 보장하는 질서다.

이런 아세안의 방식은 아세안 시작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켜지고 있다. 이런 아세안의 방식이 지켜지는 이유는 이 방식이 아세안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방식이 지금까지 아세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전쟁 직전까지 갔던 아세안 5개 국가가 서로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심과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에도 불구하고 1967년 전격적으로 지역협력을 시작하고 협력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세안의 방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내정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확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협력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질서 하에서 지역 국가 간 협력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좀 더 내구성 있는 협력의 제도들을 만들어 냈다. 이런 제도들 역시 아세안의 방식을 준용했고, 이런 제도 안에서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더욱 강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협력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신뢰를 넘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아세안 단일성(ASEAN Unity)이라는 생각도 가져오고 상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변 아세안 국가들이 자신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믿음도 가져오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협력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아세안은 2000년대 후반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건설하겠다는 수준으로까지 협력을 심화하게 되었다.

3. 아세안의 대외적 생존전략

아세안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아세안 창립 이전, 창립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강대국 경쟁관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세안의 대외전략은 아세안의 대 강대국 전략인 동시에 아세안의 생존전략이 된다. 아세안의 대외 전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아세안 국가들을 둘러싼 강대국으로부터 아세안을 보호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강대국으로부터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런 아세안의 대외 전략 환경, 대 강대국 전략 환경은 아세안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다.

아세안 창립 직전인 1960년대 아세안 5 국가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세안 5 국가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이다. 이는 대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과도 직결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세안 창립의 추동력도 강화되었다. 특히 공산주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동남아 지역으로 공산주의 수출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동남아 국가 내 자생적 공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중국 관계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매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Tarling 176-194).

더 나아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모두 자생적 공산주의 움직임이 있었다. 태국의 경우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이후 공산화된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그 너머 베트남까지 국경을 직, 간접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역시 특히 일본 식민지 시기 세력을 확장한 공산주의 움직임으로 인해 1960년대까지 비상통치(emergency) 시기를 겪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산당(Malayan Communist Party)은 화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본주의 대립뿐만 아니라 종족간 대립 즉, 말레이인-화교의 대립 구도 역시 띠고 있었다.

싱가포르도 현재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초기에는 중도세력과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양분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말레이시아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관유(Lee Kuan Yew)를 중심으로 한 PAP 잔류파들은 탈당한 사회주의 세력인 사회주의 전선(Socialist Front)의 처리문제로 고심했다(Ho 187-190).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 시기 까지만 해도 군(민족주의)-공산주의-이슬람의 세 정치세력을 중심축을 수카르노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으나 1965년 공산주의 세력을 쿠데타 움직임을 무력화 시키며 수하르토

(Suharto)가 전면에 나선 이후 철저한 반공으로 돌아섰다(Berger 41-44).

두 번째 환경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대국의 간섭과 그에 따른 동남아 약소국들의 자율성 축소 가능성이다. 1940년대 후반으로부터 1950년대 주로 독립을 얻은 아세안 5 국가들은 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국가가 식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동남아를 둘러싼 강대국 혹은 서구 열강의 재식민지화 시도, 혹은 이들 내정에 간섭하려는 강대국의 시도에 무척 민감했다. 이런 아세안 국가의 경험과 더불어 1950년대 이후 이 지역을 지배한 냉전 구도는 동남아 국가들을 강대국의 간섭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1950년대부터 이 지역을 지배한 일차적 강대국 경쟁 구도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 경쟁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간섭도 포함된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잠시 강대국의 잠재적 간섭 위협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곧 이어 중국의 부상이 이 지역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잠시 동안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이 경쟁하는 시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승리가 거의 명확해졌다. 그러나 동남아를 둘러싼 강대국 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2000년대 후반 이후 부상한 중국의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안보 위협과 미국의 대 아시아 피봇 정책이 다시 한 번 동남아 지역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졌다(이재현 2011, 145-150).

이렇게 볼 때 동남아 지역과 이 지역 국가들은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강대국 경쟁 구도에 놓여 있었다.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려는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 동남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외 환경이다. 이런 대외 환경 속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생존을 모색해야 했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야 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내적 단결, 약소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던 노력이 아세안 창립의 대외적 배경이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외교 노선으로 알려진 ‘적극적이고 독립적인(Aktif dan Bebas, Active and Independent)’ 외교 노선이 아세안 전체를 규정하는 대외정책 노선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가진다(전제성 180-184).

이런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아세안의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향을 택한다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적극적인 배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외부세계와 교류를 차단하여 강대국의 진입을 막는 방법이나 현실성이 높지는 않다. 힘으로 외부 세계 혹은 강대국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아세안의 물리력이 소련, 미국, 중국 등을 차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반면 소극적인 정책은 강대국과 관계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전략들을

나열하고 가급적이면 강대국에 대해서 등거리를 유지하고 전술적으로 강대국 관계를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전환, 변환하는 전략이다.

아세안의 기본 정책 방향은 이런 소극적인 대 강대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고, 강대국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어떤 강대국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일종의 헤징 (hedging) 전략이다(Roy 306-308). 그리고 이런 헤징 전략의 이면에는 필수적으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의 전략이 함께 한다. 어느 특정 강대국이 지역에서 지배적이지 않도록 아세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과 소련이,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강대국과 긴밀하지만 너무 깊지 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세안의 대 강대국 전략이다. 나아가 이런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면 강대국을 아세안의 방식으로 사회화(socialise)하여 아세안에 대한 강대국의 정책을 아세안의 이익에 맞게 형성하는데 까지 나아간다(Ba 158-160).

지금까지 언급한 헤징 전략이 아세안이 강대국에 대해서 양자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라면,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아세안이 새로 들고 나온 지역 다자주의는 강대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을 아세안 입장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다자적 방법과 대 강대국 양자적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이재현 2012, 64-73).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는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의 무기라 할 수 있다.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다자 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마련이다. 약소국은 이런 규칙과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강대국을 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생긴 동남아 지역 힘의 공백을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다자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서 메워보려 했다. 이런 배경 하에 등장한 것이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Mahathir)가 주창했던 동아시아경제그룹(East Asia Economic Group, EAEG)이었다. ARF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반면, EAEG는 실패로 돌아갔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은 더욱 확대되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로 확대된다. 이런 지역 다자협력은 대부분 아세안이 주도해서 지역 강대국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이는 아세안이 지역 국가와 강대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특정한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아세안의 전략은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을 가진다. 첫 번째는 아세안의 단결(ASEAN Unity)이고 두 번째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다. 비교적 약소국의 모임인 아세안이 강대

국과의 양자관계, 그리고 다자 틀 내에서 강대국과 관계,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힘 혹은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파편화된 약소국들은 강대국 앞에서 무력하다. 아세안이 비교적 강대국 관계를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세안 10개국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느 강대국이라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10개국이 하나로 움직이는 아세안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어야만 하고 이런 역학 관계 속에서 아세안의 대 강대국 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10개국이 하나의 단위로 강대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세안의 단결은 대 강대국 관계 관리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이자 아세안의 대 강대국 전략 특히 다자 관계를 이용한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이 지역 다자협력 구도에서 항상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고 개념이다(Caballero-Anthony 566-568). 아세안 중심성 개념은 놀랍게도 아세안과 함께 하는 다자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강대국이 인정하는 개념이다.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중견 국가들도 아세안과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 중심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강대국들의 이런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인정은 아태 지역 다자협력에서 항상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아세안에게 특별한 권위 혹은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아세안중심성이 적용된 아세안+3이나 EAS는 아세안의 방식(ASEAN Way)이 내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아세안 중심성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받아들여 질 때 약소국 모임인 아세안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4. 결론: 한국의 생존 전략에 대한 함의

지금까지 서술한 아세안의 생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아세안 역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아세안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아세안과 외부 강대국 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이다. 아세안의 방식은 1960년대 아세안 창립 당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세안 국가들을 협력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권존중-내정불간섭, 그리고 협의와 합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참여 국가들의 국가 이익에 대한 안전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 내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비토권을 갖게 하여 지역 국가들을 협력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세안의 방식이다. 이후 아세안의 방식이

라는 큰 질서 속에서 참여 국가들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고, 이런 아세안 협력은 지금까지 50년을 지속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아세안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강대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외적 자율성을 증시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런 대외전략은 강대국에 대한 배제가 아닌 일종의 해징, 즉 모든 아세안에 관련된 강대국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내에서 강대국 간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충분히 활용해 자신의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고, 어느 한쪽 강대국으로 기울지 않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 속에서 아세안 단결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아세안이 강대국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이 존중되는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해서 지역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인정받는 동시에 다자협력을 강대국의 힘을 통제하는 기제로 활용해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세안의 전략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함의를 준다. 먼저 한국이 속한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협력,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해 지역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가 있을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동남아 국가들, 특히 아세안 5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현재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3국 관계 보다 훨씬 적대적인 관계였다. 아세안은 이런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967년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 기구를 만들어 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여기에는 아세안의 방식이라는 특수한 질서가 크게 작용했다.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적 긴장이 상존하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아세안의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물론 동북아 3국의 상황은 1960년대 아세안의 상황과 다르다. 동북아 3국은 중국이라는 글로벌 파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역시 약소국은 아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이 국내, 국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었다면, 현재 동북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적 상황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이고 안보적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은 아세안 형성 시기 만들어진 아세안의 방식이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수정을 거쳐 동북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에서 이 3국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아세안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동북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과 한반도 역시 아세안 국가들처럼 강대국의 압력 하에 놓여 있다. 북한의 위협 관리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중시해야 하는 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이웃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상반되는 압력 하에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 놓여 있다. 아세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아세안은 이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아세안의 대 강대국 전략이 한국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는 북한 문제가 있고, 아세안은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힘을 합쳐 자신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한국이 놓인 강대국 파워 게임의 구도는 유사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의 대외적 생존 방식을 한반도에 맞게 수정해서 한국의 대외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아세안과 한국이 유사한 강대국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 한-아세안 협력 차원에서 이런 공통의 강대국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세 번째로 한-아세안 관계,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서도 아세안의 생존 방식은 일정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한-아세안 관계는 지난 20여년 넘는 기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한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아세안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한-아세안 간 경제, 사회문화 협력은 정부 간 협력이 시작되면 향후 발전은 지속적으로 사적 부문에 의해서 추동된다. 기업과 다양한 사회단체 및 주체들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를 두텁게 만든다. 반면 정치, 안보 협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일이다. 정치, 안보 협력에는 사적 부문 행위자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서 정치, 안보 협력의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앞서 관찰한 아세안의 대외 전략이 향후 한-아세안 정치 안보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아세안의 대외 전략에서 강대국 관계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일정한 이익을 공유하고 대 강대국 관계 관리 차원에서 한-아세안 간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세안 중심성, 지역의 다자협력 촉진은 아세안의 대 강대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국제관계에서 아세안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한국과

아세안이 힘을 합쳐 지역 다자협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서 향후 한-아세안 협력, 특히 정치 안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재현. 2011. “미국의 대 동남아 재관여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 참여: 달라진 환경과 새로운 도전” 『외교안보연구』 7:1. pp. 139-170.
- 이재현. 2012.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동아연구』 31:1. pp. 49-82.
- 전제성. 2000.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아세안 리더십” 박사명 외. 『동아시아공동체의 동향과 과제: 협력에서 공동체로』 이매진. pp. 179-207.
- Acharya, Amitav. 2008. *Singapore's Foreign Policy: The Search for Regional Order*. New Jersey: Institute of Policy Studies/World Scientific.
- Ba, Alice D. 2006. “Who's socializing whom? Complex engagement in Sino-ASEAN relations” *The Pacific Review*. 19:1. pp. 157-179.
- Berger, Mark T. 2009. “The End of Empire and the Cold War” in Mark Beeson e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Palgrave Macmillan: Houndmills. pp. 29-45.
- Caballero-Anthony, Mely. 2014. “Understanding ASEAN's centrality: bases and prospects in an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The Pacific Review*. 27:4. pp. 563-584.
- Haacke, Jurgen. 2003. *ASEAN's Diplomatic and Security Culture: Origins, development and prospects*. Routledge: London.
- Ho, Khai Leong. 2010. “Singapore” in Rodolfo C. Severino, Elspeth Thomson and Mark Hong eds. *Southeast Asian in a New Era: Ten Countries, One Region in AS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pp. 179-198.
- Means, Gordon P. 2009. *Political Islam in Southeast Asia*. Strategic Inform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Centre: Petaling Jaya.
- Meridith, Weiss L. 2010. “Malaysia-Indonesia Bilateral Relations: Sibling Rivals in a Fraught Family” in N. Ganesan and Ramses Amer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Between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Roy, Denny. 2005.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2. pp. 305-322.
- Severino, Rodolfo C.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n ASEAN Community*.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Tarling, Nicholas. 2010. *Southeast Asian and the Great Powers*. Routledge: London.
- Terada, Takashi. 2003. "Constructing an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from EAEC to ASEAN+3" *The Pacific Review* 16:2. pp. 251-277.
- Weatherbee, Donald E. 2009.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The Struggle for Autonomy*.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Lanham.

Abstract

This research surveys ASEAN's collective strategy of survival and foreign polic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lessons for Korea by examining ASEAN's survival strategy. ASEAN has adopted two level strategies for survival since its establishment. On the one hand, it has to manage the relations among its members, which initially had troubled ties with one another. The ASEAN Way(respect for sovereignty, non-intervention, consultation and consensus) has provided a useful order to configure inner ASEAN relations. Externally, ASEAN had to deal with much bigger partners and superpowers such as Soviet, China, the US etc. A careful hedging strategy based on balance of power has been adopted as ASEAN's external strategy to cope with potential pressure from those big powers. Korea's reg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 resembles that of ASEAN. The ASEAN Way may have some hints on how to manage trilater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Facing super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Korea can draw some lesson from ASEAN's hedging strategy. In addition,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ASEAN relations, both parties have to make a joint effort to revive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is beneficial for both Korea and ASEAN.

미얀마와 한국의 상생과 협력

장준영*

1. 시작하며

2006년 태국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완나품(Suvarnabhumi) 신공항을 개장했다. 이보다 앞서 1965년 말라야연방(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뒤 리관유(Lee Kuan Yew) 초대 총리는 싱가포르를 버마와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난한 싱가포르에게 버마는 이상향이었던 셈이다.

시간을 좀 더 과거로 돌리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버마 시절』(Burmese Days)에 묘사된 1920년대 양공(Yangon) 거리는 네온사인이 즐비하고 식민 관리에게만 국한되지만 얼음 공급하는 기계도 있었다. 식민지 경영의 일환이었으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시추를 시작했고, 이라와디 프로틸라(Irrawaddy Flotilla Company, 현재 Five Star Line)라는 해운회사는 에아워디강(또는 이라와디강 Irrawaddy)을 역류하여 중국까지 닿을 수 있었다. 이 선박의 단골고객인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은 선상에서 명작을 남겼다. 비록 인도에 포함된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미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現 한국외대 북벵골만연구사업단 연구교수
前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마는 대영제국의 아시아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개발되었고, 학자들의 훌륭한 연구공간이었으며 중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두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는 미얀마가 자리한다. 1962년 당시 버마는 또 다시 서구 제국주의의 제물이 되지 않겠다는 급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여 국가의 문호를 잠갔다.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적극 반영된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념화했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사회주의를 불교와 융합하는 전대미문의 실험을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버마는 그들이 누려온 국제 물류의 중심지 또는 중간 기착지라는 명성을 포기했다. 역사의 후퇴를 선택한 버마와 달리 태국은 관광산업을 육성했고, 싱가포르를 버마를 대신하여 해상물류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미얀마의 가치는 봉인 해제된 듯하다.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들은 미얀마의 시장 환경을 확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가지고 줄을 서고 있다. 오바마(Bara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양공대학교에서 시작하며 “미국은 태평양국가”라며 자국의 외교정책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세계 패권지형을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 국가의 지정학적 가치는 쉽게 변할 수 없다. 만약 그 국가가 패권국이 되거나 패권국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정학적 가치는 배가될 수 있다.

미얀마가 그러하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빗장을 잠근 탕인지 학자들은 모두 떠났고 이로 인해 미얀마는 미지의 대상이 되어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 미얀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서 왕조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영국이 공을 들여 개발했던 것처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산재하고 그 기회 또한 열려있다.

II. 미얀마의 가치와 오해: ‘미얀마 방식’의 후유증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열강의 아시아 식민개척은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포함하여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단계였다. 영국이 선점한 동남아 서부를 포기하고 프랑스는 메콩강을 역류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예상대로 수급할 자원이 풍족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는 메콩강 뱃길도 험난하여 프랑스는 두 국가에 대한 개발을 등한시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모든 분야에 걸쳐 미얀마를 개발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도로부터 칫띠(chitthi)라는 고리대금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collie, 畜力)를 수용하고 이들 중 일부를 중간관리로 활용했다. 또한 버마족(Burman)이 아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들을 버마족 위에 군림하게 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은 이들에게 참전의 대가로 지키지도 못할 독립을 약속했다. 로힝자족(Rohingya) 문제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미얀마가 국민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근원이 영국 식민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퍼니벌(J.S. Furnivall 1938)은 종족별 집단이 공존하지만 각 종족이 혼합되지 않는 사회구조를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 명명했다.

1948년 미얀마의 독립은 근대국가의 수립보다 식민 시기동안 왜곡되고 뒤틀린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의 시작이었다. 영연방(Commonwealth)로의 편입은 고사하고 근대국가의 제도적 기틀 위에 버마족의 추락한 지위를 복원하고 불교적 전통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1962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실시한 이른바 복지국가론(welfare state, pyidawtha)은 불교도경제(Buddhist economy)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경제의 실험이었다.

소위 ‘버마식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는 복지국가론보다 한층 더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화한 비자본주의로의 노선이었다. 네윈(Ne Win)은 계급투쟁론을 배격하고 그 자리에 성직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불교철학을 대체하고 ‘미얀마적인 것’에 매우 만족했다. 사회주의의 도입과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주의 자체가 미얀마의 지도자에게 혁신이었다. 낫과 망치를 상징하는 사회주의는 미얀마에서 벼와 톱니바퀴로 형상화되었고, 2010년 국기(國旗)가 교체될 때까지 국기의 좌측 상단을 장식했다.

혁명평의회(Revolutionary Council)의 노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얀마는 “버마방식”으로 나아갔다. 일상적 외교관계 이외에 특정국가와 교류에는 소극적이었다. 미얀마를 찾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고, 환승승객은 24시간 내에 미얀마를 떠나게 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존재한다. 국부(國庫)의 국유화로 인해 미얀마는 거대한 암시장으로 전락했고, 군부는 경제발전보다 사회를 억누르며 장기집권의 토대를 쌓았다.

1988년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집권한 신군부는 그들의 선배가 실시한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문호를 개방했다. 소위 1차 개방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반대하는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의 주장에 호응하여 미국은 미얀마 제재(1993)를 시작했고, 유럽연합(1997)도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은 다시 미얀마

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 빈틈은 중국이 채웠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신군부의 경제권 장악 방식으로 1989년 도입된 국영경제기업법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과 퇴역 군인이 중심이 된 군부기업의 이원화이다. 전자는 국영기업이 고부가가치 12개 품목에 한해 직접 사업권을 보유하는데, 그 예로 현재 여카잉 (Rakhine) 해상의 천연가스 시추사업은 한국기업과 미얀마 국영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후자는 군인가족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그 역사가 60년 이상 되었으나 군부집권 시기를 지나면서 군부를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변모하는데 증추적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자동차 수입의 자유화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 기업이 국내 자동차 수입 및 유통을 독점했다. 즉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운용방식은 국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국가와 결탁한 군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군부를 제외한 경제 집단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아직까지 미얀마는 외부 자본의 미얀마 진입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네윈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면서 자본가로서 영국인, 인도인, 중국인 등을 미얀마 땅에서 내쫓았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과 같은 제약을 두어 진입장벽을 높였다. 이 시기 유일한 외국기업은 서독 스크랩 회사인 프리츠-베르너(Fritz-Werner)였다(Steinberg 2010, 116).

2011년부터 미얀마가 개방을 표방하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투어 미얀마로 기수를 돌렸다. 그러나 그 성과는 예상 외로 저조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개방이 성공적이었다면 관료들의 의사결정과 외국기업에 대한 의식구조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이탈해 버린 탓으로 관료들의 행태도 후진적이다. 면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외투법과 달리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인색하고, 미얀마 관료들에 비친 외투기업은 정장을 입은 부자사업가로만 인식한다.

엄격히 말하면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종속되기보다 군부를 포함한 소수의 집단이 지금까지 독점해 왔던 부를 나누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개방을 틈타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정부의 무능력은 미얀마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한국의 글로벌기업이 미얀마 진출에 실패한 2년 뒤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떼잉쎄인(Thein Sein) 대통령은 해당 기업의 재유치를 희망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위와 같은 미얀마 내부 사정을 아는 기업가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미얀마가 개방을 실시한다고 하자 정말 미얀마가 외부의 진출을 전적으로, 그것도 매우 쉽게 허락해 줄 것이라는

편견이 생겨났다. 언론에서는 미얀마를 두고 ‘제 2의 베트남,’ ‘제 2의 중국’이라는 표현도 거침없는데, 이는 외형적인 측면에만 국한된다. 30년 가까이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가두었으니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적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6년 출범한 민간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는 경제발전보다 정전협상의 완성을 통한 국민통합을 국정의 우선 목표로 설정했고, 2016년 7월 12대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가 없다.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없고, 매년 경제성장률도 답보 또는 하락세를 보인다. 그렇지만 몇 가지 희망의 줄기가 보인다.

첫째,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안을 수용하여 국영경제기업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Kyaw Phone Kyaw 2015/2/9). 또한 2011년 이후 경쟁력이 없는 국영기업은 민영화되었고, 일부는 민간에 위탁 경영되고 있다(Kyaw Hsu Mon 2016/3/31). 2016년 초 군부기업은 해체되었고, 이제 이익집단으로서 군부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제도는 사라졌다. 중국기업들이 그러했듯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을 방안도 도입 중에 있다.

둘째, 미얀마와 베트남의 개방 기간을 비교하면 조급증을 버려야 할 것 같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 실패했고,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1986년 도이머이(Doi Moi)를 발표했고, 1995년 미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뒤 외국인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미얀마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며 최소한 상류층에게는 경제난은 심각한 위협이 아니었다. 나아가 2011년 경제개방은 중국에 종속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경제제재의 해제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2000년대 이후 베트남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 사실을 복기하면 미얀마의 개방은 베트남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얀마는 국가 기능의 정상화와 시장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두 과업은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다.

2015년 8월, 미얀마 정부는 9개 외국은행에 한해 지점 설립을 허가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은행들은 허가를 얻는데 실패했다. 3곳이 선정된 일본은 미얀마가 제재를 받던 시기에도 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장기계획 하에 미얀마 진출을 준비했다고 한다(김경환 2015/8/5). 미얀마 정부가 경제특구(SEZ)로서 필라와(Thilawa) 항구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 필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개발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인프라가 완벽한 입지를 원했고,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은 1단계 개발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했고, 2015년 사업을 완료했다. 은행 허가 건을 상기할 때 향후 추가 개발이나 경제특구 운영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국가는 자명하다.

III. 한국과의 협력 방안: 현지화된 지원방식의 필요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관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2012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떼잉썬인 전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공유하는 원조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 미얀마 지원을 본격화했다. 2015년 한국 정부는 미얀마를 중점협력국(Priority Partner Country)으로 선정했고,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증액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지원금액은 1천750만3,000 달러(총 지원금액의 3.9%)로서 6번째 공여국이었던 반면 2006년에는 279만4,000 달러(총 지원금액의 1.6%)로 16위였다(KOICA 2006; KOICA 2016a). 이번이 없는 이상 우리 정부의 미얀마 원조 금액은 늘어날 것이고, 지원 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미얀마에 대한 원조 또한 그러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모체로 하는 가칭 미얀마개발연구원(MDI) 건립 사업(2014-2019, 2천만 달러)과 새마을운동(2014-2019, 2천2백만 달러) 등 두 가지 사례에서 원조 효과성의 문제를 짚어본다.

MDI 건립사업은 거시경제, 산업 및 무역정책, 지역개발, 사회개발, 거버넌스 및 정부 혁신 등 5개 중점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향후 미얀마가 주체적으로 경제개발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초청된 미얀마 공무원들을 KDI School 석·박사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한 뒤 MDI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KOICA 2016b). 타 공여국(기관)에서 미얀마 정부의 요청과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본 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향후 MDI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젊은 학자들이 경직된 관료사회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환경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의사결정 구조는 연령과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하향식(top down)이다. 50명이 채 되지 않는 젊은 학자들이 거시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의 산업화가 중공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미얀마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험이 미얀마에 그대로 복제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은 이전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미얀마 정치지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떼잉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국가발전계획(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의 경우 민간정부 수립 이후 완전히 폐기됐다. 미얀마에 대

한 지원사업의 경우 정치적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강인수 외 2015, 78).

새마을운동은 떼잉쎈인 정부 당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14년부터 수도 네삐도(Naypyidaw) 인근 40개 마을을 중심으로 전국에 100개 시범마을에서 실시 중이다. 필자는 사업이 종료된 양공 외곽 2개 마을과 사업이 실시 중인 네삐도 주변 8개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했다. 후자 지역은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양돈 및 양계사업을 통해 부를 재생산하는 초기 단계로 진입했다.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속단하지만, 전자 두 마을의 경험을 대비시키면 사업의 미래는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인 자립(self reliance)과 자조(self help) 정신에 대한 마을주민의 이해도는 높지 않고, 가끔씩 추진하는 마을 청소나 운동회 등을 강압적인 행사로 평가하는 주민도 있었다. 특히 양공 인근 마을의 경우 새마을운동이 종료된 뒤 한국이 지원하여 건립한 마을회관, 공장, 농기계 등의 활용은 거의 없고 한국이 남기고 간 각종 장비와 시설을 유지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네삐도 인근 마을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관련 언급이 입간판으로 제작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양공 인근 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입간판이 없고, 2014년부터 네삐도 인근 마을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입간판은 한국 국내정치를 염두에 둔 의도에서 전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관련 입간판



이러한 입간판을 전시함으로써 마을주민이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마을에 토착화시키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이 미얀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양곤 인근 마을에서 확인되었듯이 마을주민에게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내부의 사회구조를 단번에 변화시켜야 할 외부의 제도적, 문화적 도전이었다. 나아가 한국에서 파견된 새마을 지도자는 현지 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 없었고, 언어적 문제들도 새마을운동의 현지화에 걸림돌이 되었다(장준영 2017).

두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미얀마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한국방식대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현지사회에 착근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협력의 이론적 연구는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추가의 연구 방안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개발학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와와의 조우가 필요하다. 실제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적 특수성이 적극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는 비단 미얀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공적원조를 실시하는 개도국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은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다.

2011년 이후 미얀마에서 근무할 신입직원을 선발하는 기업에서 미얀마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국내에서 미얀마 전문가를 육성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데, 언어 우수자는 어떻게 수급할 수 있겠는가. 약 20년 전 필자가 미얀마어를 배우기 위해 현지에 있을 때 한 일본인 친구를 만났다. 외무성 직원인 이 친구의 일은 미얀마로 파견되기 전 6개월 간 미얀마어를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학과는 4년제 대학이 146개, 전문대학 86개, 대학원이 70개라고 한다. 베트남 관련학과는 4개이며, 미얀마 관련학과는 단 1개에 불과하다. 한국의 해외지역연구가 대학 학과나 부설 연구소를 통해 진행되는 사실을 참고할 때 미얀마와 같은 신흥시장에 투입할 우수인력의 양성 체계는 기초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가 포함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경험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4대 강국 외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백태인 2017/9/27).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환영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여, 어떠한 노선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정치나 개발경제 또는 개발학 전문가가 ‘아세안 범정부TF(전범팀)’를 구성할 경우 아세안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여기에서 아세안에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도출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담팀에서는 미얀마를 단순히 경제교류의 창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식민시기 영국이 미얀마를 개발했던 이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얀마를 감싸는 이

유를 파악한다면, 이 나라의 가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 수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1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얀마가 중국과 등거리 외교관계로 유지하자 중국은 미얀마와의 전통적 혈연관계를 강조하며 관계 복원에 나섰다. 중국산 진주목걸이전략, 중동산 원유와 미얀마에서 시추되는 천연가스의 안전한 수급, 궁극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협력이 절실하다.

아세안이 출범(1967)할 당시 주도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미얀마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 미국의 경제제재 당시 미얀마 국방부가 펴낸 문서에는 미국의 미얀마 정권 교체 배경에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미얀마가 가장 허약한 지대에 위치한다고 평가한다(Hla Min 1998, 36-37). 이러한 지적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렛대로서 미얀마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아시아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강대국의 그것과 같을 수 없지만, 한국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 이른바 ‘후발국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얀마는 불편한 관계가 없었고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미얀마 내 한류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미얀마 개혁의 배경이 중국 종속화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일본의 대규모 원조가 달갑지 않은 이유도 식민기간(1942-45)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 존재하며, 식민시기 인도인이 행한 경제적 수탈은 여전히 미얀마와 인도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

이에 반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 사람들도 간단한 한국말을 할 정도로 이미 한국은 미얀마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고, 미얀마 학생들의 한국 유학길은 가까운 장래에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발전을 배우려는 관료사회의 자세는 미얀마의 미래를 밝히는 자원이 된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대 미얀마 공적원조는 미얀마의 상황에 맞게 현지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각에서 평가하듯이 우리의 대 동남아 원조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조를 외교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소한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교류를 하지 않도록,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원조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립성을 지키려는 미얀마 외교노선의 특징은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로 유인할 경우 미얀마의 자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친한파(親韓派)를 넘어 지한파(知韓派)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국한된 미얀마 학생들의 전공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얀마 내 2개뿐인 한국어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IV. 맺으며: 양국의 상생을 위하여

2012년 미얀마의 한 주간지에 미얀마 경제의 미래를 두고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이지리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척박한 환경에서 경제발전을 이뤄낸 한국이 될 것인가라는 칼럼이 게재되었다(Rowden 2012/3/30). 양날의 칼과 같은 미얀마의 불안한 미래를 대변하지만 그 잠재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변화가 예고된다. 국가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높은 고용, 공공투자, 국내 생산력 증대, 시민사회 역량의 강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 칼럼은 그간 폐쇄주의로 일관한 미얀마의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미얀마 내 쌓인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미얀마의 경제발전은 정치발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지 않는 이상 정치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미얀마의 발전 잠재력은 농후하고, 이제 그들이 국제사회에 손을 뻗어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백기투항이 아닌 그들만의 방식에 대한 고수는 보는 각도에 따라 자존심으로 또는 특정 계층의 이익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명백한 사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얀마가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전통이라는 인습과 적폐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미얀마와 상생과 협력을 위해 조급증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미얀마를 이해하고 접근할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해야겠다. 한 정부 관료는 필자에게 한국 기업인을 가리켜 "NATO"(Not Action Talk Only) 또는 "4L"(Listen, Look, Leave, and Lesson)이라고 평가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미얀마에 진출하려했던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우리는 일본의 미얀마 진출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협업은 정보 생산과 공유를 통해 환류체계로 나아가야하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 하 중장기적 진출 전략을 필요로 한다. 미얀마 속담에서 이르기를 "방금 판 우물에는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단 시일에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또는 진출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미얀마 정부가 요구하는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진출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공적개발원조를 한국기업의 진출과 외교자원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동반자이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친구이다.

참고문헌

- 강인수, 장준영. Daw Cho Cho Thein. 2015.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환. “韓은행이 미얀마서 탈락한 속사정.” 『머니투데이』 2015/8/5.
- 박태인.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 총괄 정부TF 만든다.” 『매일경제』 2017/9/27.
- 장준영. “한국의 대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과 개선 방안: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4권 제3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06. 『2006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http://www.koica.go.kr/>>
- _____. 2016a.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http://www.koica.go.kr/>>
- _____. 2016b. “미얀마 경제·사회를 이끌어 갈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수립.”
<<http://blog.naver.com/prkoica/220713094054>>
- Furnivall, J. S. 1938.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Economy of Burma. Rangoon: Burma Book Club.
- Hla Min. 1998. Political Situation of the Myanmar and its Role in the Region. Yangon: Ministry of Defence.
- Kyaw Phone Kyaw. “State-owned Economics Enterprises Ripe for Reform.” Myanmar Times. 2015/2/9.
- Kyaw Hsu Mon. “Military-Linked UMEHL Transitions Into Public Company.” The Irrawaddy. 2016/3/31.
- Rowden. Rick. “Myanmar’s Economic Future: South Korea or Nigeria?” Myanmar Times. 2012/3/30.
- Steinberg, David I. 2010. Burma/Myanm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 장준영 역. 2011. 『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들』. 서울: 높이깊이.

Abstract

Strategy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Korea and Myanmar

Jang, Jun Young(HUF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Korea and Myanmar.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of Myanmar in 2011, Myanmar was not only the best model country to transit from dictatorship, but became a last economic frontier in Asia. Though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including Korea tried to enter Myanmar market it was not successful owing to not understand vernacular trait concerning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also did not fully recognize Myanmar's potential for the sake of taking her national and diplomatic interests.

Korea needs a new approach with own specific way to Myanmar, which could find in the cultural intimacy called Hanryu(Korean Wave) an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the economic companies enduring mid-long term entrance strategy. In field of scholarship, we need to rise up Myanmar specialists in the university level who could support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in the near future.

Keywords: Korea, Myanmar, Economic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iplomacy.

베트남 경제의 생존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

정재원*

베트남의 부상

도이머이(Doi Moi, 刷新)를 통해 개혁·개방을 추진한 베트남이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도입 이후 지난 30년 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중소득국 그룹에 진입하였고 산업구조도 농업 중심에서 탈피하고 있다. 캐슈넛, 후추, 코코넛, 카사바, 커피원두, 쌀, 고무, 새우, 차(tea) 등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생산 및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베트남은 또한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17년 현재 베트남은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대상국, 투자에서 5위 대상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서 최대 지원대상국이다. 베트남 측에서 보면 한국은 최대 투자국이자 3대 교역국이며, 최대 ODA 지원국 중 하나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6,000개가 넘어설 정도이며, 12만 명이 넘는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남방외교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베트남 경제의 생존전략을 도이머이를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前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비롯하여 중장기 및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전략 1: 도이머이와 중장기개발전략

도이머이(Doi Moi, 刷新)

1986년 도이머이를 도입하기 직전 베트남 경제는 재정적자 누증, 수백 %에 이르는 초인플레이션 빈발, 환율 급등 및 암시장 확대,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 급감과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 등으로 피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붕괴위기가 고조되었다. 더구나 대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붕괴와 구소련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 추진, 동남아(ASEAN)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개방에 따른 주변국과의 개발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베트남을 중소득국으로 이끈 도이머이는 이러한 시점에 국내 경제정책 실패와 피해에 대한 자성과 비판,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극, 최고지도자의 각성과 지도 등에 의해 채택되었다(정재완 2017).

베트남 생존전략의 근간인 도이머이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날까지 그 기초가 이어지고 있다. 첫째, 국가의 거시경제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분권화를 추진한다. 거시경제관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개입을 점차 축소하고 재정과 금융 분리,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경제효율화를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산업정책과 경제개발 전략에 있어서 농업의 발전, 소비재 생산 확대 및 수출품의 개발과 품질 향상 등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 및 투자 구조를 재조정한다. 개혁 이전에는 사회주의 공업화노선에 따라 중공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개혁 이후에는 안정적인 균형성장전략을 펴겠다는 의미이다. 농업 및 경공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기반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셋째,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집단기업과 사기업 등이 공존하는 다부문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영형태를 국영, 집단경영, 공사합영, 자본주의적 합영, 개인경영 등 5개로 구분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국영 부문, 협동조합 부문, 사경제 부문으로 분리한다. 넷째,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체제를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로 전환한다.

도이머이를 추진하면서 베트남은 점진주의(Gradualism)적 개혁·개방방식을 채택하였고 다양한

국가의 경제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 경제 및 통상정책은 일본, 산업 및 대기업 정책은 한국, 국영기업 개혁은 싱가포르 등을 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재완 2017). 도이머이를 통해 베트남은 30여 년간 고성장을 지속하여 2008년 중소득국 그룹에 진입하였고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아세안, 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대한 가입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세계경제로 빠르게 편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개년⁽²⁰¹¹⁻²⁰²⁰⁾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베트남은 도이머이의 기초를 바탕으로 장기 생존전략인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이하 SEDS 2011-2020)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장기 전략인 SEDS 2011-2020은 베트남을 2020년까지 정치·사회적 안정, 생활수준 개선, 국제 지위향상 등에 기반을 둔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SEDS 2011-2020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인적자원의 형성, 인프라 확충이라는 3대 전략적 돌파구를 선정하였고 또 성장 모델의 혁신도 추구하였다(坂田正三 2016). 특히 그동안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본 투입형 경제성장모델을 탈피하고 기술인재의 육성과 첨단기술 등의 고부가가치분야 산업의 발전을 축으로 하는 성장모델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SEDS 2011-2020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주요 부문별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정재완 외 2011). 이 중 경제 분야는 연평균 7~8% 경제성장, 2010년 대비 경제규모 2.2배 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3,200 달러 달성 등의 세부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목표치 이외에도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목표치도 제시하였는데, GDP에서의 2-3차 산업 비중 85%, GDP에서의 첨단산업(High-Tech) 비중 45%, 총 산업생산량에서의 제조업 비중 40%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회문화 부문에서 선정한 목표치로는 인구증가율 연평균 1.1% 유지, 기대수명 75세, 환자 1만 명 당 의사 9명 및 병상 26석, 숙련인력 비중 70%, 직업훈련 55%, 2010년 대비 실질임금 3.5배 증가 등이 있다. 환경부문에서는 녹지비율 45%, 안전한 수도공급시설 마련, 사업체별 폐기물 처리시설 마련(신규 100%, 기존 80%까지 확대),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지역 하수처리 시설 마련, 표준 폐기물 처리의무(일반폐기물 95%, 유해폐기물 85%, 의료폐기물 100%) 등의 다양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SEDS 2011-2020은 베트남의 국가경영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도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SEDS 2011-2020에서 제시된 발전방향보다 단기적이며 구체적인 개발전략은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통해 알 수 있다.

5개년(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베트남은 장기 SEDS 2011-2020을 기반으로 중기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이하 SEDP 2016-2020)을 수립했다.

SEDP 2016-2020의 주요 목표는 △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 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 국가안전 보장, △ 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및 현대적 공업국으로의 도약 등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지난 5년(2011~2015)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 수출 확대 및 교역 촉진, 도소매 유통망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강화, 농업 부문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부문별 세부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의 5개년(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경제	2016~2020년 연평균 GDP 성장률	6.5~7%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GDP 대비 공업, 서비스 부문 비중	85%
	총 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	32~34%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4%
	개발 및 투자	GDP 대비 32~34%
사회	연간 노동생산성	5%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40%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이하
	2020년 도시화 비율	38~40%
	의료보험 가입 인구 비율	80%
	빈곤가정 비율	연간 1~1.5% 감소
환경	정수(淨水) 사용 인구 비율	도심지역 95%, 비도심 지역 90%
	삼림피복률	42%

자료: 베트남 정부.

생존전략 II: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별 육성전략

산업육성전략

베트남은 SEDS 2011-2020을 바탕으로 산업개발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IDS) 2011-2020을 수립하였다. 산업개발전략(IDS)도 SEDS나 SEDP와 유사하게 산업의 질적인 성장,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기본목표로 하며, 산업부문의 성장 및 구조 개선에 대한 개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산업개발전략(IDS)은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와 과제해결을 위한 정부 및 국영기업들의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핵심 산업 및 수출산업 개발, 현대화 가속화, 기술 혁신, 농촌 개발, 민간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베트남 산업계가 직면한 다수 당면과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주요 당면과제 추진을 위해서 베트남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조율하는 것으로, 주요 산업육성전략 수립 및 추진, 국영기업의 투자, R&D 지원, FDI 유치, 수출 촉진 및 수출상품 수준 향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개발전략(IDS) 2011-2020은 주요 산업별로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체 산업을 경쟁우위산업 그룹(Competitive Advantage Industry Group), 기간산업 그룹(Basis Industry Group), 잠재산업 그룹(Potential Industry Group)으로 구분해 그룹별로 차별화된 육성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쟁우위산업 그룹은 농수산업, 식가공업, 섬유·의류·신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비롯해 조선, 기계 등의 중공업 및 전자, 오토바이 등 베트남 정부가 집중 지원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려는 산업이다. 기간산업 그룹은 산업기반을 형성하는 부문으로 인프라, 에너지, 화학, 기계 등으로 구성된다. 잠재산업 그룹은 전자, ICT, 첨단기계, 의약품 등 현재 베트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향후 산업발전의 지향점으로 채택해야 할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4년 총리령(Decision 880/QĐ-TTg)을 통해 기존 IDS 2011-2020을 수정한 '2025년을 향한 산업개발 전략 및 마스터 플랜과 2030년 비전(Strategy and master plan of Vietnam' industrial development to 2025, with a vision to 2030)'을 발표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산업 현대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개발을 위해 국내 경제와 외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산업 부문의 숙련되고 규율 있고 혁신적인 인력 육성, 첨단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산업을 집중 육성기로 했다. 총리령(880/QĐ-TTg)에서 선정한 11개 중점 육성산업은 다음과 같다.

- 기계금속산업
- 화학산업
- 전자와 정보기술
- 섬유·의류, 가죽·신발
- 임업, 수산, 식품, 음료 가공업
- 건설자재 제조업
- 광업 및 광물가공
- 전력
- 석탄산업
- 석유와 가스
-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지원산업 육성

베트남은 다국적기업의 단순 하청기지가 아닌 경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부자재와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2014년 말 통상산업부는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의 지원산업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과 2030년까지의 비전(the master plan for supporting industrial development by 2020 with a vision to 2030, Decision No. 9028/QĐ-BCT)’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원산업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기계금속, 컴퓨터·전자, 섬유·가죽·신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8개 그룹의 상품개발팀(Product team)을 구성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립장비용 세부세트: 표준장비(Standard equipment), 와이어, 볼트, 너트, 시스템컨트롤러, 복합산업컴퓨터(Sharing industrial computer)
- ② 무버(Movers), 회전기(Rotating machine), 전정기(Static electricity), 디젤·가솔린 및 기타 구동악세서리 (actuator accessory)
- ③ 운송수단용 장비 및 예비(spare) 부품
- ④ 농가공, 임업, 수산업용 장비 및 예비 부품
- ⑤ 자동차 부품
- ⑥ 산업용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솔루션서비스, 디자인, 물류, 인프라,

품질보증, 유지보수 제공

⑦ 전자 부품

⑧ 섬유, 신발 원자재

이와 함께 베트남은 지원산업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10개 성(省)에 지원산업단지(Supporting industry zones)를 설립하기로 했다. 개발 예정지는 하노이(Hanoi), 빈푹(Vinh Phuc), 박닌(Bac Ninh), 흥옌(Hung Yen), 하이퐁(Hai Phong), 동나이(Dong Nai), 바리어 붕따우(Ba Ria Vung-Tau), 빈중(Binh Duong), 락닌(Tay Ninh), 다낭(Da Nang) 등이다.

자동차산업

개혁·개방 이후 중고차 수입 금지, 관세율 조정, 세제 조정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자동차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베트남은 2014년에 실질적인 자동차산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 및 부품분야 행동계획도 수립하였다(정재완·신민규 2017). 이는 자동차산업이 종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쟁력이 주요 아세안 국가에 비해 많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에 의해 2018년부터 아세안 역내로부터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것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보인다.

총리령(1168/2014/QĐ-TTg)인 ‘2025년까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35년까지의 비전 (Strategy to develop automotive industry in Vietnam by 2025, orientation towards 2035)’는 베트남이 자동차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우위에 있는 차종에 대해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수출에도 적극 참여하며, 이를 통해 여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의 자동차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략과 비전의 구체적인 주요 목표는 [표 2]와 같다.

〈표 2〉 베트남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비전(1168/QD-TTg)의 주요 목표

구분	차종	2020년	2025년	2035년
자동차 생산(대)	승용차	114,000	237,900	852,600
	버스	14,200	29,100	84,400
	트럭	97,690	197,000	587,900
	특수차량	1,340	2,400	6,500
	합계	227,500	466,400	1,531,400
내수용 국산차 비율(%)	승용차	60	65	75
	버스	90	92	94
	트럭	78	78	82
	특수차량	15	18	23
	합계	67	70	78
자동차 수출(대)	승용차	5,000	15,000	50,000
	버스	5,000	7,000	15,000
	트럭	10,000	15,000	25,000
	합계	20,000	37,000	90,000
국내제조가공액 비율(%)	승용차	30~40	40~45	55~60
	버스	35~45	50~60	75~80
	트럭	30~40	45~55	70~75
	특수차량	25~35	40~45	60~70

자료: Prime Minister of Vietnam(2014b)을 토대로 작성.

이와 함께 베트남은 2013년에 완성한 공업화전략 우선 추진 6개 업종 중 유일하게 ‘자동차 및 부품분야 행동계획(Decision No: 1829/2015/QĐ-TTg)’을 수립하였다(정재완·신민금 2017). 이 계획은 ATIGA에 의해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2018년 이후의 제조·조립 공장 유지 및 국내에서의 가치 창출, 국내 자동차시장의 건전한 성장, 자동차 지원(supporting)산업 육성, 제조와 물류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 인하, 경쟁력을 활용한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가, 국제협약 준수 등을 목표로 작성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수수료의 장기적 운용,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 삭감, 국내생산 지원책 마련, 주요 지원산업 육성분야 지정, 인재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5년 11월과 2016년 2월에도 각각 자동차관련 지원산업 육성과 우선 개발차종 선정·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원산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111/2015/ND-CP)은 자동차 제조·조립을 포함한 6개 분야에 대한 R&D 비용 일부 지원, 설비투자비나 시험제작비용

지원(최대 50%)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 대상 분야로는 엔진과 부품, 냉각부품, 연료공급 시스템, 서스펜션 등이 거론되고 있다(Fourin 2017). 자동차산업발전계획지원정책에 관한 총리결정문(229/2016/QĐ-TTg)에 의하면, 베트남은 배기량 1.5ℓ 이하 및 9인승 이하인 저연비저비용의 소형차, 3t 이하의 상업용 소형 다목적트럭, 농업용 작업차, 근·중거리 버스 등을 우선 차종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산할 완성차업체(5만 대 이상 생산능력 보유)와 중요 부품(엔진과 변속기 등)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Fourin 2017).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술, 생산,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일례로 세계노동기구(ILO)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베트남 노동시장은 섬유·의류와 가죽·제화업종에서 86%, 전자부문에서 75%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백용훈 2017).

베트남도 이러한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베트남 총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발전방안에 관한 지시문(Directive 16/2017/CT-TTg)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베트남은 ①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 혁신, ②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발전 촉진, ③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④ 스마트 거버넌스 개발, 디지털기술 산업 발전, 지능형 농업과 관광 및 스마트시티 개발, ⑤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⑥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방법 모색 등에 주력하고 있다(백용훈 2017).

베트남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 즉 스타트업(start-up) 활동이 활발하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의하면, 베트남의 스타트업 수는 2016년 현재 1,500개에 달하는데, 스타트업 수/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나 인도를 앞설 만큼 활발하다(신선영 2017). 베트남 정부 역시 ‘베트남 실리콘밸리(Vietnam Silicon Valley, 2013년)’, ‘2025년까지의 국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계획(Decision 844/2016/QĐ-TTg)’, ‘2016년 국가 창업의 해’ 지정 등을 통해 자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중 금액 비중으로 가장 활발한 분야는 핀테크(FinTech)이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현금이 가장 활발한 결제수단이고 이러한 기조는 금융인프라의 부족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핀테크 역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

베트남이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글로벌 신흥시장이자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파트너로 부상한 만큼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특히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베트남은 증가하는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와 G2(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다. 아울러 잠재성장이 점차 낮아지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수시장의 확대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트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은 지속성장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함정 극복, 높아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과의 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양국간 협력이 어느 일방의 주도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상생(win-win)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이 지속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베트남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사회에서 2·3차 산업 사회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베트남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길은 베트남이 주변 동남아 국가들처럼 중소기업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을 도와주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베트남의 생존전략을 적극 고려함과 동시에 베트남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로는 기초소재 및 부품산업 절대 부족, 대표 제조업 부재, 금융 및 자본시장 미발달,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 노동생산성 부족, 국영기업 개혁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경험 등을 토대로 제조업의 원천인 기초 소재 및 부품 산업, 종합산업인 자동차산업, 경제의 혈액이자 신경망인 금융 산업 및 자본시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베트남 역시 최근 FDI(2016년 현재 베트남 수출의 71.6%와 수입의 59.0%를 FDI가 담당) 및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수출의 12.4%와 수입의 28.7%를 중국이 담당)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T 및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핀테크,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꼽는 스마트시티도 상호 협력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백용훈. 2017. 「4차 산업혁명과 베트남」. 『EMERICs 이슈분석』 경제 2017-43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 정재완. 2017. 『베트남 경제 세미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정재완·신민금. 2017. 「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자동차시장의 최근 변화와 전망」. KIEP
- 정재완·이재호·권경덕. 2011. 『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KIE P·kotra.
- 신선영. 2017. 「베트남 스타트업 동향(1): 성장 시동 건 베트남 스타트업」. KOTRA 현지시장정보(4. 25).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2014. 2014a. 「Decision No. 9028/QĐ-BCT dated October 08, 2014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pproving the master plan for supporting industrial development by 2020 with a vision to 2030」.
- Prime Minister of Vietnam. 2014a. 「Decision 880/QĐ-TTg of the Prime Minister approving the strategy and master plan of Vietnam' industrial development to 2025, with a vision to 2030」.
- Prime Minister of Vietnam. 2014b. 「Decision No: 1168/2014/QĐ-TTg on approval for strategy to develop automotive industry in Vietnam by 2025, orientation towards 2035」.
- Fourin. 2017. 『ASEAN自動車産業 2017』. 名古屋.
- 坂田正三. 2016. 「ベトナム共産党第12回党大会：2016-2020年の経済政策の方向性」. IDE-JETRO.

Abstract

Strategy for the Survival of the Vietnamese Economy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s Cooperation

Jaewan CHEONG

Princip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Vietnam has not only grown to become a global emerging market with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6.6 percent since 1986 when it introduced Doi Moi, it also recently emerged as Korea's largest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Vietnam's typical survival strategies include DoI MoI, the base of reform and opening, long-term growth strategy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and mid-term development plan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In addition, Vietnam established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to maintain its growth momentum, and has recently been focusing on supporting and parts industries, the automotive industry, the fourth industry, and so on.

Korea should expand and deepen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Vietnam to reduce growing China Risk and its dependence on the G2 and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based on a win-win and focus on Vietnam's survival strategy, especially in upgrading its industrial structure, solving pending issues and preparing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

정재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준비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정확한 개념 정립이나 국가별 사용 용어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파급 효과나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IT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ICT를 전략적 원동력(strategic enabler)으로 삼는 성장전략을 1980년대부터 추진해왔다. 국가전산화계획(National Computerization Plan, 1981~85), 국가 IT 계획(National IT Plan, 1986~91), 정보기술 2000(Information Technology 2000, 1992~99) 등이 그것이다. 특히 IT 2000의 일환으로 추진된 Singapore ONE은 싱가포르 전체를 광대역(broadband) 네트워크로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前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결된 지식기반경제(KBE)의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전략적인 이니셔티브였다(정재원 2001).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구축 전략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1(ICT 21, 2000-03)’과 ‘정보화 국가 2015(iN 2015: Intelligent Nation 2015, 2005-2014)’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iN 2015를 통해 싱가포르를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를 보다 혁신적이고 첨단적이며 지능적인 국가로 변화하고자 하였다(Telecoms Infotech Forum 2007).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즉 스마트국가 이니셔티브(Smart Nation Initiative)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또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고용 창출,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강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생존전략으로서 Smart Nation Initiative를 살펴보고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Smart Nation Initiative의 주요 내용과 특징, 중점 추진 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Smart Nation Initiative의 주요 내용과 특징

Smart Nation Initiative 주요 내용과 추진 체계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2014년 11월 4차 산업혁명전략으로 Smart Nation Initiative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를 건설하고 네트워크화(networked computerization)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총리는 스마트국가(Smart Nation)를 “국민들이 의미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고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두가 신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 센서 네트워크(networks of sensors)와 스마트 기기(smart devices)를 이용해 지속가능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열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국가”로 정의하였다(조충제 외 2017).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Initiative를 구성하는 핵심 동력(enabler)으로는 스마트 솔루션 촉진, 실험문화 육성 및 지속적인 혁신 추진, 컴퓨터 활용역량 구축 등이 있다(Smart Nation Singapore 홈페이지). 스마트 솔루션 촉진에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을 이용한 의료솔루션 등이, 실험문화 육성 및 지속적인 혁신 추진에는 빅데이터 공유, 생활연구소(living laboratory) 구축, 스타트업(startup) 생태계(ecosystem) 구축 등이, 컴퓨터 활용역량 구축에는 교육과 훈련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가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분야(domains)로는 이동성(mobility), 주거 및 환경(home & environment), 보건 및 고령화(health & enabled aging), 비즈니스 생산성(business productivity), 공공부문서비스(public sector services) 등이 있다. 특히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R&D 지원을 위한 생활연구소로서 시험장(test-bed)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은 총리실이 직접 지휘하며, 실제 관리와 조정은 2017년 5월 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스마트국가·디지털정부그룹(SNDGG)이 담당한다. SNDGG는 관리기구인 스마트국가·디지털정부사무국(SNDGO)과 시행기관인 국가기술청(GovTech)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과 솔루션은 스마트국가플랫폼(SNP)과 GovTech가 제공한다. Smart Nation Initiative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과 과학기술연구청(A*STAR: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이 있다. 총리실 산하의 NRF는 국가 R&D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연구인재를 육성해 R&D 능력을 향상하며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기관이다(NRF 홈페이지). 통상산업부 산하의 A*STAR는 미션 지향적인 연구(mission-oriented research) 수행, 장학제도를 통한 산업계의 인재 양성과 지도자 육성 지원, 연구 커뮤니티 구축 등을 주도하는 대규모 연구기관으로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 및 글로벌 경쟁력 보유 기업과의 협력 확대, 현지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R&D 기반 스타트업(R&D-driven Start-up)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A*STAR 홈페이지).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싱가포르의 특징은 조총재 외 2017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첫째, 총리와 총리실이 직접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뿐만 아니라 조직 설립과 운영, 예산 지원, 방향 정립, 세부 사업 수립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는 톱다운(top-down)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전체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생활실험실이자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가진 장점과 한계점에다가 전통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총괄본부(RHQ)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실험중인 주룽호수지구(Jurong Lake District)는 Smart Nation Initiative의 성공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선 사업으로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스마트국가 구축을

위해 먼저 센서 구축, 연결성 확대, 빅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술과 솔루션 개발에 현지 R&D 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자원인 빅데이터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를 최적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게 함과 동시에 동아시아나 유럽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해외 연계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는 기술 이전과 상업화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인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본질과 고용 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생 교육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곱째,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첨단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와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0 Plan)’에 잘 나와 있다.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6대 첨단기술(빅데이터 및 분석, IoT, 미래 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지컴퓨팅/첨단 로봇공학, 실감미디어)을 선정하고 전략적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까지의 국가 R&D 지원예산의 38%인 73억 싱가포르달러(약 53억 달러)를 보건·바이오메디컬 분야와 첨단제조업·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6).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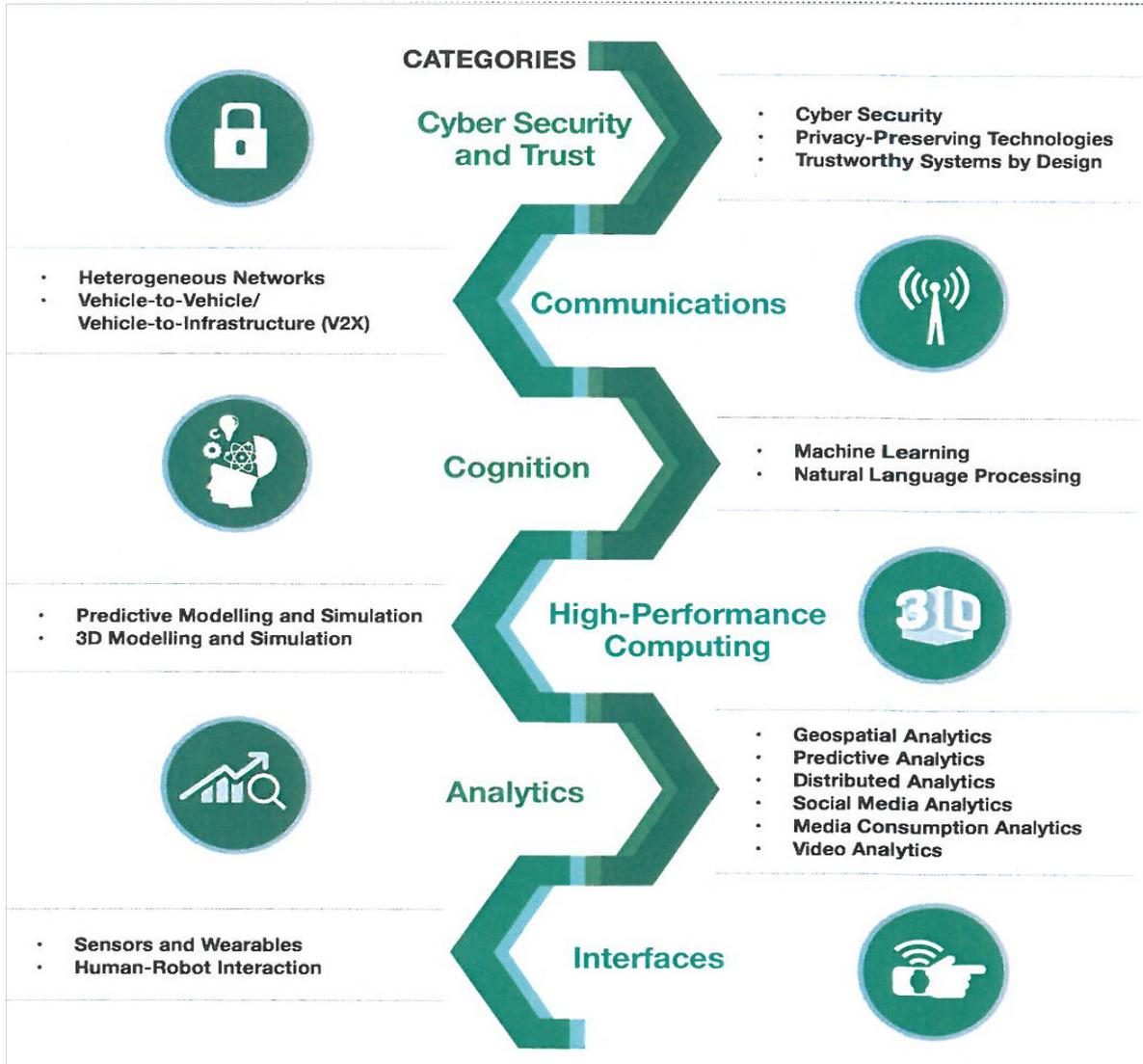
첨단제조업 육성

싱가포르는 국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항상 20%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4차 산업혁명전략에도 녹아들어 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으로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를 발표하였다. Infocomm Media 2025는 Smart Nation Initiative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화 정책의 구체적 전략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도 평가된다(高野結衣 2017). Infocomm Media 2025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솔루션 개발의 기본이 되는 6대 첨단기술로 빅데이터 및 분석(Big Data & Analytics), 사물인터넷(IoT), 미래 통신기술,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인지컴퓨팅/첨단 로봇공학(Cognitive Computing/Advanced Robotics), 실감미디어(Immersive Media)를 선정하고 있다(MCI 2015). 이와 함께 국가적 R&D

투자가 우선 필요한 교차횡단적기술(cross-cutting technology)로 사이버 안보 및 신뢰(Cyber security and trust), 통신, 인지(cognition), 고성능 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분석학(analytics), 인터페이스(interface)를 들고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Infocomm Media 2025를 위한 국가적 R&D가 필요한 교차횡단적기술



자료: MCI(2015).

Smart Nation을 준비하는 국가 R&D 전략이자 투자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첨단제조업에 대한 투자이다. RIE 2020 Plan은 2020년까지 싱가포르가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전략적 기술 분야로 첨단 제조업·엔지니어링(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보건·바이오메디컬 과학

(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 서비스·디지털 경제(Services and Digital Economy), 도시 솔루션·지속성(Urban Solutions and Sustainability)과 이 4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분야, 즉 학술연구, 인적자원, 혁신·기업을 선정하였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6). 이 중 첨단제조업 분야인 보건·바이오메디컬 과학과 첨단 제조업·엔지니어링 분야에 각각 전체 R&D(약 140억 달러)의 21%와 17%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선정한 업종 8개와 이들 업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교차횡단적기술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첨단 제조업·엔지니어링 대상 핵심 업종 및 교차횡단적기술

핵심 업종	교차횡단적기술
항공우주- 해양(marine & offshore) 전자- 정밀 모듈 및 부품 화학- 생물학 및 의약제조 기계 및 시스템- 의료기술 제조	로봇공학과 자동화 디지털제조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첨단소재

자료: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홈페이지, 재인용: 조충제 외(2017).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세계적인 금융 및 외환센터인 싱가포르는 금융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핀테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금융업의 생산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아세안(ASEAN)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자국을 스마트금융센터(Smart Financial Centre)이자 글로벌 핀테크허브(Global FinTech Hub)로 성장시키고자하며, 특히 자국을 유럽의 핀테크 천국인 영국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핀테크 천국으로 만들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금융업과 IT 기술의 융합을 추진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5년 수립한 ‘정보화 국가 2015(iN 2015)’이다. Smart Nation Initiative의 원조 격인 ‘iN 2015’는 싱가포르의 미래 ICT 성장전략 중 하나로 핀테크를 선정하고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싱가포르는 ‘iN 2015’를 통해 건전한 규제와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도약할 것을 주장하며, 추진전략으로 금융서비스 관문(gateway) 육성(안전한 핀테크 비즈니스 환경 구축, 첨단 핀테크 서비스 도입 및 안착 등), ICT 혁신센터 육성, 차세대 결제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금융보안원 2016).

싱가포르는 2015년 6월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금융분야기술혁

신(FSTI: Financial Sector Technology & Innovation) 정책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였다. FSTI는 싱가포르에 R&D나 혁신 허브를 설치하는 금융기관 유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금융기관 지원, 새롭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tephen SOH 2015). 먼저 싱가포르는 정부부처에 핀테크혁신 그룹(FTIG: FinTech & Innovation Group)을 조직해 결제기술솔루션, 기술인프라, 기술혁신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API 공개·지원, 생태계 구축,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운영, 정책개발 등을 FTIG를 통해 지원하였다. 싱가포르는 2016년에는 핀테크 관련한 창업과 멘토링의 원스톱서비스를 담당하는 핀테크오피스(FinTech Office)를 조직하였고, 이보다 앞선 2015년에는 업계 상호간의 정보 공유, 결속, 이익 대변 등을 위해 핀테크 컨소시엄(FinTech Consortium)도 조직하였다(표 2 참고). 핀테크 컨소시엄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핀테크 지원 플랫폼, 오프라인 핀테크 지원 플랫폼, 인큐베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금융보안원 2016).

〈표 2〉 싱가포르의 FinTech 추진 관련 조직

분야	규제 및 정책	창업/멘토링 원스톱 서비스	기업 결속/이익대변
명칭	핀테크혁신그룹(FTIG)	핀테크오피스 (FinTech Office)	핀테크 컨소시엄 (FinTech Consortium)
형태	정부부처(정부)	가상조직(정부운영)	포럼(민간)
설립일	2015. 7	2016. 5	2015
주요 역할	API 공개·지원 생태계 구축 규제 개선 정책 개발 규제샌드박스 운영	창업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 컨설팅 교육, 인증, 장비지원 등	정보 공유 홍보 3대 핀테크 플랫폼 제공 사업 컨설팅 등

자료: 금융보안원(2016)을 토대로 수정.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핀테크 허브로 평가받는 영국의 앞선 기술력과 지식을 전수받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과 2016년에 FinTech Bridge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홍보, 투자 유치, 핀테크산업의 생태계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 등을 위해 아시아에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Singapore FinTech Festival을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관련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 진출도 활발하다. 비자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위해 2016년 Visa Innovation Centre를 개설하였고 IBM은 인지컴퓨팅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Block-chain Innovation

Centre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기업 R&D 센터 유치 및 자국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싱가포르의 다국적기업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Initiative 추진을 통해 확보하는 빅데이터를 공유(수집+공개)해 국가 전체를 다국적 기업의 R&D를 위한 실험실(laboratory)과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있다(조충제 외 2017). 2017년 현재 싱가포르에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거점을 구축한 다국적 기업이 상당히 많다(표 3 참고).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는 공공 R&D 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첨단제조분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설립된 첨단재생산기술센터(ARTC)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롤스로이스(Rolls-Royce)와 지멘스(SIEMENS) 등을 비롯한 50여개 다국적기업이 싱가포르로 진출하였다.

〈표 3〉 4차 산업혁명 관련 싱가포르에 R&D 거점을 설립한 다국적기업

기업	설립 내용	기업	설립 내용
A-DOC	Asia Digital Operations Center	dyson	Dyson Singapore Technology Center
Schneider Electric	Software Industry Solution Center(Software Regional Hub)	SIEMENS	Siemens Digital Manufacturing Design Consultancy
ASP	Innovation Center Singapore	DHL	Asia-Pacific Innovation Center/Advanced Regional Center
NEC	IoT Analytical Team	Mercedes Applied Technologies	IoT Development Center
accenture IoT	IoT Center of Excellence	SAP	Global Innovation Center for Machine Learning
TUV SUD	Global IoT Digital Service Center of Excellence	MANN+HUMMEL	Global IoT Lab
横河電機	Global IoT Innovation Center	Rockwell Automation	Global Integration Management & Information of Excellence
Emerson Electric	Global Pervasive Sensing & Analytical Manufacturing Center	McLaren	Development Centre
Rolls-Royce	Advanced Technology Centre	ABB	Regional Robotics Packaging Application Hub
UNIVERSAL ROBOTS	Applications Laboratory	YOKOGAWA	Co-Innovation Centre

자료: 조충제 외(2017).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유치한 다

국적 기업의 R&D와 자국 기업을 연계해 제3국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의 공공 R&D 기관, 특히 과학기술연구청(A*STAR) 산하 많은 연구 기관과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의 참여도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협력모델이 제공되고 있다.

인재 양성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국내에서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유치하는 전략을 상당히 일찍부터 추진하였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21세기 들어서는 과학기술연구청(A*STAR)과 국가연구재단(NRF) 주도로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에 달려있음을 인지한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Initiative의 3대 핵심동력인 컴퓨터 활용역량 구축을 위해 어린이에 대한 기술교육부터 학생에 대한 코딩 및 컴퓨팅 사고 교육, 학교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 직장인의 기술습득 및 평생학습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조총제 외 2017). 특히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의 본질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2015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학업 유무나 수준과 관계없이 평생 동안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SkillsFutur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SkillsFuture 홈페이지). 이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모토로 하는 국가적 운동으로, 주로 단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운동이자 국가차원의 미래지향적 일자리혁신운동이라 할 수 있다(조총제 외 2017). SkillsFuture 프로그램에는 학생, 직장 초년생(early career), 중년 직장인(mid-career)과 고용주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스마트국가와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본이 되는 첨단기술 분야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68년부터 운영해오던 공학계열 인재양성을 위한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싱가포르의 5개 폴리테크닉(Nanyang, Ngee Ann, Republic, Singapore, Temasek)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일부를 독일 중소기업에 보내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Dual Industry Sponsorship Pioneer Programme이다. POLY-GOES-UAS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독일 중소·중견기업은 대부분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국가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전략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전략 수립, 정책과 제도 구축, 생태계 구축, R&D 지원, 인재 양성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바, 이제 준비단계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최적의 4차 산업혁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가 가지는 장점 및 한계 상황과 한국이 보유한 강점 및 취약점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데이터와 핵심기반인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생활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를 국내외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첨단제조업기술 개발을 위해 R&D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기에 한국 정부와 민간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생활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R&D 허브 전략을 활용해 싱가포르는 물론 주변 동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싱가포르 공공 R&D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첨단기술지식을 축적함은 물론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제3국 공동진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싱가포르 핀테크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분야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이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인재 양성 및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금융보안원. 2016. 「싱가포르의 핀테크 추진 현황」.

정재완. 20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2017(근간).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KIEP.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MCI). 2015. “Infocomm Media 2025”. Singapor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6.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0 Plan: Winning the Future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Singapore.

Stephen SOH. 2015. “MAS Paves the Way for FinTech Innovation with SGD 225 Million Scheme”. CNPupdate Issue 04. Colin Ng & Partners LLP.

Telecoms Infotech Forum. 2007. “Singapore’s Broadband Future: the iN2015 Initiative”. Briefing paper. Singapore.

高野結衣. 2017. 「ASEANのICT／デジタル化戦略: 求められる長期的視点, 戦略的取り組み」.
『成長市場ASEANをいかに攻略するか: 多様性と変化をもたらす事業機会を探る』. 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東京.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홈페이지(<https://www.a-star.edu.sg>).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홈페이지(<https://www.nrf.gov.sg>).

Smart Nation Singapore 홈페이지(<https://www.smartnation.sg>).

SkillsFuture 홈페이지(<http://www.skillsfuture.sg>).

Abstract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ingapor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s Cooperation

Jaewan CHEONG

Princip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ingapore announced the Smart Nation Initiative as part of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4th IR) strategy in 2014 and has declared that it will develop itself into the world's first Smart Nation by 2025 while improving its networked computerization capabilities. Singapore's 4th IR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government and the top leaders are leading the way; using the entire country as a living-lab and test-bed by utilizing the most of strengths and opportunities of country; to build infrastructure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real life and business in advance;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collecting big data that is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and sharing it as much as possible;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y and overseas expansion; investing much money and time to nurture and attract a talent;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fostering the high-tech industry as well a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 particular, Singapore stressed fostering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nurturing FinTech industries, attracting multinational corporate R&D centers, expanding overseas joint ventures with local companies and nurturing human resources to the success of the 4th IR.

Korea is also watching the 4th IR as a new momentum for innovative growth. In this regard, the Singapore's 4th IR strategy has given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of all, now in the run-up stage, Korea needs to benchmark Singapore, which is known for its world-class strategy and preparation in terms of 4th IR. Next, we need to exp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4th IR based on Singapore's strengths and limitations, and Korea's strengths and weaknesses.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ailand and South Korea

Kiattipoom Kiatkawsin*

Thailand 4.0

Towards the end of 2016, news has surfac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of Thailand led by the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was ready to propose a new economic model that aims to propel Thailand towards an advanced economy country. January 1st, 2017, the official plan was formally announced to the public. This new economic model coined the term “Thailand 4.0.” This new development model illustrates the government’s vision to push Thailand into a high-income country. Nevertheless, Thailand 4.0 has received its fair share of criticism from both the public and the experts since the announcement. However, it is worth keeping in mind the general aim and direction the government has with its economy. Any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Thailand and other countries may want to align with this general direction. Thailand 4.0 also give a good fundamental knowledg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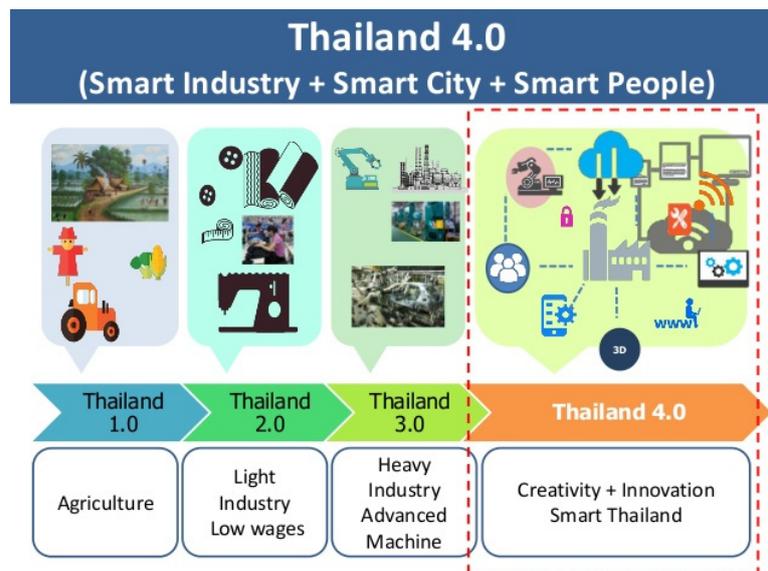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現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조교수
前 스위스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Institute 연구교수

Thailand's economic history and current states of the various industries in the country. Therefore, this report would first explain the Thailand 4.0 vision, then give detailed report and analysis of each sector. Lastl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s, cooperation opportunities between Thailand and South Korea will be discussed.

Thailand 1.0 to 3.0

Thailand 1.0 was an agriculture-based economy, emphasis was placed on different sectors of agriculture. Then, in the second phase, Thailand 2.0, lightweight industries helped to shift the economy from low-income to middle-income status. Lightweight industries include textiles and handicraft productions that involve low initial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Thailand evolved into an industrialized economy^(Thailand 3.0) relatively quickly. During this period, the country enjoyed a healthy growth in industrialization with automotive manufacturing and continued growth in agricultural product exports. Tourism has also been leading the way regarding international awareness and recognition. Though the economy has been growing during this phase, the country has not been able to break away and moved its status into an advanced economy. The country has become stuck in the middle-income trap and faces disparities and imbalanced development. Larger cities have seen healthier growth than the rural areas,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widened considerably. Experts said Thailand has been in this phase for the last 30 years. Other countries that were identified to be in the same developmental stage as Thailand at the start of the industrialized period^(Thailand 3.0) has graduated to developed economies since 1997, according to the IMF. These countries include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and Taiwan.



Thailand 3.0 trap

H.E. Dr. Somkid Jatusripitak, the deputy prime minister, gave a keynote speech at the Digital Thailand Big Bang 2017 Conference and explained the underlying structural imbalance of the current economic performance. Dr. Jatusripitak revealed that the month of August 2017, exports grew over 13%, the most significant monthly increase in the last five years. Nevertheless, when compared to the 18%-20% growth Thailand was experiencing in the early 2000s, there is not much to celebrate. Furthermore, the reasons for the sluggish growth in exports was believed to be be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explained by the popular media outlets. However, Dr. Jatusripitak elaborated that when breaking the numbers down, the problematic reality is revealed. For example, the largest issue that has plagued the economy has been the imbalance among all people in the country. While the GDP number has been going up, over 30 million Thais or close to half of the entire population contribute to only about 10% of the whole nation's GDP. Due to this, the general public may still feel that the economy has been stagnating despite the growing GDP number. This implies that large private companies are growing. Thus, growth has not been shared equally to all income level. Yet, he refused to point fingers at any government for

this imbalance issue. Instead, insisting that it is a flaw of the underlying economic structure that has never truly been addressed by any government.

The majority of these 30 million people are living on growing rice and harvesting rubber without any real advancements to help with productivity or adding value to the products. Therefore, the premise of Thailand 4.0 is designed to bring knowledge,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to these struggling farmers among others. The lack of knowledge has largely explained the resistant to change or improvements in their farming processes. One of Thailand 4.0 aims is to educate the community leaders, giving them training on experimental research, bookkeeping, and processing these raw commodities into desirable products, and e-commerce. At the same time, manufacturing plants and factories have been losing its competitiveness to other countries. Two reason that explained this phenomenon, the first one is due to the rise in labor costs in Thailand, this is where countries with lower wages have been able to lure companies away from Thailand. At the same time, it is because Thailand did not innovate and improve at the same rate as the global trends. Therefore, manufacturing has been stuck with low skill products.

Thailand has been ignoring the ri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digital products in the last few decades. The consequence of that can be seen today. Malaysia held conferences and announced their development direction regarding the digital technology over 20 years ago. This lack of attention to the digital world has affected not only the farmers but also the middle-class. Until today, e-commerce has mainly been non-existence in the country. Farmers still have the same agriculture knowledge and know-how as 30 years ago, despite many new discoveries to improve productivity. Dr. Jarusripitak also believes the lack of digital infrastructure and awareness in Thailand is the main reason for the severe imbala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us, this inequality hinders the long-term development.

Thailand 4.0 development vision

Escaping the middle-income trap has not been easy, and the government is expecting

several challenges along the way. The prime minister admits that Thailand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the digital technology later than it should have to compare to other competing countries. Nevertheless, he believes the nation possesses enough qualified workforce to catch up with this global trend. The innovative and smart Thailand is not as simple as giving internet connectivity to people in the rural areas but establishing data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each cluster of industries. Dr. Jarusripitak stressed that income imbalance is not the cause but a consequent.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inequality in Thailand stemmed from the unequal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opportunities. For example, the education system, there is a lack of databases that provide high quality as well as up-to-date lessons and knowledge that teachers and students in a rural village can access as quickly and easily as those in Bangkok. Such databases should also exist to aid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Farmers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newest innovations and methods in agricultural production from other regions of the country and from around the world. Same with healthcare, rural residents should have access to healthcare knowledge from the best doctors in the best hospitals as easily as those in large cities. Digital technologies should be able to help bridge this information and knowledge gap, thus,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is long-term vision of Thailand 4.0 has taken inspirations from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In Germany, the digital technologies helped launched the ‘digital industry 4.0’ framework to enhance the manufacturing processes. This has helped manufacturers to optimize their production chain and eventually increase productivity. This was achieved by using advanced sensors and robotic technologies. In Japan, president Abe has taken the digital technology to the next level by introducing ‘connected industry 5.0.’ Aim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by not just automating processes within a manufacturing plant but across the entire value-chain, and across multiple countries and branches of the operation. Japan has focused 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to help achieve this aim. A delegate from Japan gave a keynote on connected industry 5.0 to the Thai delegates and stressed the need for Thai companies to integrate data systems into the systems to efficiently trade with Japan. For example, Thai

manufacturing partners need to implement a system that allows total connectedness all the way to the headquarters in Japan and other suppliers to monitor and help optimize or solve issue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aking these inspirations and implement to the domestic industries, Dr. Jarusripitak suggested a plan to introduce center of excellence for each industry. A center of excellence would include private companies of various sizes,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education/research institutes. Within these center, information, data, and knowledge can be shared and learned from. Within these centers, the flow of big data would play a prominent role. Therefor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big data analytics should be developed among Thai companies and public offices. Ultimately, each center could produce new innovations to help improve the entire industry to another level. Furthermore, data that are being generated by both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offices should be accumulated and analysis not just for optimization but also to find linkages between all parties involved. The gathering of big data is only the first step, the next stage is to transfer these big data into open data. Open data that is readily available to other centers and more importantly the general public. Such wealth of information can not only help realize the dream of connected industries like in Japan but help solve the largest barrier to development, corruption. Once information and data become open, transparency naturally would follow, leaving littl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s.

Thailand 4.0 strategic plan 2017–2036

Since the announcement the Thailand 4.0 vision, there has been a stream of criticism from experts and the public. The criticisms have largely caused by the lack of strategies and policies by the government to help achieve the vision. Therefore, throughout 2017, many branches of the government have introduced concrete plans to the public. First, the development period has been set to 20 years, starting from 2017 until 2036.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vision, Thailand 4.0 has been viewed as a long-term goal. There will be

smaller development plans publish every four years as well. One policy that has caused a mixed reaction was that Thailand 4.0 would be included in the general secondary school education syllabus. This policy was introduced and will be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 the aim to first induce awareness of this vision. Furthermore, three criteria to measure the success of Thailand 4.0 were set, they are inclusive, productive, and sustainability.

Inclusive refers to a country where there is no parity between its people. Everyone is of equal status, income,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This criterion was designed to eliminate the imbalance of knowledge, opportunities, and eventually income. In other words,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plan believes that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of an inclusive countr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need to be strong and competitive. There should not be a few large conglomerates that control the entire industry but many SMEs that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each industries. Promoting SMEs means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any start-ups to thrive, thus, giving opportunities for anyone to start a company, bringing new ideas to the industry. Banks can play a major role in providing financial aids to SMEs operators. At the same time, data and information databases can help level up the advantages normally held by large companies. Still, sharing data among all enterprises may be not only beneficial to SMEs but also to large cooperates.

The second criterion is productive, it refers to how each industry or clusters need to improve productivity and add value. For example, a typical agricultural product such as rice, the growing harvesting process would need to be improved. There has not been a substantial improvement regarding rice outputs in the last few decades, rice farmers have not been exposed to any new technologies such as agricultural machines. Therefore, total rice production per area has been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new innovations to help improve the value of rice. Thailand still only export raw rice grains today as they used to decades ago. Ready-to-eat rice packages such as those readily available in South Korea can be sold for a higher value than in raw grain form. New ideas and innovative products can help

rejuvenate existing industries. If Thailand can achieve a higher level of productivity and have innovations of its own, it would allow the economy to be self-sustainable and would rely less on foreign investments and companies. Ultimately, stronger productivity could lead to a stronger internal economy and help get Thailand out of the middle-income status.

The last criterion is sustainability, it refers to how Thailand needs to reach its development goal sustainably. The primary focus on sustainability is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Using the same rice production, with more efficient production methods and innovations, farmers could reach higher output while using less wate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can be used in energy-intensive manufacturing process. Given that Thailand has reliable sunshine throughout the year, solar energy may be of advantage. Development without sacrificing the well-being of the environment not only be advantages for Thailand but helps align the country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concerns. Thus, Thailand should also be a good citizen of the world at large.

Having established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ailand 4.0, this should gi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ituation of Thailand and its economy as a whole. With a brief background on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 Thai economy, it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future directions of the country and the various sectors. Thailand 4.0 focuses 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which South Korea is known to have broad experience and knowledge o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ailand 4.0 master plan, the government has created a Ministry for Digital Economy and Society, highlighting the effort and dedication it is investing in promoting the digital economy. Therefore, at large, there should be ample of opportunities for future collabor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sections, opportunities for specific industries will be discussed.

Potential cooperation opportunities

Tourism – tourism receipt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2% of the GDP, world's average is around 9%. Thus, tourism is a crucial sector for the Thai economy. Korean travelers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international arrivals to Thailand and Korea

has also been a favorite outbound destination for Thai tourists. The popularity of K-Pop culture and visa-free entry to Korea for Thai passport holder should be a major contribution to this trend. Thus, Thai tourists in Korea is mostly confined to Seoul, opportunities for growth can rest on promoting attraction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Skiing has been the first attractions outside of Seoul for the mass market. Thai retailers can benefit from in-city and online duty-free shopping such as those found in Korea. Hence, a possibility to adopt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ravelers' duty-free shopping experience.

Agriculture – this is still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overall GDP and remain the world's largest rice exporter. Rubber, tropical fruits, and coconut products^(coconut milk, coconut oil, etc.) are among the top agricultural products. Coffee has started to gain larger and more significant market share. Mainly due to the trends in coffee drinking abroad and within Thailand. Given that Thailand is a large producer of rice, there are still no domestically produced harvesting machinery with many rice farmers still relies on human labor to transplant crops. The agriculture commercial vehicles and machinery market is dominated by Japanese manufacturers, with Korea having its own brands in this space. There may be room for the trade of this kind. Moreover, aligning with Thailand 4.0 and the emphasis on knowledge sharing, Korea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could help improve production and open new trade aven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ministries responsible for agriculture from Thailand and Korea has recently signed an MOU to share knowledge and technology in both agriculture and livestock production.

Manufacturing – Thailand is the largest automotive manufacturer in the South-East Asia subregion. Even though, Thailand does not have its own brand. Textiles manufacturing has been a prominent employer for the country previously. However, due to other countries offering lower wages, many companies have moved production away from Thailand in the last decade. While car manufacturing plants require substantial investments and relatively skilled labors and engineers, therefore, Thailand has still been able to retain many businesses. In early 2017, the Korean government signed an MOU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ai SMEs to help promote opportunities with Thai SMEs while also share production technology. However, the main opportunities have been on cosmetic and microchip

productions. With the growing global demand for electronic microprocessors and other chips, Thailand could present an alternative manufacturing partner for Korean companies. Thai SMEs could also exchange cosmetic production with Korean companies.

Energy – Thailand has yet to make any necessary step in investing in clean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Hence, this may be one of the largest potential for Korean companies to partner with Thai companies. The opportunities here can involve in the manufacturing of sustainable energy parts, and sell renewable technologies to Thai users and businesses. In a conference on “Thailand’s Investment Opportunities on Alternative Energy” held in Seoul and hosted by BIO and the ASEAN-Korea Center^(AKC), 13 Korean companies presented technologies an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s in alternative energy. During the conference, Thai SMEs, the government, and other private companies had the opportunities to exchange knowledge and network for potential future cooperation.

National defense –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ailand and South Korea stretches back over 60 years ago during the Korea War.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exchanges in terms of military training and others. Compared to South Korea, Thailand’s defense budget is relatively small. However, since the current prime minister took office, defense spending grew rapidly. Military spending in the last couple of years has mostly been on upgrading existing fleet and equipment. Traditionally, Thailand’s defense technologies have been bought from the USA, however, the latest rounds of purchases have been from China. However, Thailand still holds a close tie to South Korea when it comes to training and education of army personnel.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Thai forces generally operate on their own with little involvement with the public. There are many military-run universities and institutes, defense/military studies are not found at regular universities in the country.

Recommended further reading;

<http://pubdocs.worldbank.org/en/823661503543356520/Thailand-Economic-Monitor-August-2017.pdf>

UNINOMIC REVIEW

Vol. 1 No. 1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중

배기형

이덕로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소 | 알래스카 인디고(주)

전화 | 02-2277-5553

인쇄일 | 2018년 7월

발행일 | 2018년 7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